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임.
-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이행계획(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향후 개선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요 약 문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 및 평가

- 84개의 지표 중 중립적인 지표 8개를 제외하고 76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52개 (68%)의 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24개의 지표 (32%)는 악화된 추세로 나타남.
- 국가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개선과 악화의 의미가 분명한 지표 65개를 선정하여 추세를 분석하고 OECD 평균과의 비교 결과를 검토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OECD 평균과 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38개이었는데,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12개 (32.4%) 지표는 평균을 상회하고, 25개 (67.6%) 지표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평균치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 지니계수 제외)
- 지표 추세 및 OECD와의 비교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65개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추세가 악화된 지표 22개와 지표의 추세는 개선되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18개를 합해 40개 (61.5%)의 지표를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표 1〉 OECD 평균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진단

지표추세	지표의 분류	지표의 비율	종합 진단 결과	
개선	SD 개선 & OECD 대비 양호	6개 (9.2%)	양호	25개 (38.5%)
	SD 개선 & OECD 지표 없음	19개 (29.2%)		
	SD 개선 & OECD 대비 취약	18개 (27.7%)	취약	40개 (61.5%)
악화	SD 악화 & OECD 대비 양호	6개 (9.2%)		
	SD 악화 & OECD 지표 없음	9개 (13.8%)		
	SD 악화 & OECD 대비 취약	7개 (10.8%)		

- 가장 취약한 지표는 추세가 악화하면서 동시에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지표로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관리직 여성비율, 대기오염도, 농지면적비율,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7개의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표의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나 관련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정부의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지표의 추세가 긍정적이면서 OECD 평균 대비 양호한 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 영아사망률, 기대여명, 고등학교 순졸업률, 경제성장률, GDP 대비 R&D지출 비율의 6개 지표로서 노동소득분배율과 GDP 대비 R&D지출 비율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큰 의미는 없음.

■ 사회·환경·경제 분야별 지속가능성 진단

- 사회분야는 32개의 지표 중 중립지표 4개를 제외한 28개 지표를 평가하였는데 사회분야 28개 지표 중 21개(75%)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임. 경제분야는 중립적인 지표 2개를 제외하고 추세분석이 가능한 23개 지표 중 17개 (81%)가 개선되어 개선된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환경분야는 중립 지표를 제외한 27개 지표 중 14개 (52%)가 긍정적인 반면 13개 지표 (48%)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사회, 경제, 환경의 세 분야 중 개선도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임.
- 세 분야 중 환경분야에서 개선된 지표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환경에 대한 비용을 외부화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세먼지 등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제·사회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이행계획 추진 현황

- 목표별 달성도 평균은 통합된 안심 사회가 83.5%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포용적 혁신경제(77.9%), 건강한 국토환경(71.2%), 글로벌 책임국가(70.0%)의 순으로 높은 달성도를 보였음.
- 반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달성도를 보인 것은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66.2%)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1〉 목표별 달성도 평균 (단위: %)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효과성

- 이행과제는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성과지표는 여전히 투입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 투입보다는 투입의 결과, 나아가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 아울러, 일부 이행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신 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남북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 전체 성과지표 달성도('20년 목표) 평균은 77.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며, 이미 202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한 지표들도 112개 중 32개로 전체의 28.6%를 차지함.
- 적극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 지표들 중 상당수가 투입 중심의 지표이거나, 기존의 추세를 감안할 때 무리 없이 달성이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함.
- 목표달성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적극적인 달성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스트레치 타겟(Stretch Target) 목표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지표 평가로 보는 한국 지속가능발전 현황

○ SDSN 보고서: SDG 지표와 대시보드 평가

-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는 매년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2018년에는 156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SDG Index 평가 결과 총점 77.4점으로 19위를 차지하였음.
- 대시보드 평가에서는 17개 목표의 달성 정도를 네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최상위 등급을 나타내는 녹색 등급을 받은 목표는 없었음.
- 반면 '5. 성 평등', '13. 기후행동', '17. 파트너십'은 최하위 등급인 적색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차상위 등급인 황색으로 평가된 목표는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4. 교육의 질', '8. 일자리와 경제성장',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였음.

○ OECD Better Life Index 비교 평가

- OECD Better Life Index는 ① 소득과 부 ② 일자리와 수입 ③ 주거 ④ 일과 삶의 균형 ⑤ 건강 상태 ⑥ 교육과 기술 ⑦ 사회적 연결 ⑧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⑨ 환경의 질 ⑩ 개인적 안전 ⑪ 주관적 웰빙 등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됨.
-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결,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육은 대체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연구의 한계 및 국가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안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적절성 검토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정책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임.

- 현재의 지표는 2015년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변경, 수정된 것인데 시설 설치나 성과가 축적되면서 자연스레 개선 추세를 보이거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들이 다수 있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p5 참조)
- 새로 수립되는 K-SDGs는 UNSDGs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도 17개의 목표별로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지표체계를 가지고 운영될 것임.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작성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향후 K-SDGs 수립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체계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임.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목표치 설정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는 일부 지표에만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어 지속가능성 평가의 수단인 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이나 계획들을 참고하여 32개 지표의 목표치를 수집하였는데 정책과 계획들의 수립년도와 목표년도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목표의 적절성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음.
- 목표의 설정과 검증은 향후 K-SDGs 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 이해당사자, 일반 국민 등과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인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 모든 지표의 목표 설정은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중요한 지표를 기준으로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 이행과제와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 기존의 이행과제는 행정편의상 달성하기 쉬운 과제들로 수립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도 단순한 실적지표나 투입지표인 경우가 많아 향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제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실천에 대한 UN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요구, 우리나라의 현황, 최고 리더십의 국정철학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목차

I. 총평	3
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 및 평가	5
2. 사회·환경·경제 분야별 진단	11
3.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진단 기능 평가	15
4.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17
5.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와 추진체계 재정립	20
II.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21
· 사회분야 지표 평가	23
· 환경분야 지표 평가	59
· 경제분야 지표 평가	91
III.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	117
1. 제 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개요	119
2.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이행평가 결과	122
3. 총평	153
IV. UNSDGs 별 국내 이행 진단	163
V. 국제지표 평가로 보는 한국 지속가능발전 현황	203
1. OECD 지표에 의한 비교 평가	205
2. SDSN 보고서: SDG 지표와 대시보드 평가	207
3. OECD Better Life Index 비교 평가	212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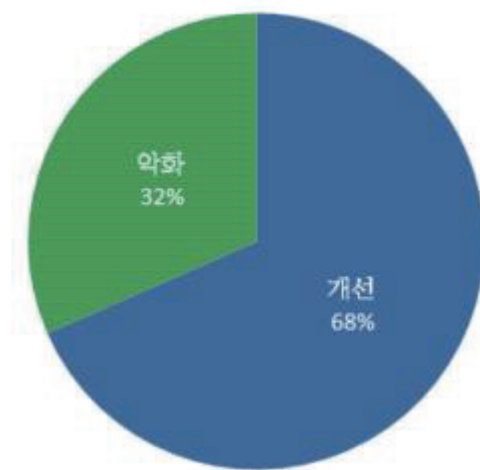
총 평



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 및 평가

■ 지속가능발전 추세 분석

- 84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하였음.
-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는 2012년 대비 2016년의 데이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84개의 지표 중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고령화비율이나 멸종위기 종 수,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소비자물가지수, 조세부담률과 같이 지표의 평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7개의 지표와 2015년에 통계산출방법이 달라진 유소년전염병 예방주사 등 총 8개의 지표를 제외하고 76개 지표의 추세를 분석함.
- 76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52개 (68%)의 지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24개의 지표 (32%)는 악화된 추세로 나타남. (〈그림 1-1〉, 〈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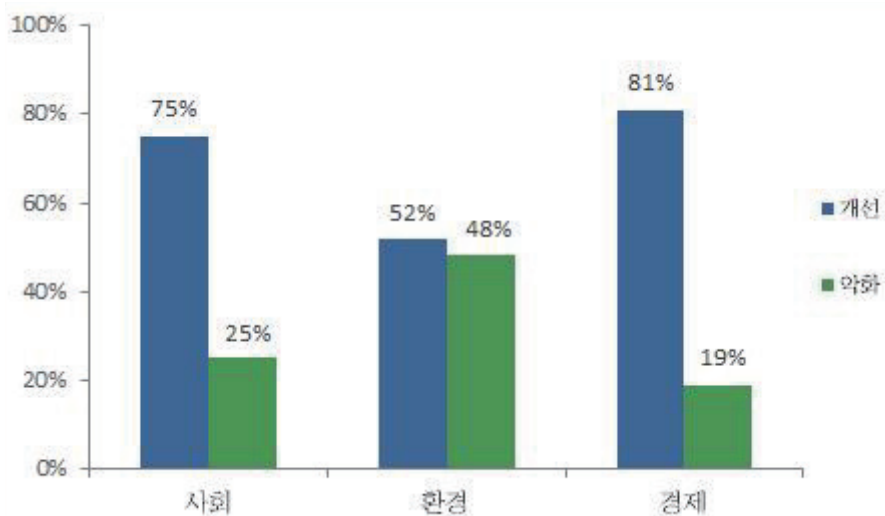
〈그림 1-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 분야별로 보면 사회분야는 32개의 지표 중 중립지표 4개를 제외한 28개 지표를 평가하였는데 사회분야 28개 지표 중 21개(75%)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임. 경제분야는 중립적인 지표 2개를 제외하고 추세분석이 가능한 23개 지표 중 17개 (81%)가 개선되어 지속가능성이 가장 진전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환경분야는 중립 지표를 제외한 27개 지표 중 14개 (52%)가 긍정적인 반면 13개 지표 (48%)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사회, 경제, 환경의 세 분야 중 가장 지속가능성이 낮은 결과를 보임.(〈그림 1-2〉)
- 그러나 개선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들 중에는 시설 설치에 따라 자연히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자전거도로 총연장 등)나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온라인 인터넷 가입자 수 등), 또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 (기대여명,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등) 들도 다수 있어 개선된 지표의 비율만큼 국가 지속가능성이 개선되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움.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본다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환경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됨. 나아가 단순히 세 분야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진보하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경제발전,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사회와 경제의 발전이라는 강한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본다면 개선 추세를 나타낸 환경지표의 개선 비율 52% 정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개선도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개선된 환경지표 중 일부가 환경의 질 개선보다는 자원 관리(국가생물종 목록 수, 주요 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등)나 보호구역의 면적(해양보호구역 면적, 자연보호지역 비율 등) 등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하는 환경분야의 질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세 분야 중 환경분야에서 개선된 지표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환경에 대한 비용을 외부화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세먼지 등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제·사회정책 및 계획이 수립·집행되어야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1-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사회	환경	경제	합계
개선	21 (75%)	14 (52%)	17 (81%)	52(68%)
악화	7 (25%)	13 (48%)	4 (19%)	24(32%)
중립	4	2	2	8
합계	32	29	23	84



〈그림 1-2〉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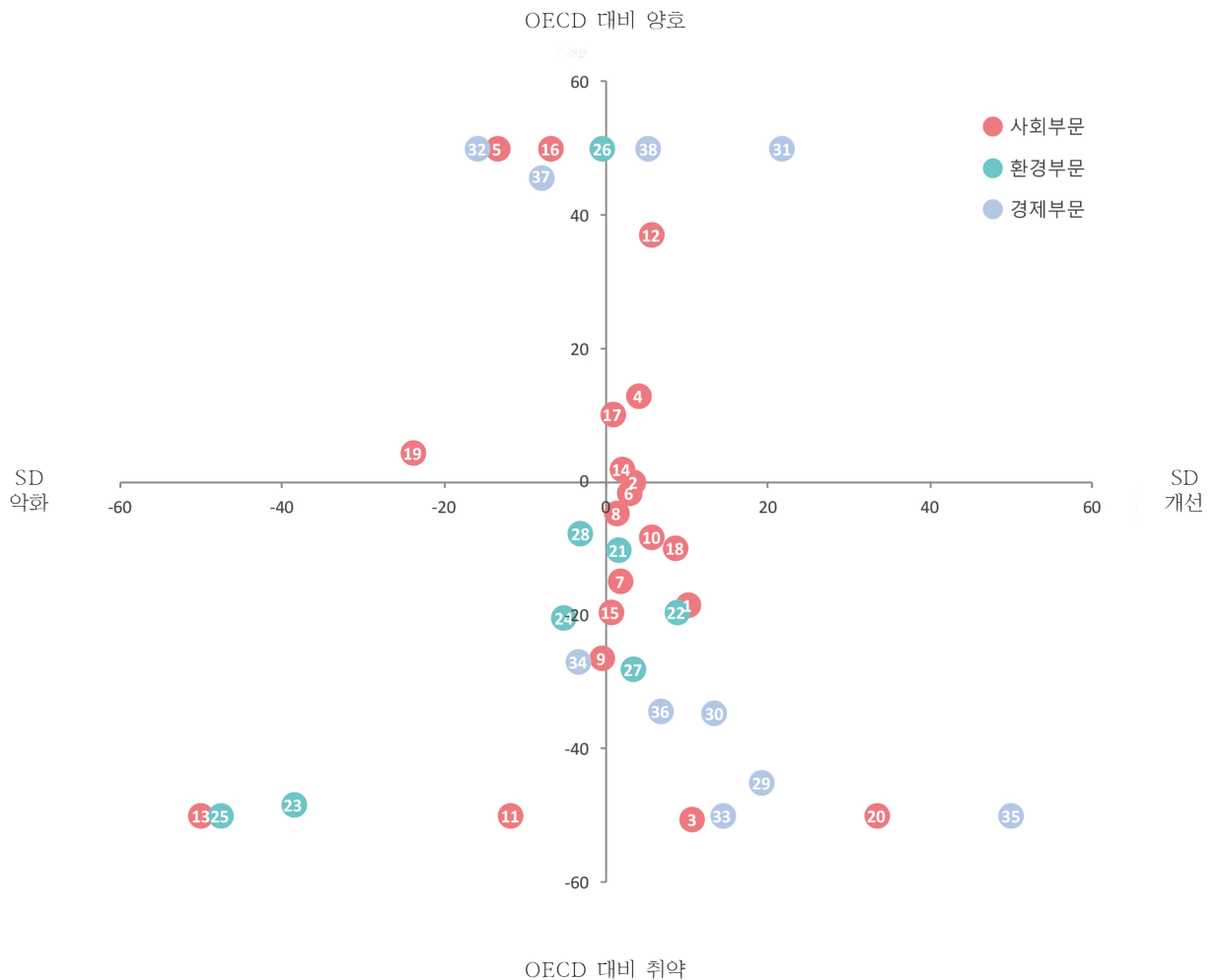
■ OECD 지표에 의한 비교 평가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OECD 평균과 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38개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2개 지표는 양호(32.4%), 25개 (67.6%)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치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 지니계수 제외)
- 한편 38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추세 분석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 지표는 24개였으나, 이 중 18개가 OECD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개선된 지표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2>, <표 1-3>, <그림 1-3>)

<표 1-2>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와 OECD 평균과의 대비

	SD 개선	SD 악화	합 계
OECD 대비 양호	6개 지표	6개 지표	12개 지표
OECD 대비 취약	18개 지표	7개 지표	25개 지표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는 OECD 평균과 동일하며, SD지표는 개선추세를 보임.



<그림 1-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도 및 OECD 평균과의 비교 (단위: %)
 주) 가로축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선/악화(%) 정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양호 내지는 취약한 수준(%)을 나타냄

〈표 1-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도 및 OECD 평균과의 비교 (단위: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OECD대비 (%)	SD지표 개선율 (%)
01) 빈곤인구 비율(%)	-18.4	10.0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0	3.3
03) 사회복지 지출(%)	-50.5	10.6
04) 노동소득분배율(%)	13.0	3.9
05) 실업률(%)	71.1	-13.5
06) 고용률(%)	-1.5	2.8
07) 근로시간(시간)	-14.8	1.7
08) 비정규직 비율	-4.7	1.2
09)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26.3	-0.6
10)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8.2	5.6
11) 관리직 여성비율(%)	-66.3	-11.8
12) 영아 사망률(명/천명)	37.0	5.5
13) 자살 사망률(%)	-58.8	9.8
14) 기대수명(세)	1.9	1.9
15)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9.6	0.5
16) 비만율(%)	266.0	-6.9
17) 고등학교 순 졸업률(%)	10.2	0.7
1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9.8	8.5
19)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4.5	-23.9
20)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50.0	33.3
21)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톤)	-10.1	1.5
22)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천\$당kg, 천)	-19.5	8.6
23) 대기오염도(PM2.5)($\mu\text{g}/\text{m}^3$)	-48.3	-38.7
24) 농지면적 비율(%)	-20.4	-5.2
25)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58.0	-47.7
26)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102.2	-0.5
27) 취수량 (m^3 , 백만)	-28.0	3.3
28) 1인당 1일 물소비량(L/인)(사용량기준)	-7.6	-3.2
29) 국내총생산(GDP(억US\$))	-44.9	19.2
30) 1인당 GDP(명목, PPP)(\$)	-34.5	13.4
31) 경제성장률(%)	55.6	21.7
32)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3.7	-15.9
33) GNI대비 ODA 비율(%)	-50.0	14.3
34)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인)	-27.0	-3.5
35)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82.5	50.0
36) 에너지 원단위 (toe/천\$)	-34.3	6.7
37) 1인당 도시 폐기물 발생량 (kg)	45.8	-8.0
38) GDP 대비 R&D 지출비율(%)	76.7	5.2

■ 지표 추세와 OECD 평균 대비 결과에 의한 국가지속가능성의 해석

- 국가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추세 분석과 함께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극히 일부의 지표만 달성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수치와 OECD 회원국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지속가능성 진단의 객관성을 보완하였음.
- 국가지속가능성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중립적 성격의 지표 8개와 시설 설치에 따라 자연히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자전거도로 총연장 등)나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온라인 인터넷 가입자 수 등), 또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들을 제외하고 총 65개의 지표를 활용하였음.
- 진단에 사용된 65개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보면 43개는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22개 지표는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한편 65개의 지표 중 37개는 OECD의 데이터가 있고, 28개는 OECD 데이터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65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그 추세와 OECD 평균치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표 1-4>와 같이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추세가 악화된 지표 22개와 지표의 추세는 개선되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18개를 합해 총 40개 (61.5%)의 지표에 대해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1-4> OECD 평균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진단

지표 추세	지표의 특징	지표의 비율	종합 진단 결과	
개선	SD 개선 & OECD 대비 양호	6개 (9.2%)	양호	25개 (38.5%)
	SD 개선 & OECD 지표 없음	19개 (29.2%)		
	SD 개선 & OECD 대비 취약	18개 (27.7%)	취약	40개 (61.5%)
악화	SD 악화 & OECD 대비 양호	6개 (9.2%)		
	SD 악화 & OECD 지표 없음	9개 (13.8%)		
	SD 악화 & OECD 대비 취약	7개 (10.8%)		

- 가장 취약한 지표는 추세가 악화됐으면서 동시에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지표로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관리직 여성비율, 대기오염도, 농지면적비율,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7개의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표의 개선을 위해 이행계획이나 관련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진행중인 K-SDGs 수립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목표치가 설정된다면 앞으로 지표의 추세 분석과 목표치 달성도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5〉 연도별 추세 및 OECD와의 비교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류

	SD 개선	비율	SD 악화	비율
OECD 대비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소득분배율 영아 사망률 기대여명 고등학교 순졸업률 경제성장률 GDP 대비 R&D 지출비율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6개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률 비만율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1인당 도시 폐기물 발생량 	6개 9.2%
SD 지표 추세 (OECD 지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유소년 영양상태 자연재해 피해 사고(성)사망인율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재벌채 정도 해양보호구역 면적 주요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4대강 수질오염도 자연보호지역 비율 경제성장률 GDP 대비 순 투자율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무역수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19개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범죄발생률 온실가스 배출량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연안오염도 갯벌면적 증감 물 재이용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9개 13.8%
OECD 대비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인구 비율 사회복지 지출 고용률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살 사망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취수량 국내총생산 1인당 GDP GNI대비 ODA 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에너지 원단위 	18개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관리직 여성비율 대기오염도 농지면적 비율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7개 10.8%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는 OECD 평균과 동일하며, SD지표는 개선추세를 보임.

2. 사회·환경·경제 분야별 진단

■ 사회 분야

- 32개의 사회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판단을 유보한 4개의 중립적인 지표를 제외하고 28개의 지표를 평가함
- 28개 지표 중 21개 (75%)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7개 (25%)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개선되는 추세임 (<표 1-6>)
- 빈곤인구비율,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 노동소득분배율과 고용률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반면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 등 성 평 등 관련 지표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범죄발생률 등은 악화되었음.

<표 1-6> 사회 분야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개선된 지표	악화된 지표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인구비율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사회복지지출 • 노동소득분배율 • 고용률 • 근로시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유소년 영양상태 • 영아 사망률 • 자살 사망률 • 기대여명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고등학교 순졸업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주택 수 • 자연재해 피해 • 사고(성)사망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 관리직 여성 비율 • 비만율 • 공교육비 지출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범죄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율 • 인구 밀도 • 고령화 인구비율 •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추세 분석 평가에서 개선된 지표로 분류된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 수’는 2016년 현재 5.4%로 상당히 높고 OECD 회원국 평균인 2.1%를 2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특기할 점은 사회 지표들 중에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들이 상당수 있어 실제 체감하는 사회분야의 지속가능성 개선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출산율이 감소한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가 예상되는 지표로서 그보다는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수나 특수학교와 특수교사 수 등 교육환경에서의 차별성을 살펴보는 지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아사망률, 기대여명, 유소년 영양상태, 고등학교 순졸업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환경 분야

- 환경분야는 추세 분석이 가능한 27개의 지표를 분석했는데 14개(52%)의 지표는 개선되었고 13개(48%)의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7>)
- 악화된 지표 중에는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연안오염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환경의 악화를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음.
- 4대강 수질은 BOD와 T-P의 경우는 수치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의 심각한 녹조 발생으로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4대강 사업의 문제와 함께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미흡,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증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의 감소 등 수질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오염이 심화될 여지가 많으므로 하수도 시설 설치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 대책 수립이 필요함.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지표 중에는 그 개선도나 실태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다면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주요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국가생물종 목록 수)
- 게다가 경제지표인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7〉 환경 분야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개선된 지표	악화된 지표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GDP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 식량자급률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목재벌채 정도 • 해양보호구역 면적 • 주요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 취수율 • 4대강 수질오염도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자연보호지역 비율 • 국가생물종 목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 농지 면적비율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화학비료 사용량 • 농약 사용량 •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 도시화율 • 수도권 인구 집중도 • 연안오염도 • 1인 1일 물 소비량 • 물 재이용량 • 갯벌면적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종 수 •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 경제 분야

- 경제 분야는 세 분야 중에서 개선된 지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중립적 성격의 지표를 제외하고 21개의 지표 중 81%인 17개의 지표가 개선된 추세를 보였고, 오직 4개의 지표만이 악화되었음. (〈표 1-8〉)
- 국내총생산이나 1인당 GDP,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등 경제적인 여건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사회 분야의 계층별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들 (실업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 등)이 일부 악화된 결과와 연관 지어 볼 때 경제의 양적인 지속가능성과 함께 질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임.
-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함.
-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수거업자의 비닐 및 플라스틱 수거 거부 사태에서 보듯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개선된 지표이긴 하나 도농간 교통 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지방 대중교통의 불편함 등을 반영한 대안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1-8〉 경제 분야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개선된 지표	악화된 지표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총생산 • 1인당 GDP • 경제 성장률 • GDP대비 순 투자율 •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 무역수지 • GNI대비 ODA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에너지 원단위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재활용률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자전거도로 총연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 GDP대비 R&D지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 지정폐기물 발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물가지수 • 조세부담률

3.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진단 기능 평가

-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2006년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77개를 선정하고 평가함.
- 이후 2015년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12개 지표를 변경하고 11개 지표는 추가, 4개 지표를 삭제하여 84개의 지표를 확정함.

〈표 1-9〉 2015년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변화

	변 경	추 가	삭 제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순졸업률 (← 중등학교 순졸업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건강보험보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비만율 사고사망 만인율 노동소득분배율 관리직 여성 비율 자살사망률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PM2.5 추가)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산림지역 비율) 4대강 수질오염도(BOD, T-P) (←주요상수원 수질오염도, BOD) 주요지표종(5종)의 자원량 변화 (←수산자원량)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양식어업량)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국가생물종 목록수(←국가생물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해양보호구역 면적 물 재이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해양 투기량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사고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생산성 총에너지공급량 PC보유가구비율

- UN은 2017년 「지속가능발전과 SDGs를 위한 2030 아젠다의 주류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면서 SDGs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나아가 유엔은 이 지표체계에 맞추어 SDGs 이행상황의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그림 1-4〉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구조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자료: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2017). Mainstream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guide to UN country teams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상황을 충실하게 진단하여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서 이행계획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나 실적지표와 차별성이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충실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진단을 통해 정책이나 계획의 전환이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내야 하는 것임.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경제의 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의 형평성에 기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경제와 사회부문에서 형평성을 세밀히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2015년에 재조정되면서 사회·경제적 차별성과 형평성을 진단하는 지표가 일부 보강되었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관리직 여성비율 등이 보강되어 이미 지표로 선정되어 평가되던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세밀히 진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구 등 지표 진단에서 누락된 사회적 영역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문화·예술활동이나 평생교육, 교육의 질적인 측면의 진단 지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응지표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에 진행되고 있는 UNSDGs 체계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 (K-SDGs) 수립 연구는 사회, 경제적 형평성을 진단할 수 지표들을 충분히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상황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세밀히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4.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이행계획 추진 현황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별 세부이행계획 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든 목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한 성과지표도 112개 중 32개로 전체의 28.6%를 차지함.
- 측정방식의 한계 등으로 현재 이행평가가 불가능한 지표는 4개(3.6%)였음.

〈표 1-1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목표별 평가결과

(단위: 개, (%))

목표	단위	계	이행평가		
			과제완료	추진 중	산정불가
1. 건강한 국토 환경	개 비율	23 (100.0)	6 (26.1)	17 (73.9)	0 (0.0)
2. 통합된 안심 사회	개 비율	40 (100.0)	16 (40.0)	23 (57.5)	1 (2.5)
3. 포용적 혁신 경제	개 비율	35 (100.0)	6 (17.1)	26 (74.3)	3 (8.6)
4. 글로벌 책임 국가	개 비율	9 (100.0)	3 (33.3)	6 (66.7)	0 (0.0)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개 비율	5 (100.0)	1 (20.0)	4 (80.0)	0 (0.0)
합계	개 비율	112 (100.0)	32 (28.6)	76 (67.9)	4 (3.6)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 첫째, 목표 및 전략의 달성에 필요한 부처 이행과제들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함.
 - 둘째, 이러한 이행과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 셋째, 성과지표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의 달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함.

○ 부처별 이행과제 설정의 효과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이행과제는 대체로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목표의 경우 최고 리더십의 참여와 범부처 정책조정 기제 구축이라는 핵심적인 과제가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이행과제 성과지표 설정의 효과성

- 이행과제는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성과지표는 여전히 투입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예: 고용복지+센터 개소수,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 GDP 대비 순투자율, 녹색매장 수, 6차 산업화지구(개소), 긴급상황실 운영 등)
- 투입보다는 투입의 결과, 나아가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 아울러, 일부 이행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남북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 과제의 특성 상 성과지표 설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누락은 가능한 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의 효과성

- 전체 성과지표 달성도('20년 목표) 평균은 77.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며, 이미 202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한 지표들도 112개 중 32개로 전체의 28.6%를 차지함.
- 적극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 지표들 중 상당수가 투입 중심의 지표이거나, 기존의 추세를 감안할 때 무리 없이 달성이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함.
- 목표달성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적극적인 달성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스트레치 타겟(Stretch Target) 목표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행계획과 지속가능성 평가와의 연계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하여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관련 부처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함.
 - 예: 자살사망률, 범죄발생률,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공교육비 지출, 고령인구비율 등
- 물론 이들 지표 중에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예: 고등학교 순 졸업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주택 수 등
- 아울러, 부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 중 관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없는 경우도 나타남.
- 이 중 국가지속가능성 개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개선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 (이행과제)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성과지표)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개)
- 반면 국가지속가능성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시키거나 더 바람직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 등

5.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제도와 추진체계 재정립

-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향후 인류 공동의 주요 발전 가치로 확고히 위치함.
- 우리나라는 2007년에 처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었고 대통령 직속이었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되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체계를 국정 전반에 도입하는 데 미흡하였음.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의 균형잡힌 발전을 의미하므로 사회의 모든 영역 모든 세대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행정부의 전 부처가 협력하고 소통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제도와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의 범 부처 관련 특성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추진은 최고 리더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신념과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함. 그래야만 지속가능발전을 행정 이 지향해야 할 최종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제도의 도입, 이행수단 강화,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적용, 전파하는 것이 가능함.
- 2018년 유엔 자문기구인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에서 발간한 「SDG지표와 대시보드 보고서 2018」의 작성시 실시한 「SDGs 달성을 위한 국가 조직과 이행시스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 조직과 이행시스템은 G20 국가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의 작성자 제프리 삭스 (Jeffrey Sachs)는 UN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인 G20 국가들의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국가의 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수립할 것을 강조함.
-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적절히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복원하는 것과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하여 정부 내에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임
- 현재 우리나라는 UNSDGs 체계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나아가 K-SDGs 작성 과정에 주요 그룹과 이해당사자들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세부목표, 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최종 도출해내는 Bottom-up 방식을 적용하여 거버넌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제 2 장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II



사회분야 지표평가

지표명	추세					평가 ¹⁾	목표	
	2012	2013	2014	2015	2016			
1	빈곤인구비율(%)	12.1	11.8	10.8	10.4	11.0	😊	10('30)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계수)	0.31	0.30	0.30	0.30	0.30	😊	0.28('30)
3	사회복지지출(%)	9.4	10.0	10.5	10.1	10.4	😊	
4	노동소득분배율(%)	60.9	61.7	62.8	63.2	63.3	😊	
5	실업률(%)	3.2	3.1	3.5	3.6	3.7	😞	
6	고용률(%)	64.3	64.6	65.6	65.9	66.1	😊	66.7('30)
7	근로시간(시간/월)	179.9	178.1	177.1	178.4	176.9	😊	
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63.6	64.2	62.2	65.5	66.3	😊	85('30)
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50.0	48.4	47.9	48.1	48.9	😊	
1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64.4	64.0	63.1	62.8	64.0	😞	63.8('20)
1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5.2	55.6	57.1	57.9	58.3	😊	
12	관리직 여성 비율(%)	11.0	11.4	11.1	10.5	9.7	😞	
13	유소년 영양상태(%)	36.2	36.3	37.4	30.1	34.3	😊	
14	영아 사망률(%)	2.9	3.0	3.0	2.7	2.8	😊	2.8('20)
15	자살 사망률(%)	28.1	28.5	27.3	26.5	25.6	😊	20('20)
16	기대여명(세)	80.9	81.4	81.8	82.1	82.4	😊	84('30)
1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2.2	66.4	69.1	71.0	72.7	😊	80('30)
1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58.9	59.0	58.8	58.9	59.2	😊	73('30)
19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488.6	490.8	495.0	483.7	486.7	중립 ²⁾	
20	비만율(%)	32.4	31.8	30.9	33.2	34.8	😞	
21	고등학교 순졸업률(%)	95.0	95.1	95.1	95.4	95.7	😊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24.3	23.2	22.8	22.6	22.4	😊	23('30)
23	공교육비 지출(%) (GDP 대비)	6.7	5.9	6.3	5.1	-	😞	
24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7.2	-	5.4	-	5.4	😊	0('30)
25	주택 수 (호/1,000명) (인구 1천 명당)	363.8('10)	-	-	383.0	387.7	😊	
26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배)	5.1	-	4.7	-	5.6	😞	
27	범죄발생률(건/10만 명)	3,797	3,904	3,768	3,922	3,885	😞	
28	자연재해 피해(명, 억 원)	16	4	2	0	7	😊	
		10,892	1,721	1,800	318	2,884	😊	
29	사고(성)사망인율(‰)	0.73	0.71	0.58	0.53	0.53	😊	
30	인구 증가율(%)	0.45	0.43	0.41	0.38	0.35	중립	
31	인구 밀도(명/k㎡)	501.0	503.0	506.0	509.0	511.0	중립	
32	고령인구비율(%)	11.5	11.9	12.4	12.8	13.2	중립	

1) : 2012년 대비 2016년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2) : 2015년부터 통계 산출 방법이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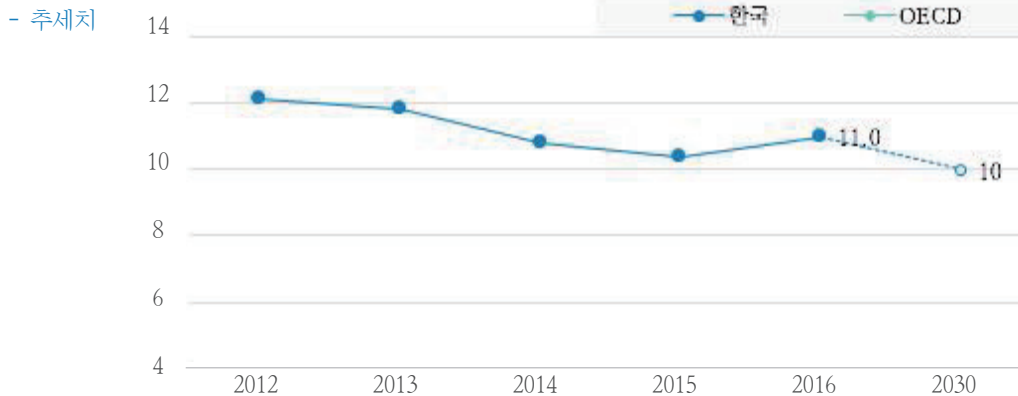
빈곤인구비율

총 인구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 인구 수 비율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산정방법: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 수/총 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2.1	11.8	10.8	10.4	11.0	😊	10



- 출처
국가추세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국가목표 :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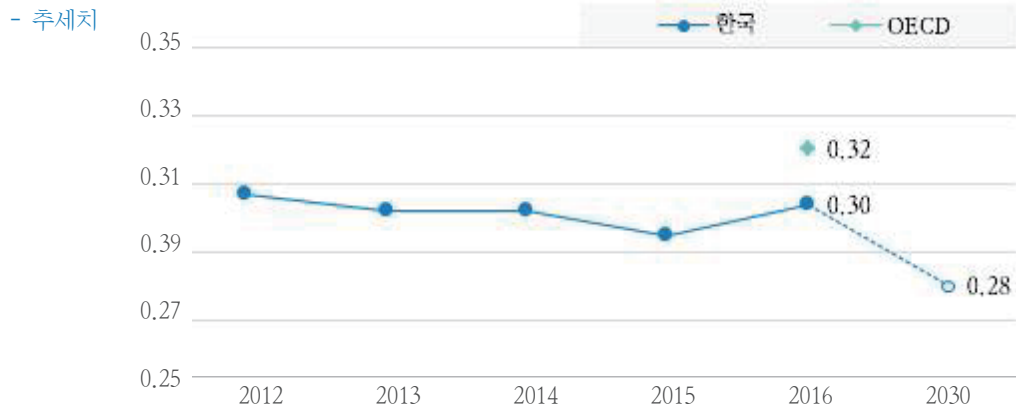
- 한국의 빈곤인구비율(가계동향조사 처분가능소득,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은 2016년 기준 11.0%로, 2012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에 소폭 상승하였음.
- OECD 평균 빈곤율(세후 빈곤선 50% 미만 비율로 측정, 전체 가구)은 2016년을 기준으로 12%이며, 한국은 14.7%로 소폭 높게 나타남.
-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 1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빈곤율이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빈곤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음을 감안할 때 빈곤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빈곤인구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와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가구 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함.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0.31	0.30	0.30	0.30	0.30	😊	0.28



- 출처

국가추세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목표 :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평균 (2015년) :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에 게시된 23개국 지니계수의 단순평균값으로 측정.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임.

진단

- 한국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 기준)는 2012년에는 0.307이었으나 2015년에는 0.295로 소폭 낮아졌다가 2016년에 다시 0.304로 상승하였음.
-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인 0.32에 비하여 소폭 낮게 나타나 불평등이 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2015년 이래 지니계수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 0.28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개선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니계수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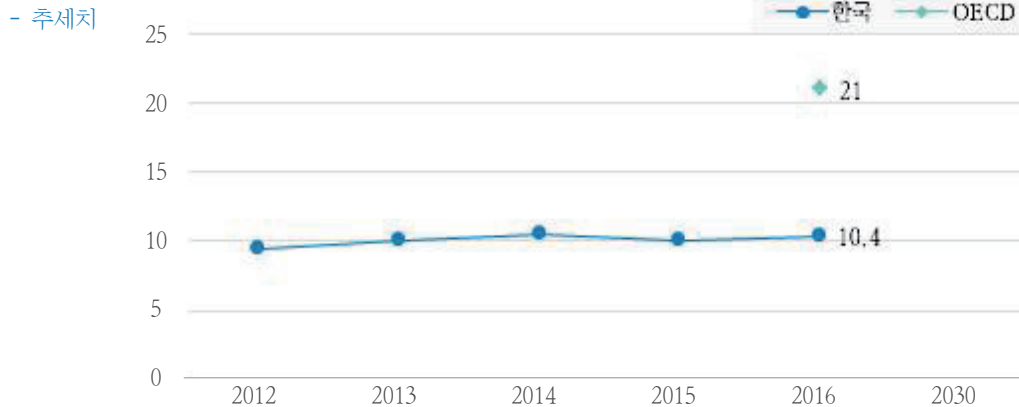
빈곤 사회복지지출

단위: %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로 정의함. 이 때 사회복지비는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함.
산정방법: (사회복지비/GDP)×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9.4	10.0	10.5	10.1	10.4	😊	



- 출처
국가추세 : 통계청,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OECD평균 :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한국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6년 기준 10.4%로, 2012년 이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인 2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멕시코를 제외한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향후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복지지출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와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빈곤 노동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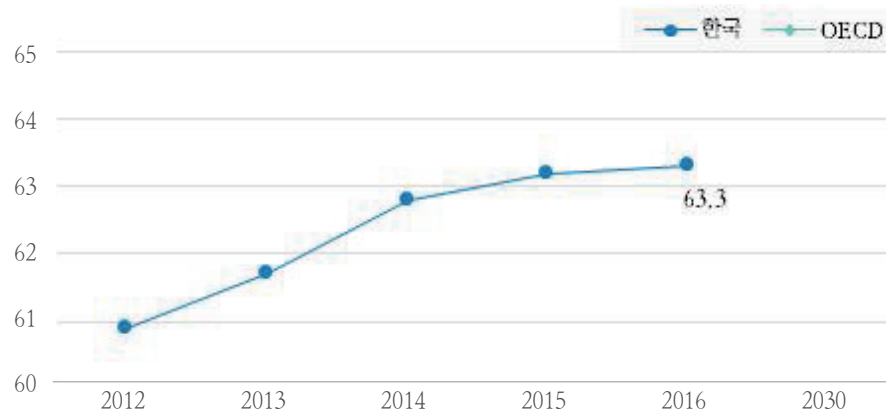
단위: %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 + 영업잉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0.9	61.7	62.8	63.2	63.3	😊	

- 추세치



- 출처 국가추세: 한국은행, 『국민계정』

진단

-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노동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한국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기준 63.3%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7년에는 63.0%로 나타나 7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2015년 기준)를 차지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자료: 고용노동부 (2017).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노동소득분배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와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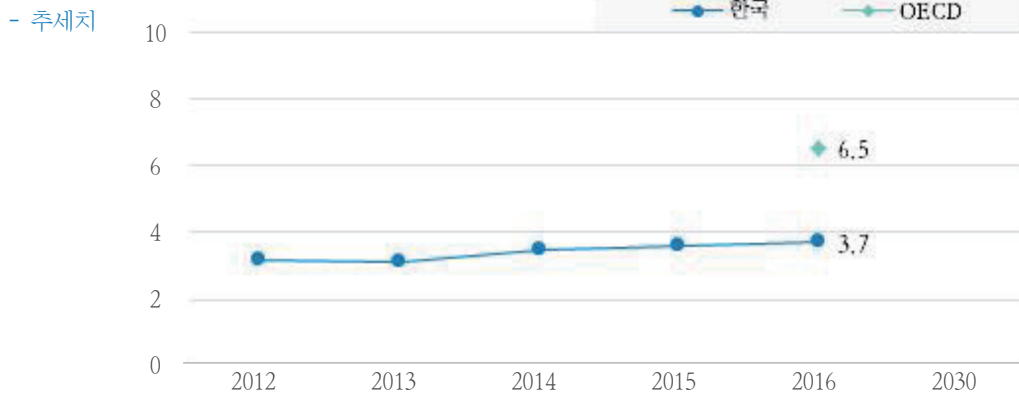
빈곤 실업률

단위: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2	3.1	3.5	3.6	3.7	☹️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평균: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한국 실업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3.7%로 나타나 OECD 평균인 6.5%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그러나 2012년 이래 한국의 실업률이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2012년 7.5%, 2014년 9.0%, 2016년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주될 필요가 있음.
- 실업률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와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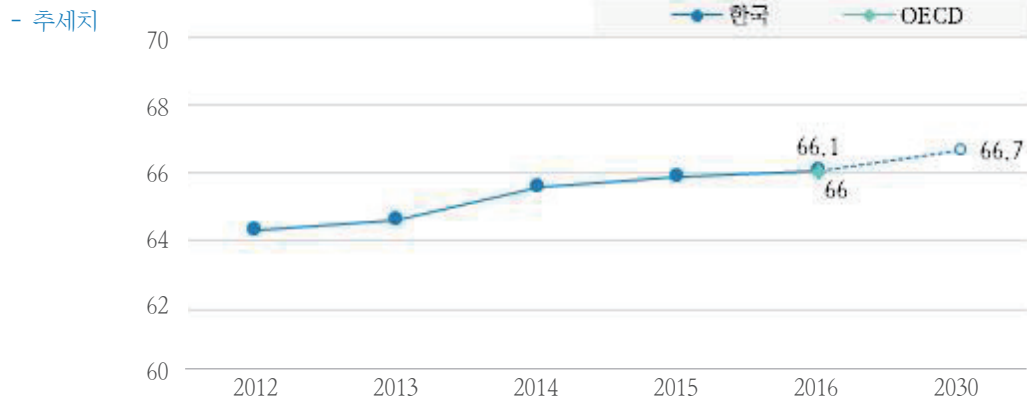
노동 고용률

단위: %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취업자 비율.
산정방법: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4.3	64.6	65.6	65.9	66.1	😊	66.7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국가목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평균: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통계

진단

- 한국의 고용률은 2017년 현재 66.6%임. 성별로는 남성 76.3%, 여성 56.9%이고, 연령별로는 30-50대의 경우 70% 이상이지만 20-29세와 60-64세의 경우에는 각각 57.6%와 60.6%에 그침.
- 한국의 고용률은 201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제시된 2030년 목표인 66.7%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고용률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와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노동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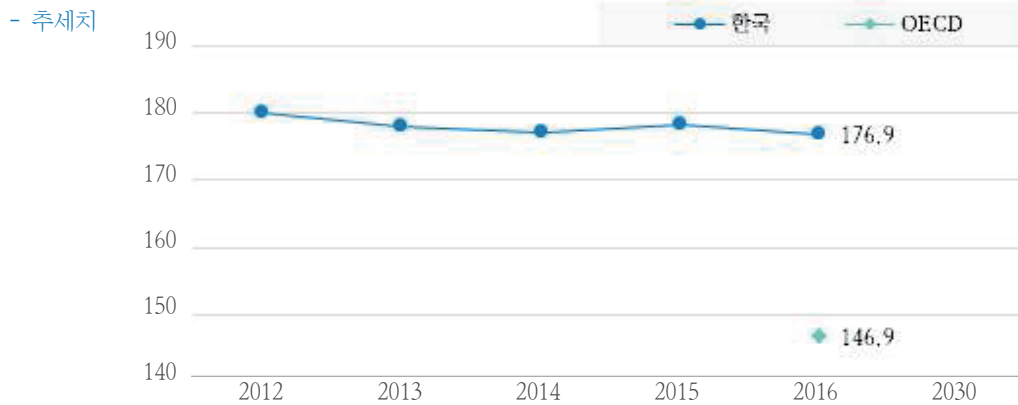
단위: 시간/월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값.

산정방법: 총 실 근로시간 수 / (전월말 근로자수 + 당월말 근로자수) / 2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79.9	178.1	177.1	178.4	176.9	😊	



- 출처

국가추세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OECD평균 :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9 시간으로 나타남.
- 2012년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OECD 평균인 146.9('16) 시간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임.
- 적어도 OECD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일과 삶 양립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근로시간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특히 포용적 혁신 경제의 달성과 관련성이 큰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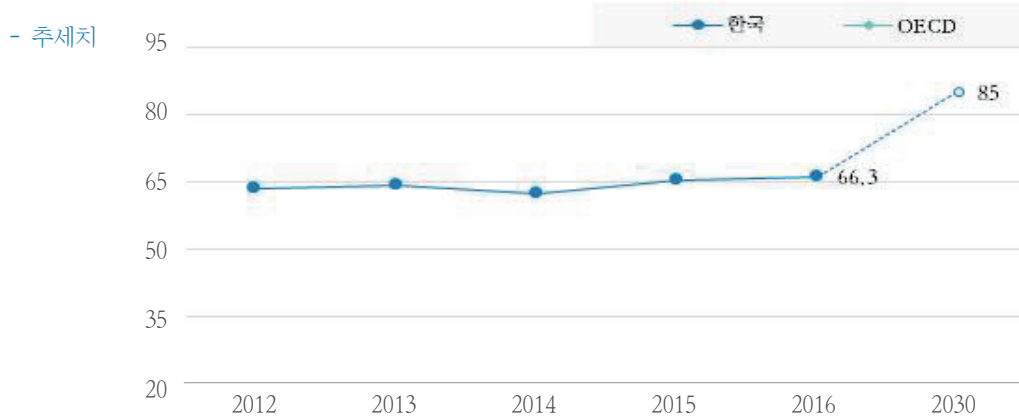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대비 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 포함) 근로자의 임금비율.

산정방법: (비정규직 월평균시간당 임금액/정규직 월평균시간당 임금액)x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3.6	64.2	62.2	65.5	66.3	😊	85



- 출처 국가추세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데이터는 8월까지 집계된 것임.
국가목표 :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2006).

진단

-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66.3%로 나타남.
- 2014년 이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06년 발간된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에 제시된 2030년 목표인 8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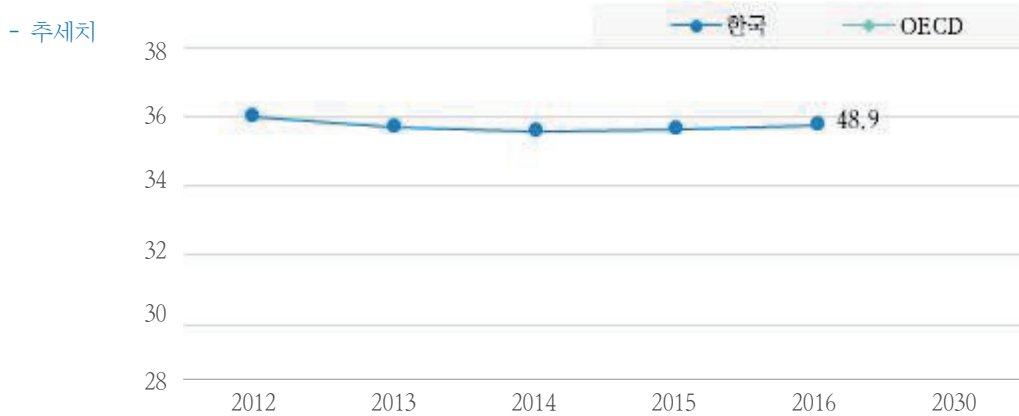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 (한시적·시간제·비전형 포함) 비율.

산정방법: (비정규직인구/정규직인구)x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0.0	48.4	47.9	48.1	48.9	😊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진단

-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48.9%에 달함.
- 2016년을 기준으로 정규직(Permanent employment) 대비 임시일용직(Temporary employment) 비율을 OECD 평균(32.6%)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34.2%로 소폭 높게 나타남(자료: OECD.stat)
- 2012년 이래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다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6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고하였으나, 본 2018년 보고서에서는 지표 정의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보고함.

지표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3.2	32.5	32.2	32.4	32.8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 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x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64.4	64.0	63.1	62.8	64.0	☹️	63.8

- 추세치

- 출처 국가추세: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평균: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64.0%에 달하여 OECD 평균인 85.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임.
- 2012년 이래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에는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과 큰 격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오히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이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더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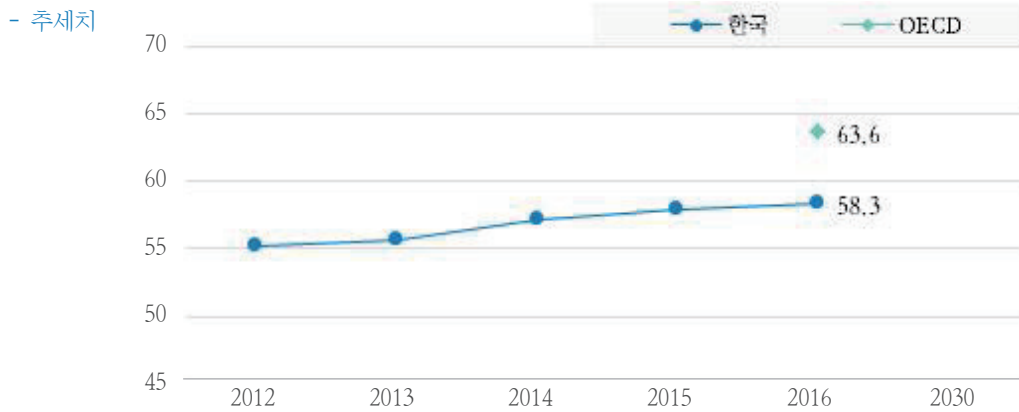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64세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

산정방법: [여성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15~64세 여성인구]x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5.2	55.6	57.1	57.9	58.3	😊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평균: OECD 통계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진단

- 2012년 이래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58.3%임
- 이는 OECD 평균인 63.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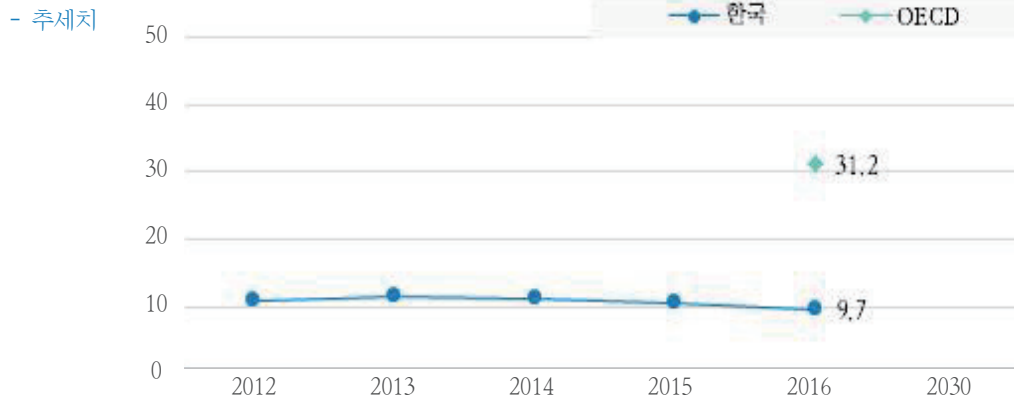
남녀평등 관리직 여성 비율

단위: %

전체 관리직 인원 중 여성 관리직 인원 비율.
산정방법: (여성 관리직 인원 ÷ 전체 관리직 인원)×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1.0	11.4	11.1	10.5	9.7	☹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OECD평균: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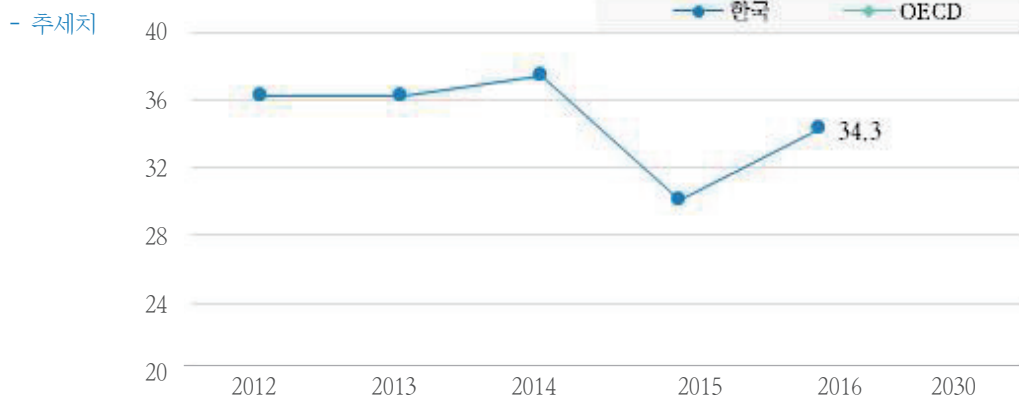
-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9.7%로, OECD 평균인 31.2%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을 보임.
- 한국 관리직 여성 비율은 2012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리직 여성 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유소년 영양상태

유소년(1~11세) 인구 중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자 비율.
 산정방법: 영양소 섭취량/(에너지 필요 추정량 혹은 영양소 평균 필요량)
 ×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합계)	36.2	36.3	37.4	30.1	34.3	😊	
(부족)	24.2	15.9	21.0	17.9	17.4	😊	
(과잉)	12.0	20.4	16.4	12.2	16.9	😞	



- 출처 국가추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진단

- 한국의 유소년(1~11세) 중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7.4%이며,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은 16.9%로 나타남.
- 2012년 대비 2016년 비율을 보면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은 증가한 바, 특히 후자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유소년 영양상태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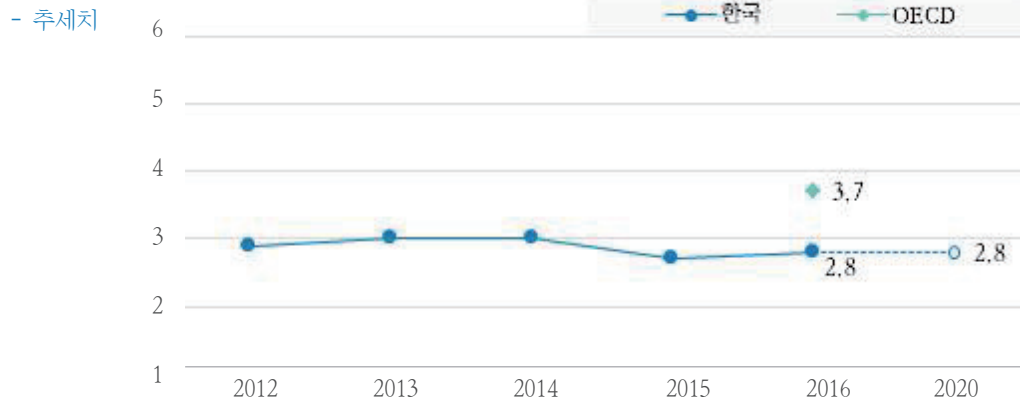
사망률 영아 사망률

단위: %

연간 출생아 천 명당 1세 미만 사망 영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1세미만사망영아수/1년간총출생아수) × 1,0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2.9	3.0	3.0	2.7	2.8	😊	2.8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목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진단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2.8%에 달하여 OECD 평균인 3.7%보다 낮았으며,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설정한 2020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2012년 이래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아 사망률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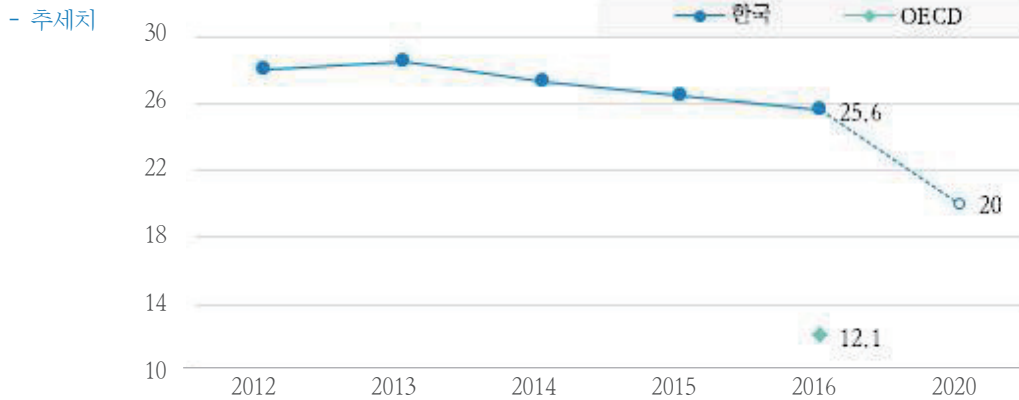
사망률 자살 사망률

단위: %

주민등록 연앙인구 십만 명 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산정방법: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28.1	28.5	27.3	26.5	25.6	😊	20.0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목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OECD평균: OECD(2017), 『Health at a Glance』

진단

-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십만 명 당 25.6명으로 나타나 2013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OECD 평균인 12.1명('16)에 비해서는 한국의 자살사망률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 목표인 인구 십만 명 당 2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살 사망률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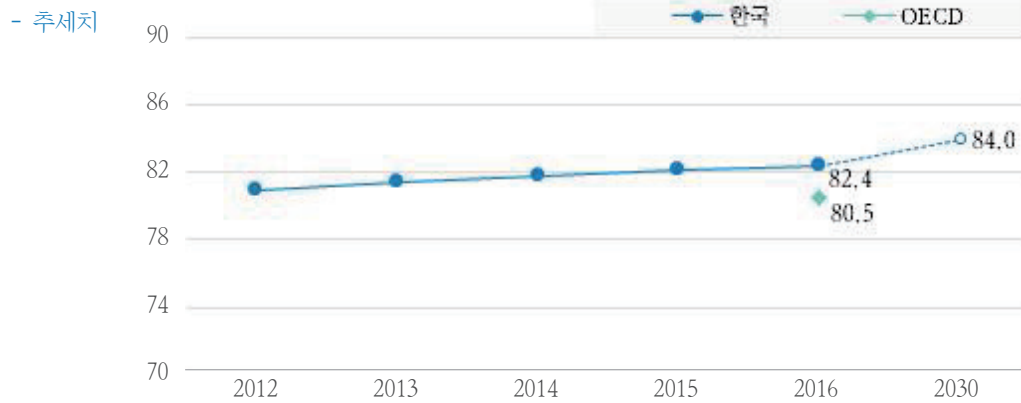
수명 기대여명

단위: 세

동시 출생한 집단이 각 연령별로 현재의 사망률을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년 수가 해당연령의 기대여명이 됨.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80.9	81.4	81.8	82.1	82.4	😊	84.0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생명표』
국가목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평균: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한국의 기대여명은 2016년을 기준으로 82.4세로, OECD 평균인 80.5세(남 77.9세/여 83.1세의 단순평균값)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기대여명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 84.03세는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기대여명은 빈곤인구비율(노인빈곤 문제), 사회복지지출, 고령인구비율 등 여러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관련이 깊은 지표로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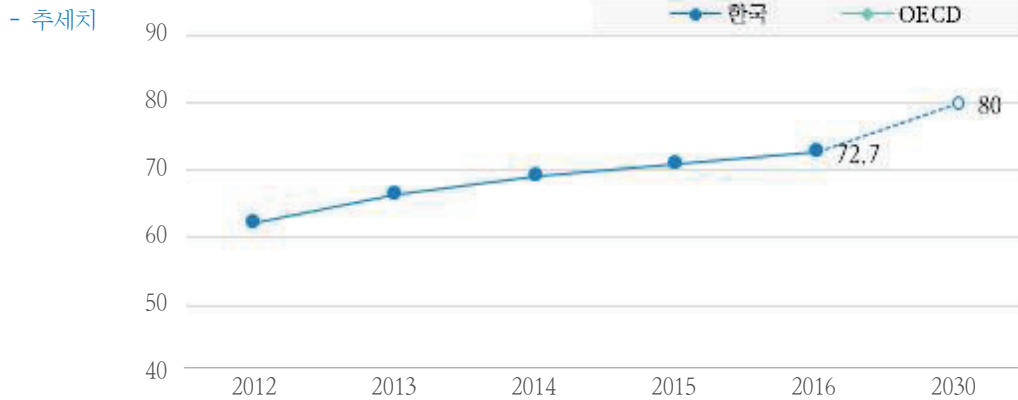
식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단위: %

전체 농어촌인구 중 상수도 보급 농어촌 인구 비율.
산정방법: (상수도 보급 농어촌인구/전체 농어촌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2.2	66.4	69.1	71.0	72.7	😊	80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상수도통계』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진단

- 한국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72.7%에 달하며,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지금까지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06년 발간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에 제시된 목표인 80%를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건강한 국토 환경과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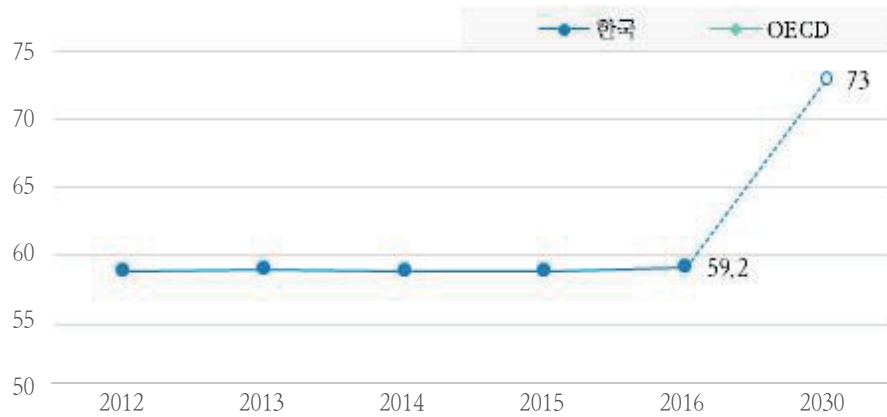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산정방법: (공공재원/국민의료비)×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8.9	59.0	58.8	58.9	59.2	😊	73.0

- 추세치



- 출처

국가추세: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국가목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진단

-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59.2%로 2012년 이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평균은 2008년 기준으로 이미 72.4%에 달한 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 목표인 7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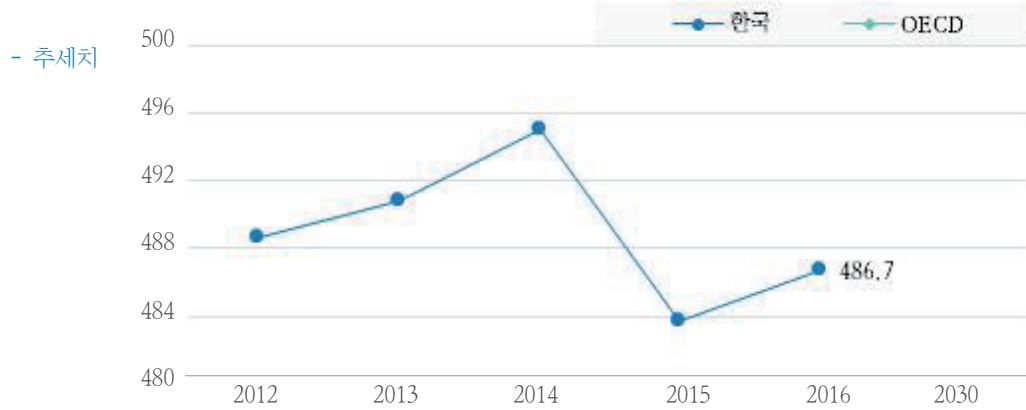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 수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별 접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국가필수 예방접종별 접종자/국가필수 예방접종 조사대상자수)×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합계)	488.6	490.8	495.0	483.7	486.7	증립	
(BCG)	99.7	99.8	99.8	96.7	97.8		
(Hep B)	99.0	99.4	99.4	96.3	97.3		
(Dtap)	93.9	96.8	96.8	95.6	96.2		
(IPV)	98.8	99.4	99.4	97.4	97.6		
(MMR)	99.4	99.6	99.6	97.7	97.8		



- 출처 국가추세: 질병관리본부, 「전국예방접종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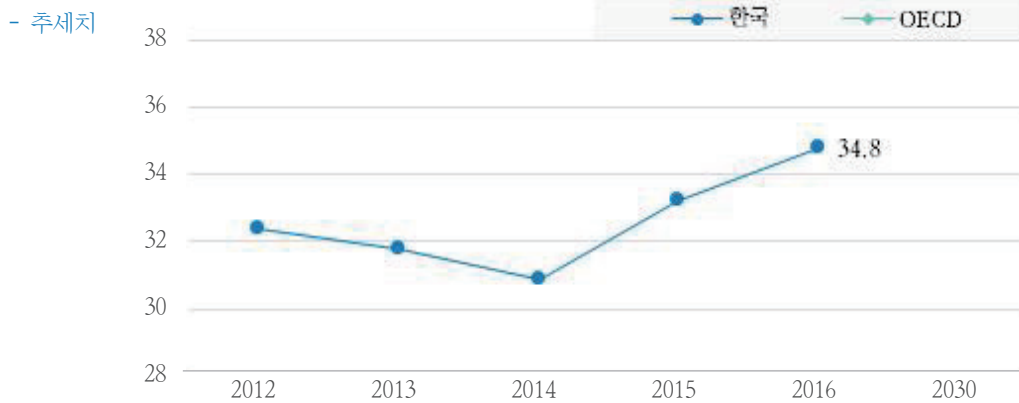
진단

- 한국의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률을 백신별로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BCG는 97.8%, Hep B는 97.3%, Dtap은 96.2%, IPV는 97.6%, MMR은 9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접종률(합계)이 2015년에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5년부터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주민등록이 된 만3세 대상)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특히 이중국적을 갖고 있거나 국외 장기 체류하는 유아의 경우 데이터가 일부 누락될 수 있어 과소추계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인구 비율.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2.4	31.8	30.9	33.2	34.8	☹	



- 출처 국가추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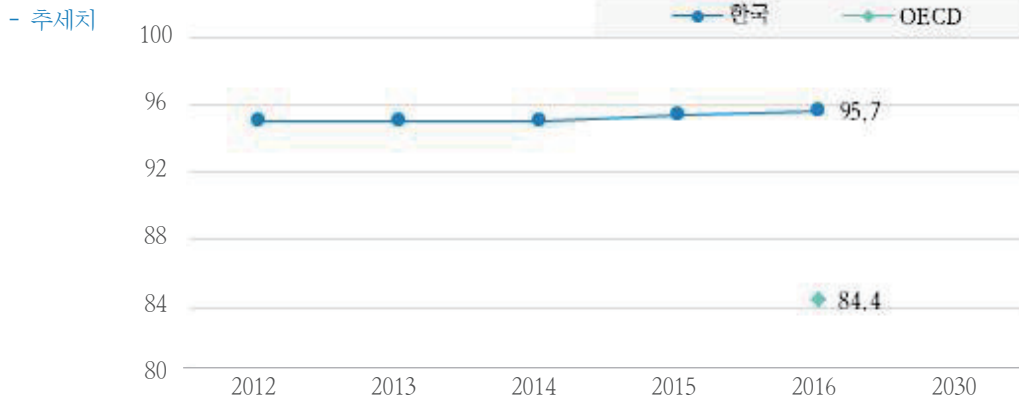
- 한국의 비만율은 2016년 기준으로 34.8%에 달하며 남성의 비만율은 42.3%, 여성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19-29세의 비만율이 27.2%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만율이 높은 연령대는 60대(40.2%)인 것으로 나타남.
- 1998년에는 26.0%였으나 2008년에는 30.7%, 2016년에는 34.8%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OECD는 비만율을 만15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가 30을 초과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비만율은 23.5%인 데 반해 한국은 5.5%로 크게 낮은 수준이었음.
- OECD에 비해 비만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비만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고등학교 순졸업률

3년 전 고등학교 입학자 수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비율.
산정방법: (중·고교의 졸업자 수/각각 3년 전 입학자 수)×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95.0	95.1	95.1	95.4	95.7	😊	



- 출처

국가추세: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OECD평균 (2015년):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OECD 28개국의 단순평균값으로 산정하였으며,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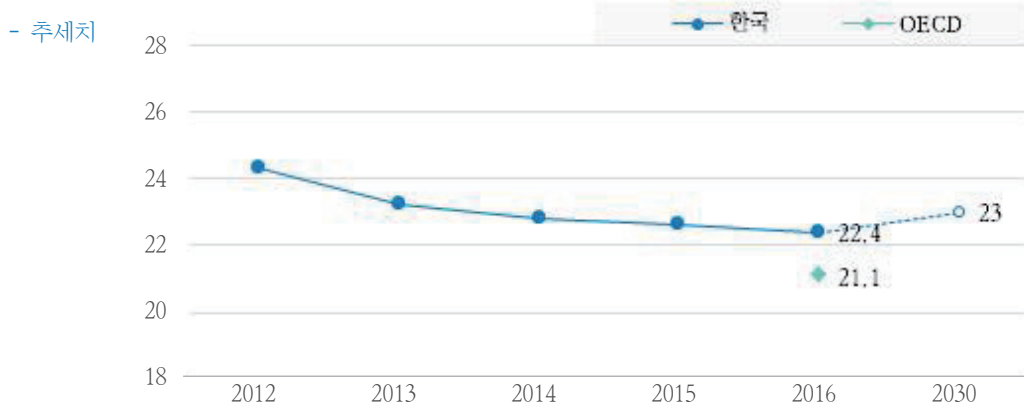
- 한국의 고등학교 순졸업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95.7%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인 84.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2012년 이래 한국의 고등학교 순졸업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OECD와 비교할 때 최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 순졸업률은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을 만한 지표라고 판단됨.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관련 지표로서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표나, 포용적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등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산정방법: 전국 초등학교의 학생 수/전국 초등학교의 학급 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4.3	23.2	22.8	22.6	22.4	😊	23



- 출처
 국가추세: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국가목표: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2006).
 OECD평균 (2015년):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OECD 27개국의 단순평균값으로 산정하였으며, 포함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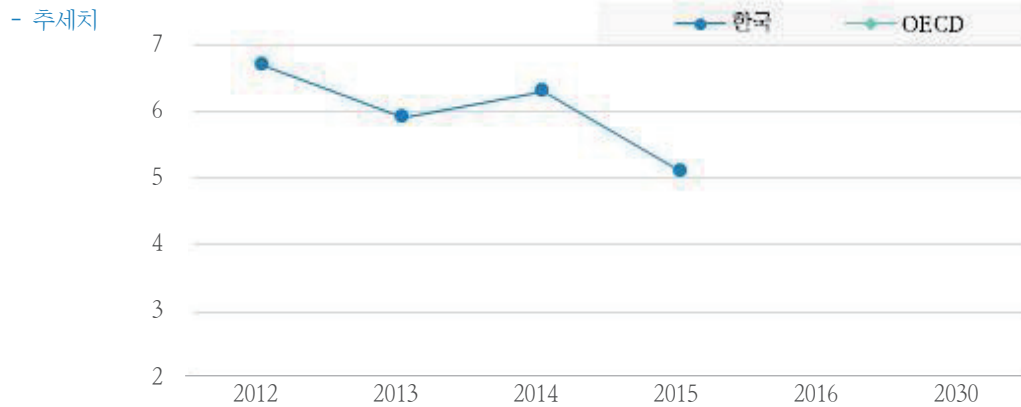
-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12년의 24.3명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30년 함께 가는 희망한국』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 23명보다 적은 수준으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임.
- 2016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OECD(2015년) 평균인 21.1명에 비해 다소 많은 수준이나 최근의 감소세와 저출산 기조를 감안할 때 격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관련 지표로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표와, 포용적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등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교육비 지출(GDP 대비)

GDP 대비 총 공교육비 지출 비율.
산정방법: (총 공교육비/GDP)×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7	5.9	6.3	5.1	-	☹️	



- 출처 국가추세: OECD, 『Education at a glance』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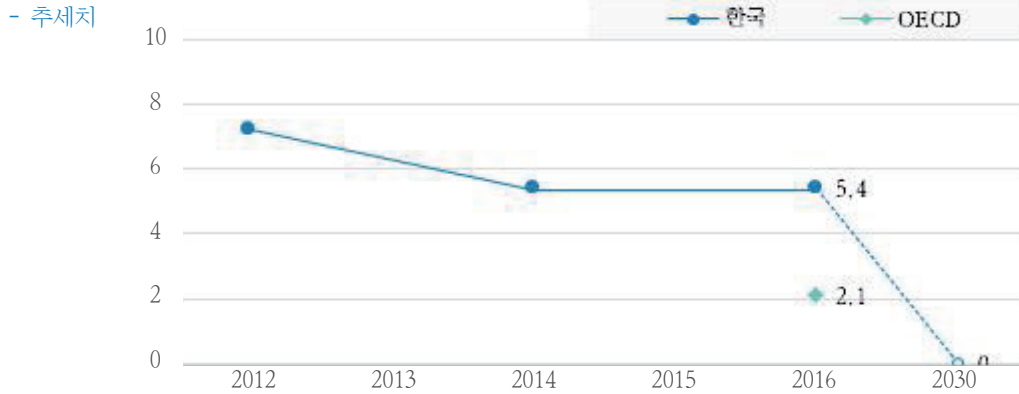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정부부담+민간부담) 지출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5.1%로 나타나 2012년 이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OECD 평균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은 2014년 기준 5.2%로, 같은 시기 한국의 6.3%보다 낮은 수준임.
-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공교육비 지출 중 민간부담이 1.7%로, OECD 평균(0.8%)에 비해 높다는 점임. 한편 정부 부담은 한국(4.6%)과 OECD 평균(4.4%)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공교육비 지출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그러나 단순한 지출 비중만으로는 상기한 두 목표의 달성에 얼마나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바, 민간부담 공교육비 부담의 경감 정도나 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정도 등으로 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중 최소주거기준 면적·방수기준과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율.
 산정방법: (최소주거기준 면적·방수기준과 시설기준 미달가구/전체가구수)x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7.2	-	5.4	-	5.4	😊	0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년 주기)』)
 국가목표: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2006).
 OECD평균: OECD, (2016), (『Better Life Index』)

진단

- 한국의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 2014년 이래 감소세가 정체된 점을 감안할 때『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 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의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2.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주택 수 (인구 1천 명당)

인구 1천 명 당 주택 수.

산정방법: (주택 수/전국인구)×1,000(호)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10)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63.8	-	-	383.0	387.7	😊	

- 추세치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인구 천인 당 주택 수』

진단

- 한국의 인구 천인당 주택 수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387.7(호/1,000명)에 달함.

〈인구 천인당 주택수〉

지표명	2000	2005	2010	2015	2016
주택수 (호/1,000명)	248.7	330.4	363.8	383.0	3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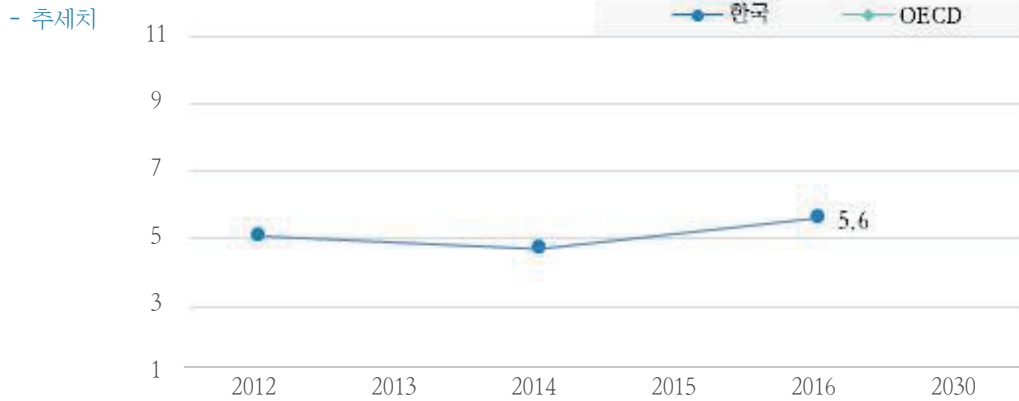
- 주택 수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나,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이 목표의 달성과 직결되는 정부의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하기 어려움.
-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는 지난 지 오래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노력에 초점을 맞춘 지표 등 새로운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가구 중위소득 대비 주택 중위가격 비율.
산정방법: 주택중위가격/가구중위소득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1	-	4.7	-	5.6	☹️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년 주기)

진단

-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5.6배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0년의 4.3배, 2012년의 5.1배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임.
-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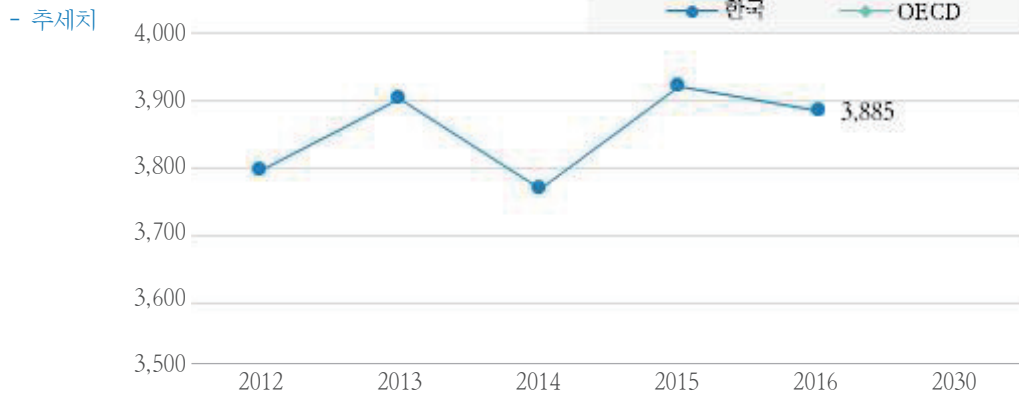
범죄, 재해
범죄발생률

단위: 건/10만 명

인구 10만 명 당 연간 범죄 발생 건수.
산정방법: 연간범죄발생건수/10만명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797	3,904	3,768	3,922	3,885	☹️	



- 출처 국가추세: 대검찰청, 통계자료-범죄분석 (교통범죄 포함)

진단

-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교통범죄 포함)는 2016년을 기준으로 3,885건에 달하여 2012년의 3,797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기준 2,722건으로 2012년의 2,788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범죄발생률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목표 중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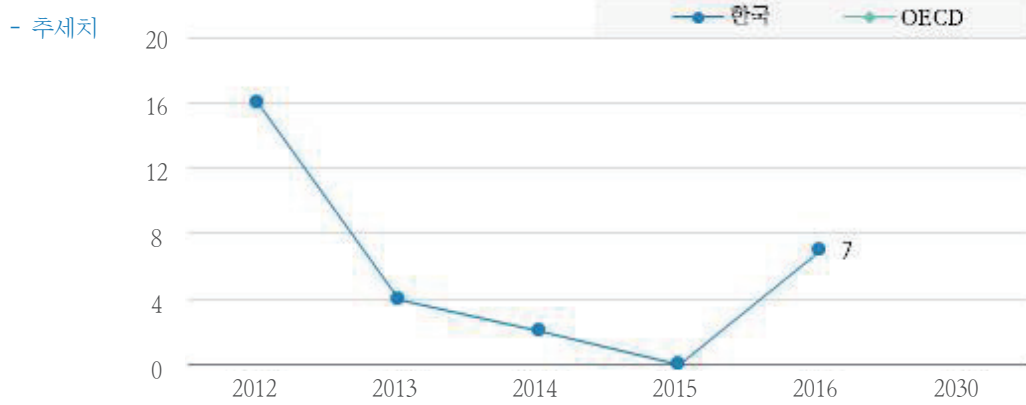
범죄, 재해
자연재해 피해

단위: 명, 억 원

자연재해 피해자 및 사망, 실종자(이재민 제외) 수, 당해 연도 가격 기준 피해액.

추세 및 목표치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 데이터 (명)	16	4	2	0	7	😊	
(억 원)	10,892	1,721	1,800	318	2,884	😊	



- 출처 국가추세: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진단

-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6년을 기준으로 7명에 달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2,884억 원에 달하였음.
-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2012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추세로 돌아섬.
- 자연재해 피해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통합된 안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사고(성)사망만인율

근로자수 대비 사고 사망자 수 비율(만인율).
산정방법: (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x10,000



- 진단**
- 한국의 사고(성)사망만인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0.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이래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이후로 감소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바, 감소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고(성)사망만인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통합된 안심사회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인구변화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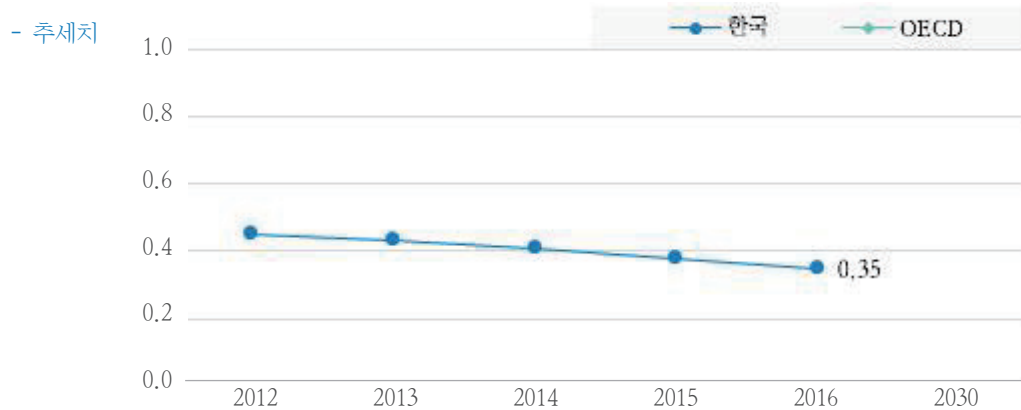
단위: %

전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에서 전년 주민등록인구를 뺀 값의 비율.

산정방법: $\{(금년인구 - 전년인구) / 전년인구\} \times 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0.45	0.43	0.41	0.38	0.35	중립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진단

- 한국 인구증가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0.35%로, 2012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관련 지표인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주요 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성장률은 0.58%로, 같은 시기의 일본(-0.12%), 프랑스(0.45%)보다는 높으며 미국(0.75%)과 영국(0.63%)보다는 낮은 수준임.
- 최근의 저출산 기조를 감안할 때 인구증가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증가율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복지지출 여건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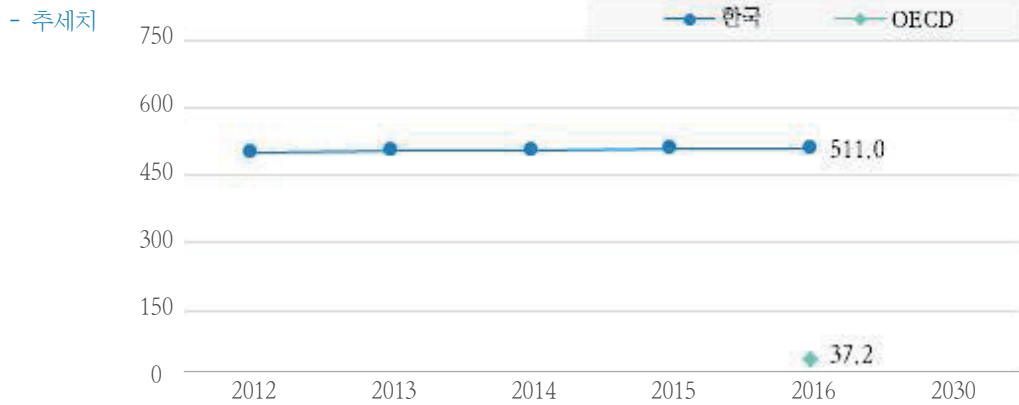
인구변화 인구 밀도

단위: 명/㎢

국토면적 대비 인구수.
산정방법: 인구수/국토면적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01.0	503.0	506.0	509.0	511.0	중립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OECD통계: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한국의 인구밀도는 2016년을 기준으로 511.0명/㎢에 달하며, 2012년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인구밀도는 OECD 평균(37.2명/㎢, 2016년 기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인구밀도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밀도는 인구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인구변화 및 사회변화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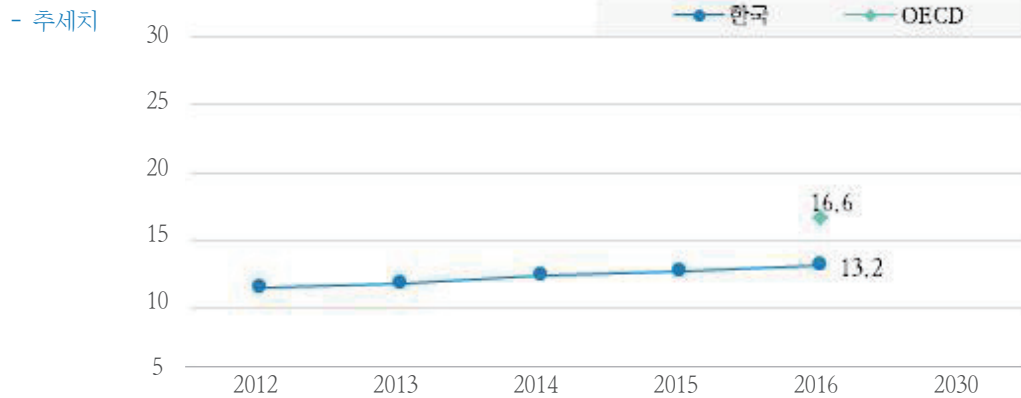
인구변화 고령인구비율

단위: %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65세이상인구/총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1.5	11.9	12.4	12.8	13.2	중립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가목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평균: OECD 통계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진단

-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은 2012년의 1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2%에 달하였음.
-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은 OECD 평균인 16.6%('16)보다는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저출산 및 기대수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전망인 28.3%에는 조기에 달할 것으로 보임.
- 고령인구비율은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통합된 안심사회와 포용적 혁신경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 특히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가족친화적인 노동정책 및 보건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령인구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환경분야 지표평가

지표명	추세					평가 ¹⁾	목표	
	2012	2013	2014	2015	2016			
1 온실가스 배출량(MtCO ₂)	685.9	697.0	690.9	692.9	694.1	☹	536('30)	
2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 _{2eq} /인)	13.7	13.8	13.6	13.6	13.5	☺	10.27('30)	
3 GDP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tCO _{2eq} /실질GDP(10억 원))	511.1	505	484	472	460	☺	254.1('30)	
4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톤)	27,888	27,843	24,577	24,099	23,677	☺		
5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회)	416.0	579.0	614.0	643.0	678.3	☹		
6 농지 면적비율(%)	17.3	17.1	16.9	16.8	16.4	☹		
7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6.5	4.8	3.2	2.7	3.4	☹		
8 식량자급률(%) (사료용 포함)	23.7	23.3	24	23.8	23.8	☺	27.3('22)	
9 화학비료 사용량(kg/ha)	267	262	258	261	268	☹		
10 농약 사용량(kg/ha)	9.9	10.7	11.3	11.6	11.8	☹		
11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64.1	64.1	64	63.9	63.8	☹		
12 1인당 도시공원 면적(m ² /인)	8.9	8.6	8.6	8.8	9.2	☺	20('30)	
13 목재벌채 정도(%)	51.5	39.1	30	33.8	29.9	☺		
14 도시화율(%)	91	91.58	91.66	91.79	91.82	☹		
15 수도권 인구 집중도(%)	49.33	49.39	49.41	49.43	49.50	☹		
16 연안오염도(mg/L)	1.53	1.34	1.47	1.58	1.54	☹	1.09('20)	
17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종)	46	-	52	-	77	중립		
18 해양보호구역 면적(km ²)	360.3	432.1	471.5	485	576.8	☺		
19 갯벌면적 증감(km ²)	2489.4	2487.2	2487.2	2487.2	2487.2	☹		
20 주요지표종의 자원량 변화(만 톤)	142	140	149	149	143	☺		
21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톤)	1,123.7	1,121.2	1,128.8	1,207.6	1,352.4	☺		
22 취수율(%)	34.1('11)	-	-	-	33.0	☺		
23 1인 1일 물 소비량(L/인/일) (사용량기준)	278.0	281.8	279.9	282.0	287.1	☹	242('30)	
24 물 재이용량(톤/년/인)	31.5	33.1	29.0	28.2	29.0	☹		
25 4대강 수질오염도(mg/L)	BOD	1.33	1.30	1.30	1.35	1.28	☺	
	T-P	0.039	0.032	0.027	0.023	0.025		
26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62.1	63.7	65.9	66.5	67.4	☺	80('25)	
27 자연보호지역 비율(%)	12.0	12.0	11.9	11.9	12.4	☺	17('20) 20('35)	
28 국가 생물종 목록 수(종)	39,150	41,483	42,756	45,295	47,003	☺	85,000 ('35)	
29 멸종위기종 수(종)	246	246	246	246	246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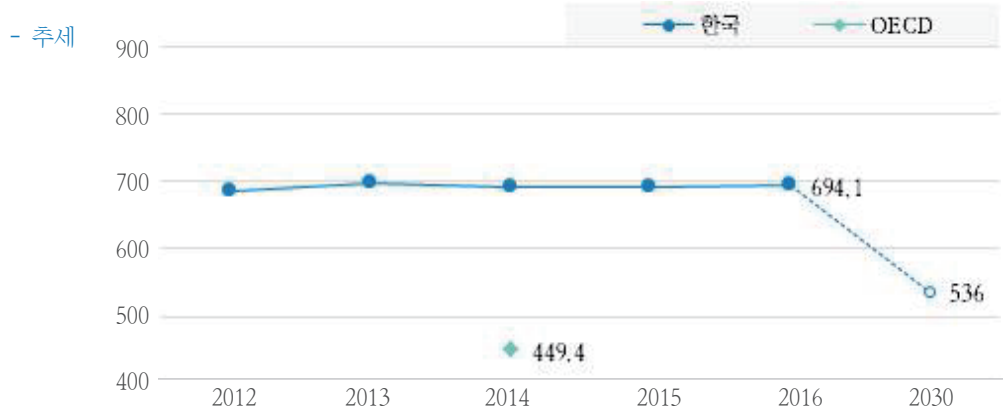
1) : 2012년 대비 2016년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온실가스배출량

교토의정서 상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불화탄소, 육불화황)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85.9	697.0	690.9	692.9	694.1	☹️	536



- 출처
국가추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인벤토리보고서
국가목표: 제4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OECD 평균: 449.4 MtCO₂ (2014)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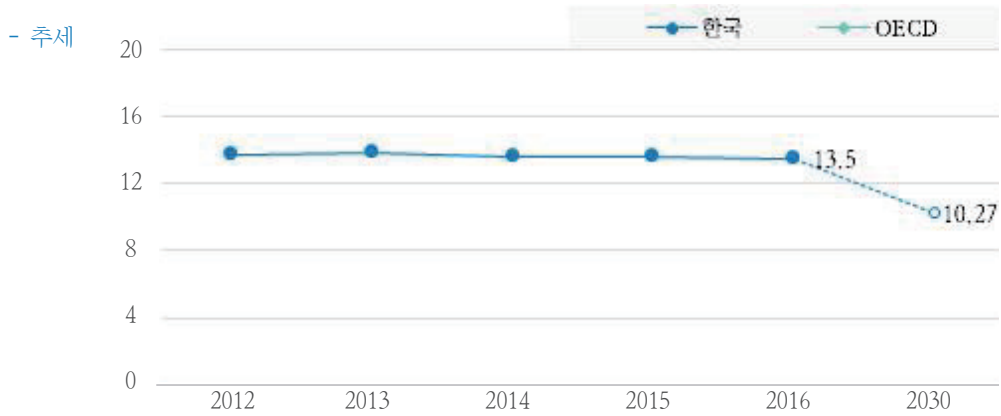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달성하려면 2030년의 온실가스배출량을 536 MtCO₂ 로 줄여야 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됨.
- OECD 국가들의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449.4 MtCO₂ 로 우리나라의 배출량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전망함.
-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다배출/자원소비형 경제를 저탄소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중 '건강한 국토환경'과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국가' 등 여러 목표와 관련된 지표로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에 영향이 큼.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국민 1인당 교토의정서 상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방법: 교토의정서 상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인구 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3.7	13.8	13.6	13.6	13.5	😊	10.27



- 출처: 국가추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인벤토리보고서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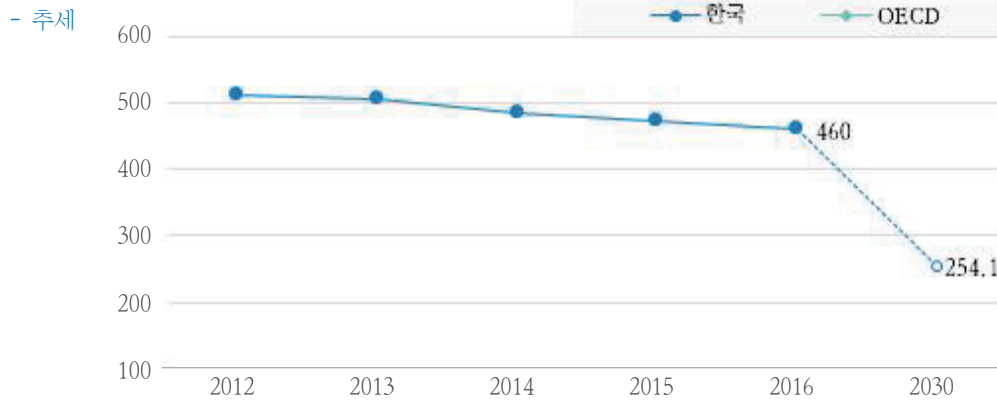
진단

-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이후 매우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10.27 tCO_{2eq}/인 임.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네 번째 목표인 ‘글로벌 책임 국가’의 2번째 전략인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의 주요 지표임.
- 동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부문별 (산업·발전, 건물, 교통·물류체계, 농어업,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본 지표는 국가 정책 전 부문에서 개선이 있어야 달성이 가능함.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인 ‘건강한 국토환경’과 ‘포용적 혁신 경제’와도 관련되어 있음.

GDP 대비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총배출량(tCO_{2eq})/GDP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11.1	505	484	472	460	😊	254.1



- 출처
국가추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인벤토리보고서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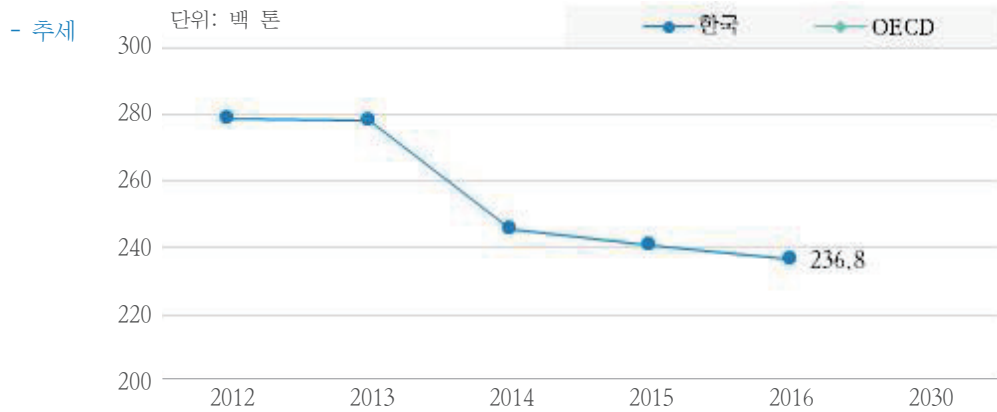
- 본 지표는 경제활동·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관계가 분리된 (decoupling)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부가가치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변화 상황을 알 수 있음.
- 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냄.
- 2030년 목표는 254.1 tCO_{2eq}/실질GDP(1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함.
- 본 지표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과제 중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지표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정착과 배출권 할당업체의 감축 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근본적인 감축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성장과 배출량 증가를 분리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경제 관련 각 부문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배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염화불화탄소, 할론, 사염화탄소, 111-트리클로로에탄)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5(목표)
	27,888	27,843	24,577	24,099	23,677	😊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진단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지표는 온실가스이자 성층권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 염화불화탄소 등의 소비량 감축을 위한 지표임.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 대책은 냉매의 사용저감 및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임.
- ‘몬트리올 의정서’의 합의에 따라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프레온가스의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수소염화불화탄소도 2030년부터 사용이 규제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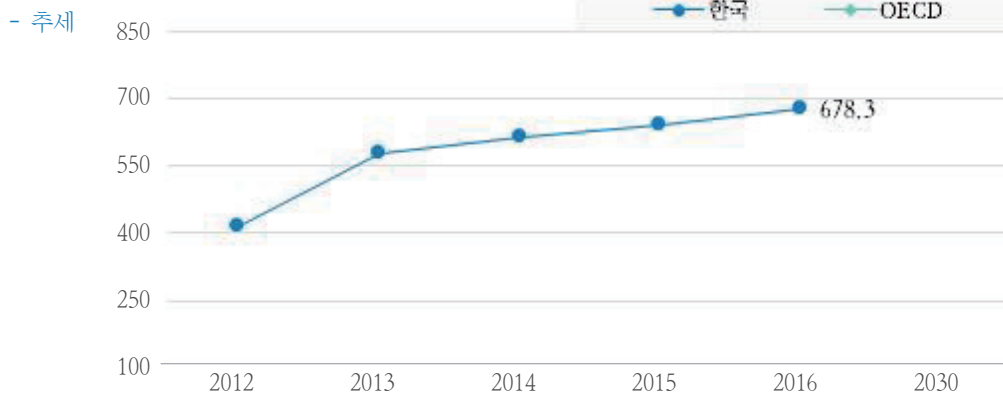
대기질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단위: 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의 연간 대기환경기준치 초과일수의 도시별 합계를 도시별 측정지점 수로 나눈 수치
산정방법: 7대 광역도시권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치 초과일수 / 지역대기측정망 측정지점 수 (도시별 산정 및 합계)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5(목표)
	416.0	579.0	614.0	643.0	678.3	☹	-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진단

2016년 7대 도시의 연간 대기환경기준치 초과횟수 (회)

2016	SO ₂		NO ₂		PM ₁₀	PM _{2.5}	O ₃	
	1시간	24시간	1시간	24시간			1시간	24시간
서울	0	0	95	121	192	359	652	1341
부산	0	0	21	8	146	393	381	843
대구	0	0	0	1	59	79	102	802
인천	0	0	87	59	127	233	279	630
광주	0	0	0	1	58	88	18	449
대전	0	0	0	1	62	16	208	663
울산	14	1	46	4	92	58	332	544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초과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 SDSN(2017)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미세먼지(PM2.5) 농도의 상위 5개국 평균 6.3 $\mu\text{g}/\text{m}^3$ 인데 비해 한국은 28.1 $\mu\text{g}/\text{m}^3$ 로 심한 오염도를 보여줌.

농업 농지면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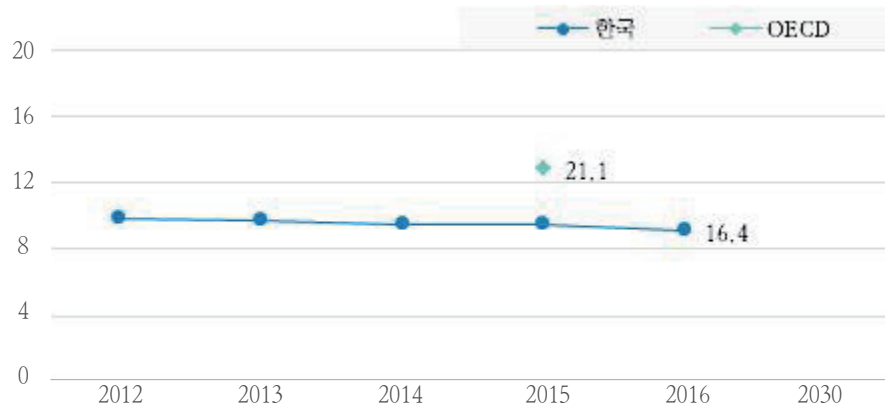
단위: %

국토 면적 중 농지면적 비율
산정방법: (전체경지면적/전체국토면적)×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7.3	17.1	16.9	16.8	16.4	☹️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국토교통부, 지역통계연보
OECD 평균: OECD Statistics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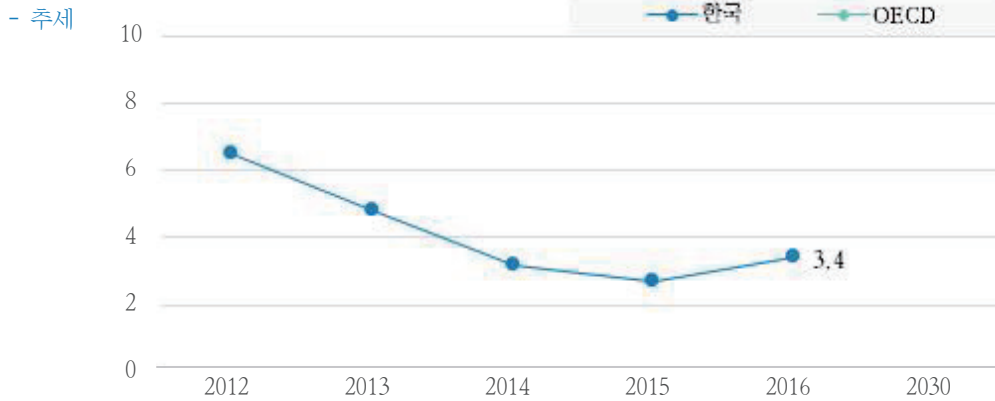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농지면적 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지면적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생산요소인데 식량자급률이 23.8%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농지면적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농업은 고령화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는데 이것이 농지면적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극심한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에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식량안보와 농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함.
- 2015년의 OECD 회원국의 농지면적비율은 평균 21.1%임.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유기, 무농약 등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산정방법: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량/농산물 총 생산량) ×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5	4.8	3.2	2.7	3.4	☹️	



- 출처
 국가추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17)
 OECD (2009): 유기농 경영하의 농지 비중 11.9% (한국 0.7)

진단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은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다 2016년에 다시 소폭 상승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17년 5%에서 2022년 8%로 늘릴 계획임.
- OECD 회원국의 경우 2009년에 유기농 경영하의 농지 비중이 평균 11.9%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현황 및 목표 (%)

2017년	2018년	2022년
5.0	5.2	8.0

출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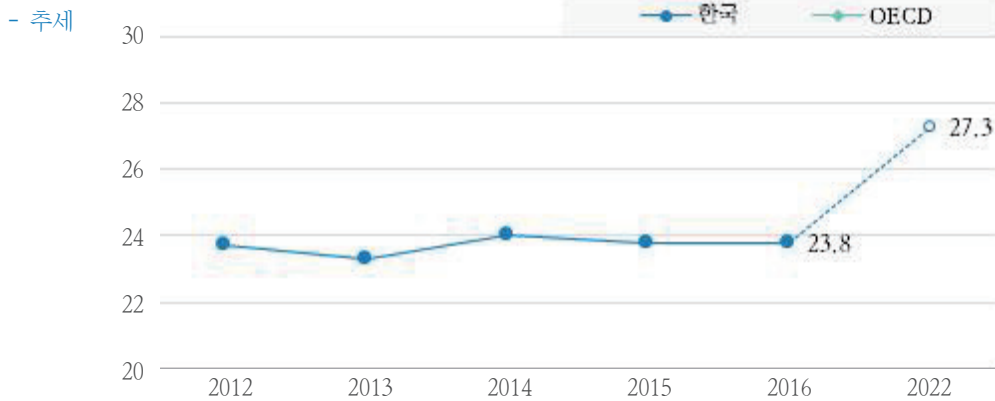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국민의 식량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충족하는 비율
 산정방법: [국내 생산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2
	23.7	23.3	24	23.8	23.8	😊	27.3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국가목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2022)

진단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2년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22년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27.3%로 계획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는 지급률 제고방안으로 우량농지와 간척지 활용, 발작물의 생산 확대, 안정적 수요 확보,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제시함.
- 그러나 식량자급률의 하락과 농업 쇠퇴의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도농 간의 경제적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시됨.
- 식량자급률과 같은 중요한 지표의 목표 설정은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정책과 대책에서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같은 공론화와 참여 과정을 통해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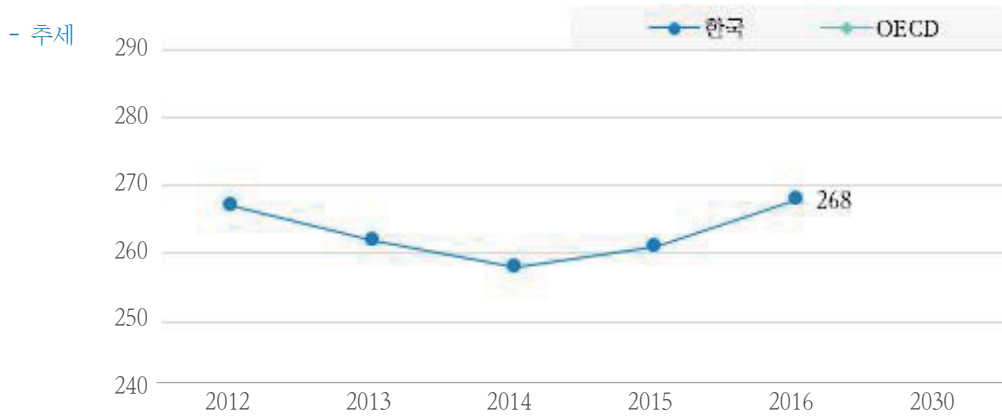
화학비료 사용량

경지이용면적 당 화학비료 사용량

산정방법: 당해 연도 비료 총 출하량 질소, 인산, 칼륨 성분량 기준 /전체 경지이용면적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67	262	258	261	268	☹️	



- 출처 국가추세: 한국공업비료협회, 비료연감

진단

- 경지단위면적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2년 이후 감소하다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FAO 통계에는 각국의 비료사용량을 질소비료와 인산비료로 나누어 소비량을 집계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은 나라에 속함. 특히 인산비료 사용량이 많음.

〈각국의 화학비료 사용량 (2014, kg/ha)〉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질소비료	198.9	422.2	101.9	104.7	139.4	160.2	78
인산비료	140.2	155.7	96.1	13.8	24	31.2	25.7

출처: 2014 FAO Statistical Pocketbook

- 가축분뇨 퇴비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등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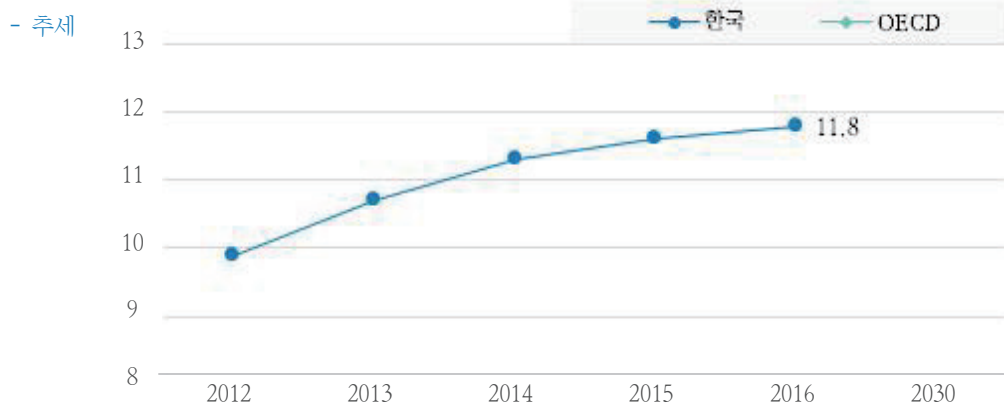
농업 농약 사용량

단위: kg/ha

경지이용면적 당 농약 사용량
산정방법: 당해연도농약출하량/전체경지이용면적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9.9	10.7	11.3	11.6	11.8	☹️	



- 출처 국가추세: 농림축산식품부, 농약연보, 2017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진단

- 경지단위면적 당 농약 사용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OECD 국가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의 농약 사용량이 EU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음.

〈각국의 농약 사용량 (2014, kg/ha)〉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11.7	14.8	11.9	3.9	3.8	2.9	0.72

출처: FAO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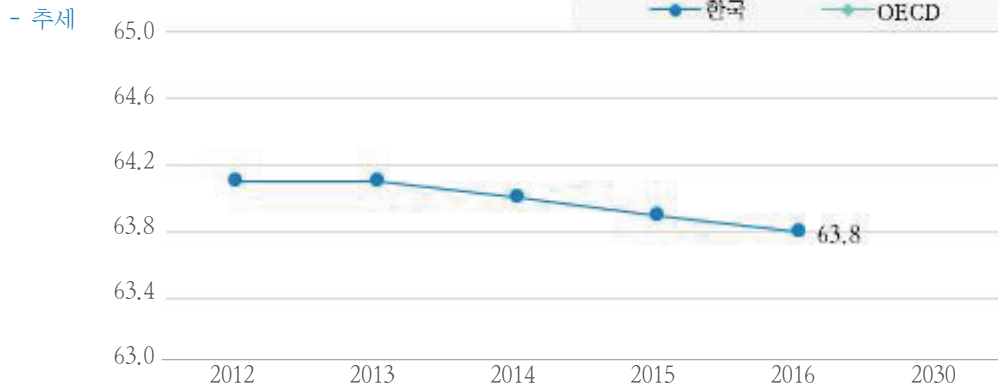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병해충의 높은 발생률과 연중 재배, 집약생산 등의 영농 특성으로 인하여 농약 사용량이 많은 편임.
- 식품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등에 의한 농약 사용 감소가 과제임.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국토 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산정방법: (임야면적/국토면적)×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64.1	64.1	64	63.9	63.8	☹️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지역통계연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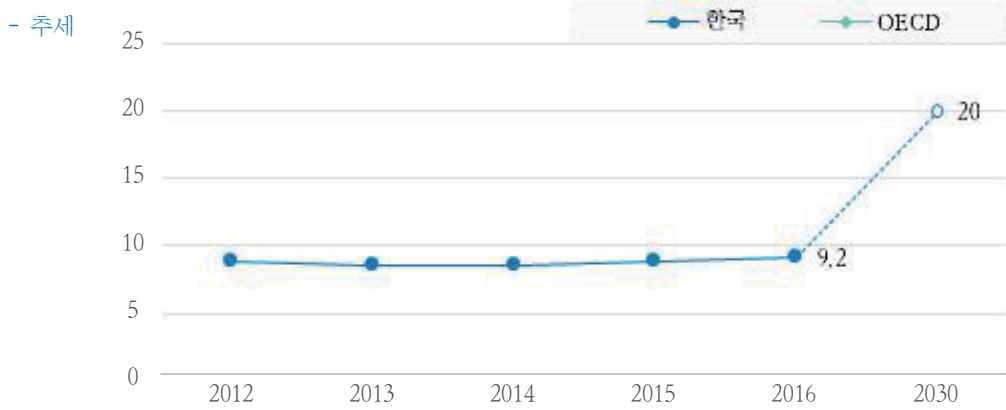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임야는 목재 및 기타 산림자원을 제공하고 토양침식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이산화탄소 흡수, 홍수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무절제한 개발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임야 경영을 지양해야 함.
- 따라서 지속적인 임야 면적의 축소의 원인과 대책을 환경, 경제, 사회의 3분야를 통합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 지역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
산정방법: 도시공원조성(집행)면적/도시인구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8.9	8.6	8.6	8.8	9.2	😊	20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국가목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참고: 국토교통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계획
WHO 권고 수준 ('14): 9㎡/인
런던 (27㎡/인), 뉴욕(18.6㎡/인), 파리(11.6㎡/인)

진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20㎡/인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WHO(2014년)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으로 9㎡를 확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8.6㎡로 조금 낮은 상황임.
- 2014년의 런던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7㎡이고 뉴욕 18.6㎡, 파리 11.6㎡로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늘리려는 목표는 타당하나 도시지역의 도시공원 면적의 증가는 자연녹지나 경작지, 산림 면적 등의 감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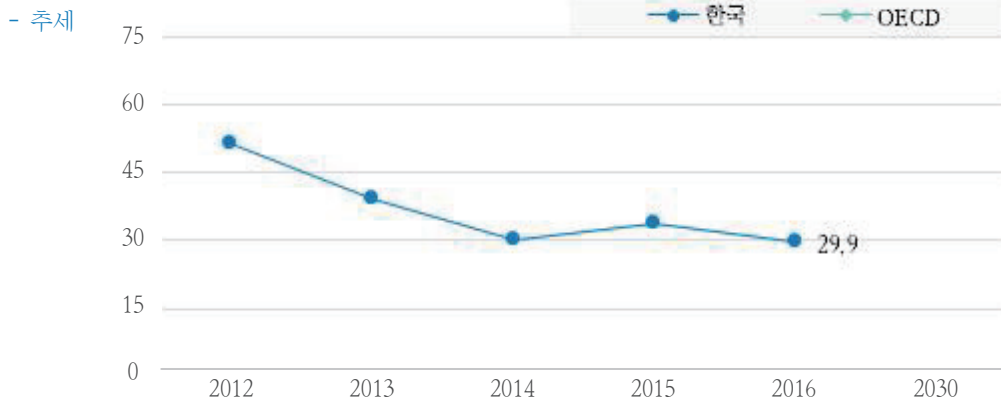
산림 목재벌채 정도

단위: %

연간 임목 축적증가량 대비 연간 목재 벌채량 비율
산정방법: [연간목재벌채량(㎥)/연간임목축적증가량(㎥)]×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1.5	39.1	30	33.8	29.9	😊	



- 출처 국가추세: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진단

- 연간 임목 축적증가량 대비 목재벌채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보다 크면 총체적인 산림자원이 감소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산림자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림자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목재벌채 정도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6년 16.3%로서 2035년까지 30%대로 올릴 계획임.
- 산림청은 원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림부국들의 원목수출 제한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목재벌채 정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는 생태계 보호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 등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함.

도시화 도시화율

단위: %

총인구에 대한 도시 거주 인구 (행정구역 기준으로 읍 이상 도시지역의 거주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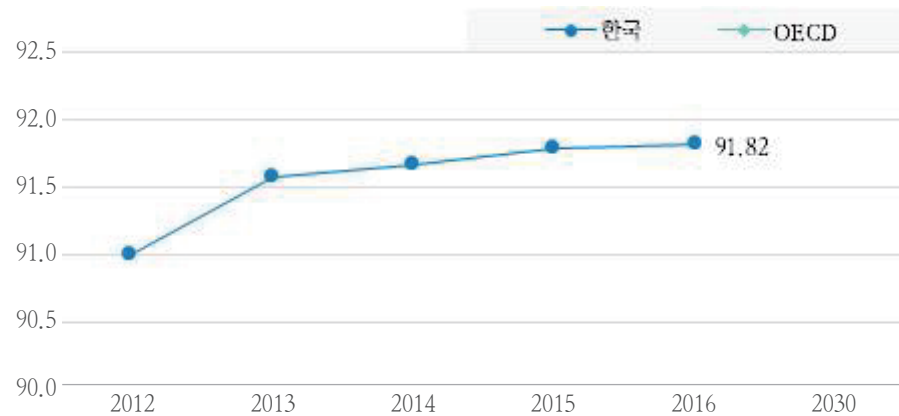
산정방법: (도시지역(주거, 상업, 녹지 등)인구/총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91	91.58	91.66	91.79	91.82	☹️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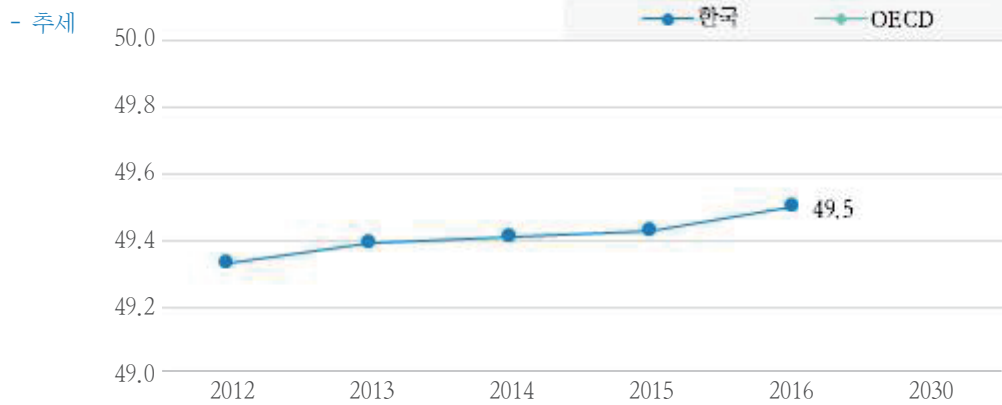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은 인구의 91.82%가 읍 급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화율’ 지표는 도시의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지역공동체 파괴 등 도시화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초래하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배경 지표임.
-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도시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도시화율’이라는 지표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그러므로 도시화율 보다는 도시화로 인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수도권 인구 집중도

전국 인구에 대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거주인구의 비율
 산정방법: (수도권인구/전국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49.33	49.39	49.41	49.43	49.50	☹️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진단

-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12년 이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함.
-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제적 활력, 환경적 쾌적성, 사회적 통합성을 판단하는 종합 지표임.
- 수도권 인구과밀 현상은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심화, 주택가격의 급등 등에 따른 사회비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가속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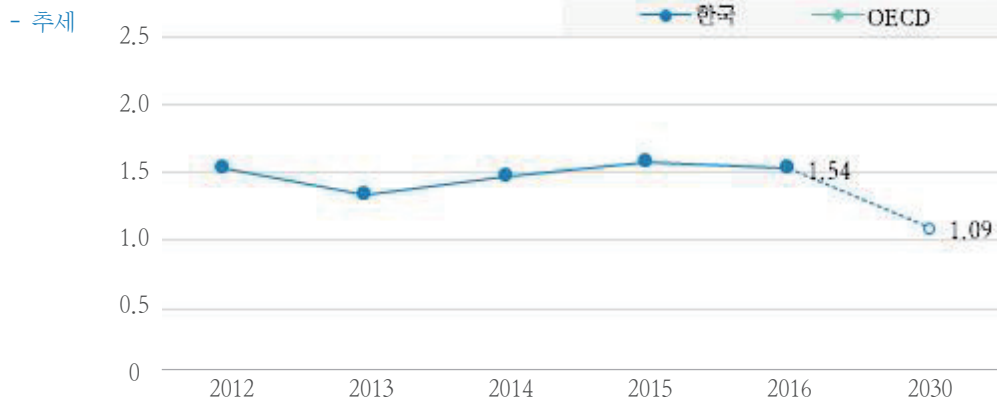
연안지역
연안오염도 (COD)

단위: mg/L

연안 해양 생태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1.53	1.34	1.47	1.58	1.54	☹️	1.09



- 출처
국가추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환경조사부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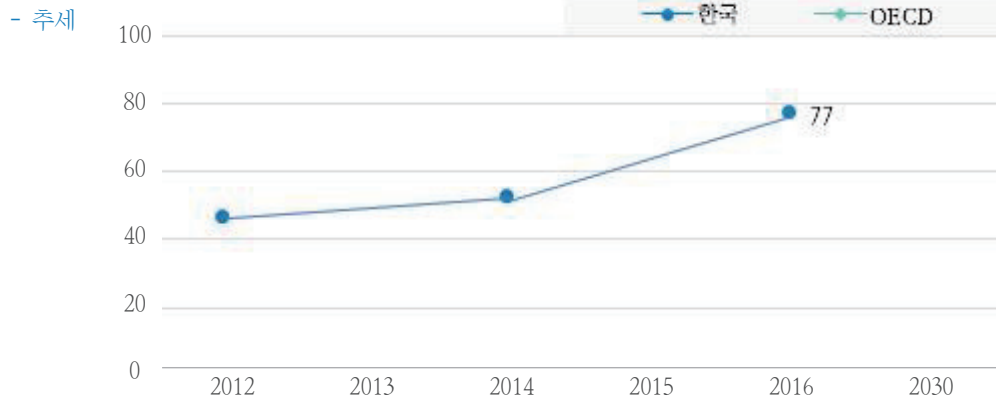
- 환경관리해역 환경측정망의 COD 연평균 농도를 이용하여 연안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연안오염도 결과는 환경관리해역 환경측정망 중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 중 동해는 2지역(울산과 온산 연안), 남해 7지역(부산연안, 낙동강하구, 부산신항연안, 행암만, 마산만, 진해만, 광양만), 서해 7지역(가막만, 득량만, 완도연안, 도암만, 함평연안, 인천연안, 시화호)에서 측정된 COD의 평균치임.
- 동해 1.28mg/L, 남해 1.65mg/L, 서해 1.39mg/L로 남해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음.
- 남해안에서는 행암만(2.63mg/L)과 마산만(2.84mg/L)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해안에서는 시화호의 오염도가 2.96mg/L로 가장 높았음.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46	-	52	-	77	중립	



- 출처 국가추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진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수는 2012년 46종에서 2016년 77종으로 증가.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다음과 같음.
 -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1종, 해조류 7종, 파충류 4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77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으로 지정됨.
-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 수 증가는 서식지 및 개체 수 복원 등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정책기반 확대에 볼 수 있어 긍정적이거나 한편으로는 증가된 해양생물종 중 일부는 멸종위기종이거나 취약종들이기 때문에 환경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도 의미하므로 중립적인 지표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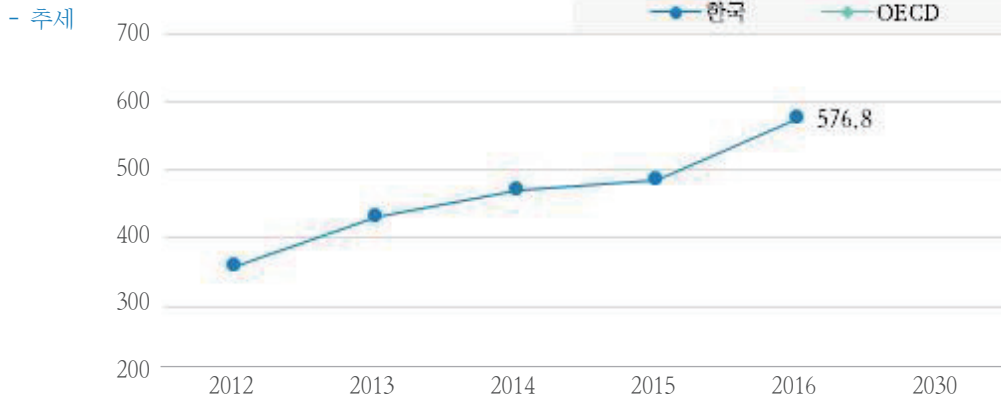
해양보호구역 면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특별히 보전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

산정방법: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연안습지보호지역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60.3	432.1	471.5	485	576.8	😊	



- 출처 국가추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주요통계

진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특별히 보전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가.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 나.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 다. 해양경관보호구역: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지역을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해양보호구역 면적의 증가는 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의미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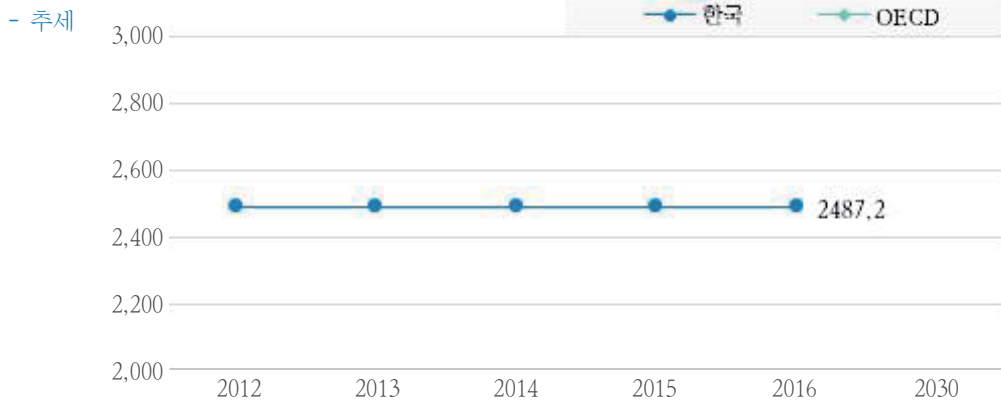
연안지역 갯벌면적 증감

단위: km²

전국 연안습지 중 갯벌 총면적의 증감
산정방법: 당해연도 사·도별 갯벌면적의 합 - 비교연도 사·도별 갯벌면적의 합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489.42	2487.2	2487.2	2487.2	2487.2	☹️	



- 출처 국가추세: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면적현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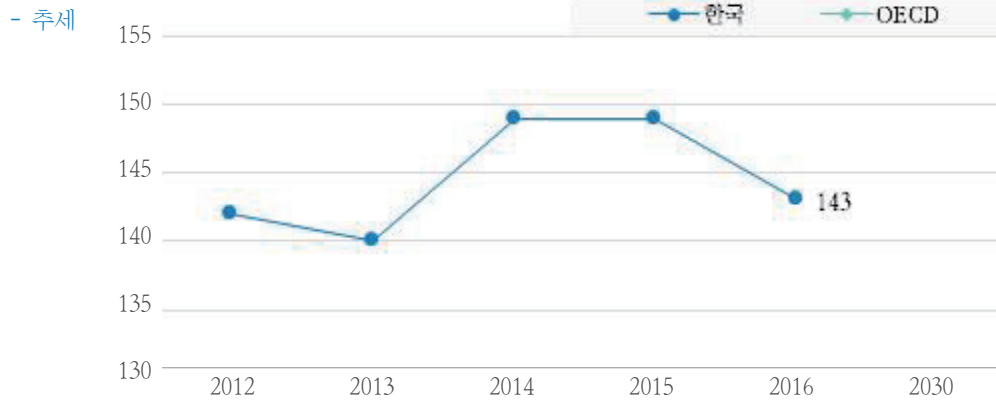
- 갯벌 면적은 5년 주기 조사로 2012년까지는 2489.42km²이고, 2013년 이후 2487.2km² 로 소폭 감소하였음.
- 갯벌은 습지보전법에서는 연안습지로 분류하며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면으로 정의됨.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토확장 등의 이유로 간척사업이 시행되면서 갯벌의 총 면적이 감소하였는데 2013년 이후에는 변화가 없음.
- 갯벌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간척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지만 육지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됨.
- 갯벌면적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이행과제로 공유수면 매립면적 감소와 갯벌 복원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함.

주요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주요 지표종(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도루묵)의 자원 양을 측정하는 지표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42	140	149	149	143	😊	



- 출처 국가추세: 해양수산부 (부처 산출)

진단

- 수산자원의 주요 지표 5종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도루묵)의 양은 2014년과 2015년에 14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에 다시 감소함.
- 본 지표는 수산자원량의 측정을 통해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 생태계를 보존·유지하기 위한 지표임.
- 수산자원의 남획과 연안오염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해양생태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므로 지표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함.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해면 양식분야의 면허권 당 총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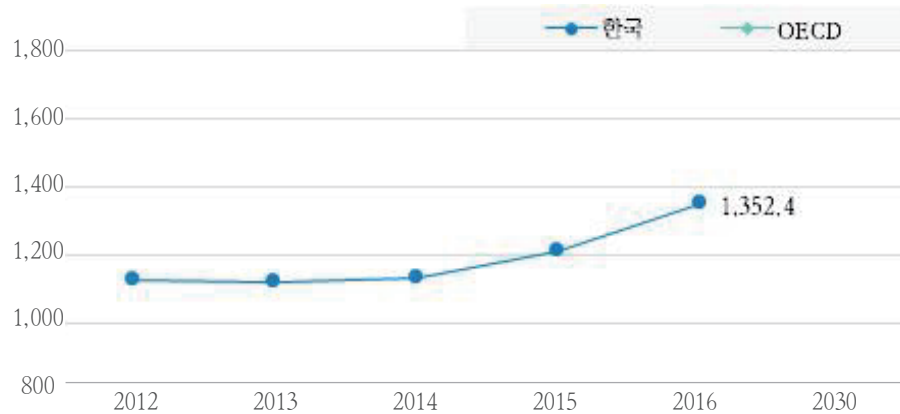
산정방법: (해면 양식분야 면허어업 총 생산량/해면 양식분야 총 면허 건 수)×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123.7	1,121.2	1,128.8	1,207.6	1,352.4	😊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해양수산부

진단

- 면허권당 양식어업량은 2013년에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해면 양식분야 총 면허권은 면허 및 허가(해상종묘, 육상종묘, 육상양식)를 합한 것으로 면허권수는 2012년 이후 증가하다 2016년에는 감소했음.
- 양식어업 생산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산 자원의 남획과 오염된 환경에서 어촌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양식어업 총생산량과 해면 면허권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생산량(톤)	1,488,950	1,515,210	1,546,824	1,661,112	1,837,608
면허건수	13,250	13,514	13,703	13,725	13,588

수량 취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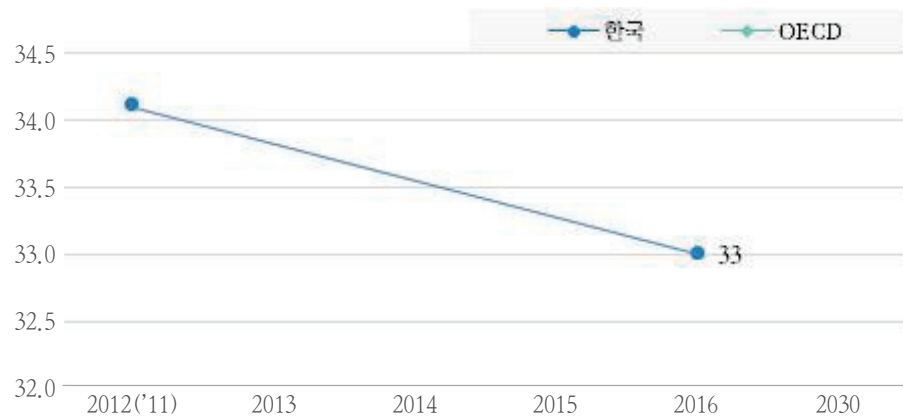
단위: %

일 년 동안 측정된 이용가능한 수자원 중 이용량(유지용수량 제외) 비율
산정방법: [이용량(유지용수량 제외)/이용 가능 수자원량] × 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4.1('11)	-	-	-	33.0	😊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

진단

- 우리나라 수자원 중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이용량은 2012년 34.1%에서 2016년 33.0%로 감소하여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2016년에 발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

수자원 총량 (1,323 억㎥)		
손실량(563억㎥)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760억㎥)	
	바다 유실 (388억㎥)	총 이용량 (372억㎥)
		생활·농업·공업용수로 이용 (251억㎥)
		하천유지용수 (12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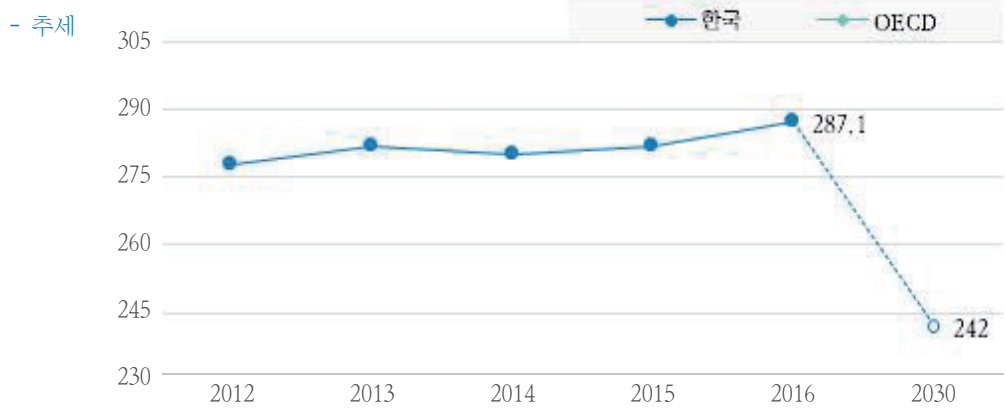
- 취수율은 물 소비량을 줄이고 물 재이용량을 늘려야 개선되는 지표임.

1인 1일 물 소비량 (사용량 기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
산정방법: 상수 급수량/전국 인구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78.0	281.8	279.9	282.0	287.1	☹️	242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상수도통계
국가목표: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 평균: 256(2010)

진단

- 1인당 1일 물 소비량은 소폭 등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의 1인당 1일 물소비량은 287.1L/인 임.
- 2030년의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물 소비량 목표는 242 L/인 으로서 2016년 소비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OECD 국가의 1인당 1일 물소비량 평균은 2010년에 256 L/인 으로 우리나라의 현황과 큰 폭의 차이가 있음.
- 1인당 1일 가정용수 사용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인당 1일 182.9 L를 소비함.

〈1인당 1일 가정용수 사용량, L/인/일〉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정용수 사용량	177.5	178.9	178.4	180.3	182.9

- 1인당 1일 물소비량 감소를 위해서는 업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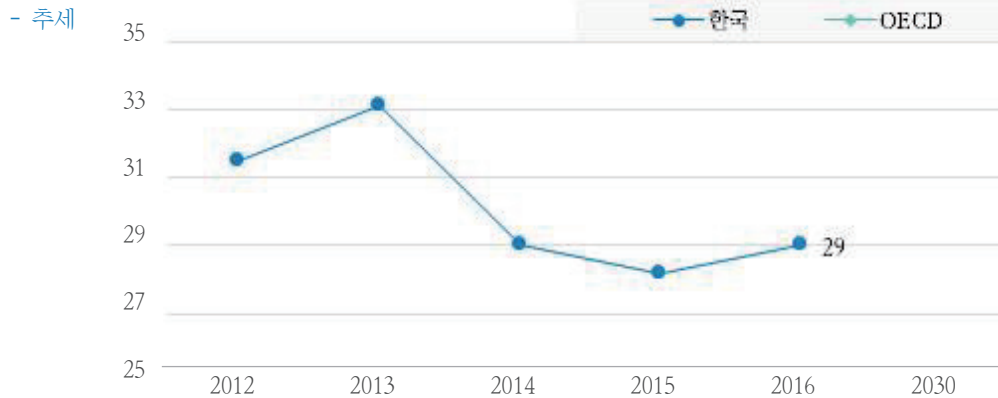
수량 물 재이용량

단위: 톤/년/인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중수도 이용량, 빗물사용량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값
산정방법: 당해연도(하수처리수 재이용량 + 중수도 이용량 + 빗물 이용량)/인구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1.5	33.1	29.0	28.2	29.0	☹️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하수도통계

진단

- 물재이용량은 2013년에 소폭 증가했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1인당 29톤/년 임.

〈물 재이용량 현황〉

	2012	2014	2016
하수재이용량 (천 톤/년)	872,316	942,879	1,121,048
중수도이용량 (㎥/일)	889,43	1,049,092	735,419
빗물사용량 (㎥/년)	8,295,258	7,137,180	7,402,382

- 물 재이용량 실태를 보면 하수재이용량은 증가하였지만 중수도 이용량과 빗물사용량은 감소하여 물재이용 총량이 감소함.
- 따라서 물재이용 정책은 우선 중수도 이용과 빗물 재이용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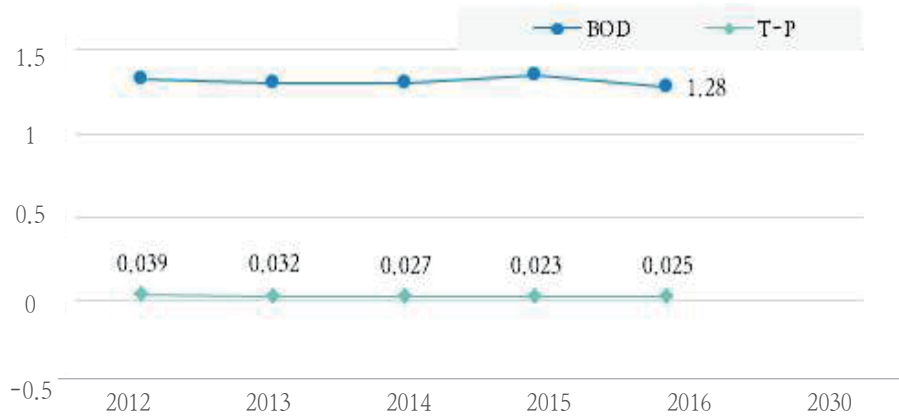
4대강 수질오염도

4대강 상수원의 BOD, T-P 평균 측정 농도
(팔당, 물금, 대청, 주암)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BOD	1.33	1.30	1.30	1.35	1.28	😊	
T-P	0.039	0.032	0.027	0.023	0.025	😊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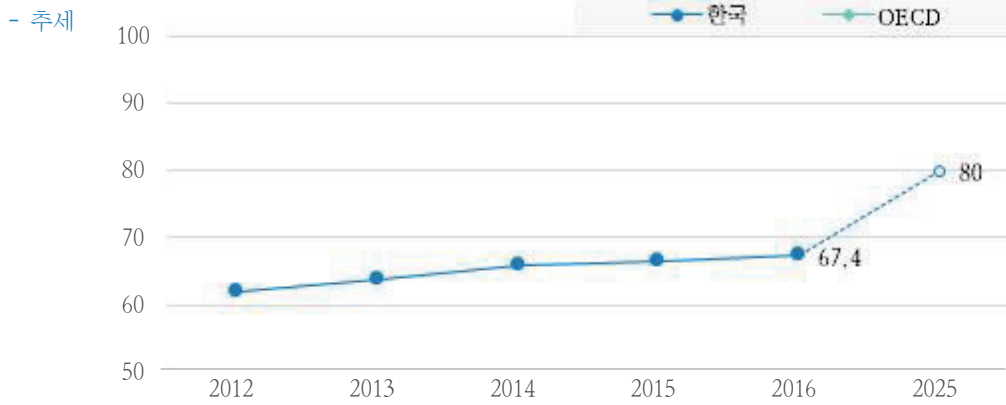
- BOD로 측정된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오염도는 2015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4대강의 T-P농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나 2016년에 소폭 증가하였음.
- 측정지점은 한강의 팔당댐, 낙동강 물금, 금강의 대청댐, 영산강 주암댐임.
- 4대강의 경우는 녹조에 의한 오염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오염 체감도가 높음.
- 미세먼지나 오존 등의 대기지표와 더불어 수질오염은 대표적인 환경지표이기 때문에 이들 지표의 개선이 없다면 국민들이 환경의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움.
- 4대강 수질의 개선은 수문개방과 보 철거 시책의 효과에 따라 달성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등 경제와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농어촌 하수도보급률

군 지역 인구 중 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비율
 산정방법: (하수처리 군지역 인구/총 군지역 인구)×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5(목표)
	62.1	63.7	65.9	66.5	67.4	😊	80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하수도통계
 국가목표: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진단

- 군 지역 인구 중 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 비율은 2012년 이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67.4%로 나타남.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의 목표는 2025년 80%임.
- 우리나라 전체의 하수도 보급률은 90%가 넘었으나 농어촌 지역과 격차가 있음.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하천의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보호, 지역의 공중위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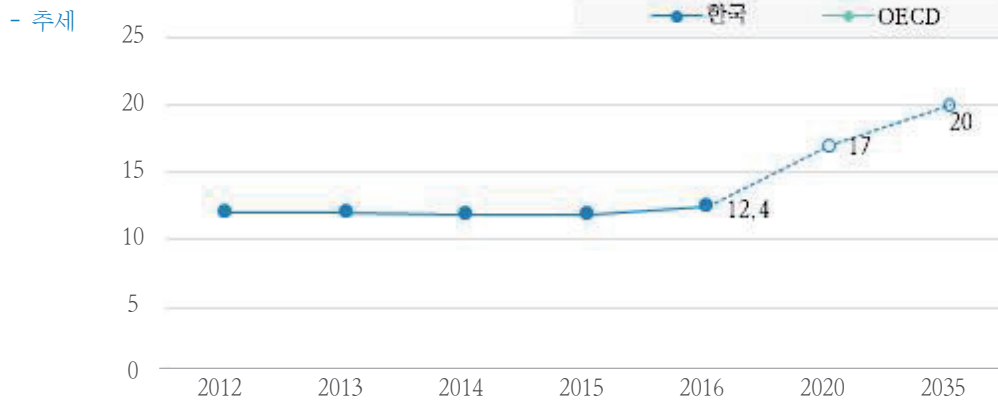
생태계 자연보호지역 비율

단위: %

국토 면적 중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
산정방법: 자연환경보호지역면적/국토면적×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	2035
	12.0	12.0	11.9	11.9	12.4	😊	17	20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국가목표: 제4차 환경종합계획

진단

-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소폭의 등락 이후 2016년에 증가함.
- 자연환경보호지역에는 생태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이 속함.
- 제4차 환경종합계획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2020년까지 17%, 2035년까지 20%로 늘리기로 계획함.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km ²)
생태 경관 보전 지역	281,454
습지보호구역	365.97
특정도서	13,237
자연공원	8,089
야생동식물보호구역	947,70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6,142
백두대간보호지역	2,756
합계	12,479.51

출처: 2017 환경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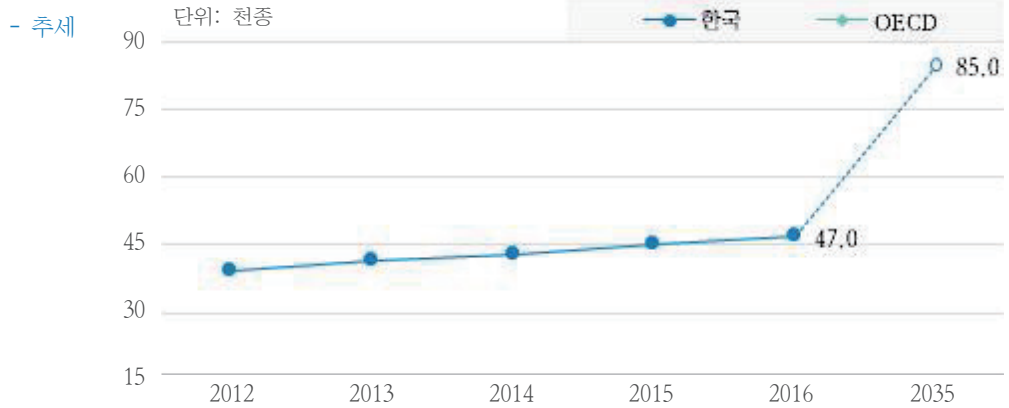
생태계
국가 생물종 목록 수

단위: 종

우리나라에서 존재가 확인된 생물종 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5(목표)
	39,150	41,483	42,756	45,295	47,003	😊	85,000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국가목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진단

- 국가 생물종 목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35년에 85,000종의 고유생물을 목록화할 계획임.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생물다양성 조사 등 한반도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표본 확보 확대 대책을 통해 목록 수를 늘려 나갈 방침임.
- 국가 생물종 목록은 2017년 현재는 척추동물(1,984종), 무척추동물(26,655종), 균류-지의류(5,065종), 식물(5,443), 조류(5,920종), 원생생물(1,890종), 원핵생물(2,079종)의 총 49,027종이 목록화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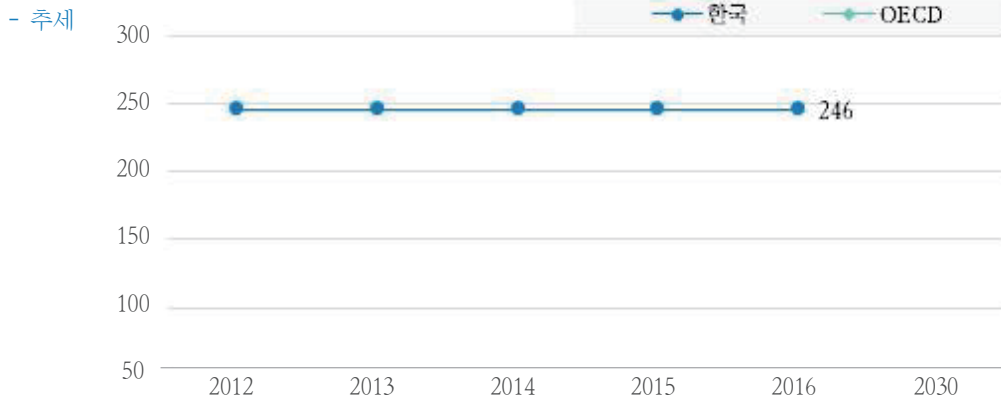
생태계 멸종위기종 수

단위: 종

야생 동식물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5(목표)
	246	246	246	246	246	중립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진단

-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수는 2012년 246종 이후 변함이 없음.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전략인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와 관련이 있는 지표임.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가 2017년에 267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환경부의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의 정책 과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화함을 의미.
- 이외에도 보호지역이 적고 생태적 연결성이 미흡하며 각종 개발에 의한 생태계 건강성 훼손 등이 멸종위기종 증가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멸종위기종 수 지표는 생태계 건강성을 가늠하거나 보호지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집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표임.
-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에는 갯벌면적 증감 등 해양 관련 지표들과 수질·대기·연안오염 지표와 관련이 있음.

경제분야 지표평가

지표명	추세					평가 ¹⁾	목표
	2012	2013	2014	2015	2016		
1 국내총생산(조원) (GDP)	1,377.5	1,429.4	1,486.1	1,564.1	1,641.8	😊	
2 1인당 GDP(달러)	24,349.9	25,885.6	27,804.5	27,097.1	27,606.7	😊	37,833 ('30)
3 경제 성장률(%)	2.3	2.9	3.3	2.8	2.8	😊	
4 GDP 대비 순 투자율(%)	29.6	29.3	29.2	29.3	29.7	😊	33 ('20)
5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47.7	49.5	51.2	50.6	50.9	😊	
6 소비자 물가지수(2015=100)	96.79	98.05	99.30	100	100.97	중립	
7 무역수지(백만 달러)	28,285	44,047	47,150	90,257	89,410	😊	
8 조세부담률(%)	18.7	17.9	18.0	18.5	19.4	중립	
9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2.2	34.3	35.9	37.8	38.3	😞	40.7('20)
10 GNI 대비 ODA 비율(%)	0.14	0.13	0.13	0.14	0.16	😊	0.30('35)
11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인)	5.55	5.56	5.58	5.64	5.75	😞	
12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3.2	3.5	4.1	4.6	4.8	😊	11('35)
13 에너지 원단위(toe/백만 원)	0.208	0.203	0.198	0.196	0.195	😊	0.226('20) 0.185('30) 0.180('35)
14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ton/일)	382,009	380,709	388,486	404,812	415,345	😞	
15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12,501	12,417	13,177	13,410	13,794	😞	
16 방사성폐기물 발생량(200L 환산드럼)	1,843	1,971	2,061	1,924	1,736	😊	
17 폐기물 재활용률(%)	84.4	83.9	84.8	85.2	85.7	😊	97('35)
18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9.6	41.5	42.0	40.3	41.3	😊	52('30)
19 자전거도로 총연장(km)	17,077	18,281	19,717	20,789	21,179	😊	
20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대)	75,863	105,044	140,297	180,332	244,071	😊	3,300,000 ('25)
2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천명)	18,253	18,783	19,199	20,025	20,556	😊	
22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2,933	2,968	2,903	2,912	2,936	😊	
23 GDP 대비 R&D 지출 비율(%)	4.03	4.15	4.29	4.22	4.24	😊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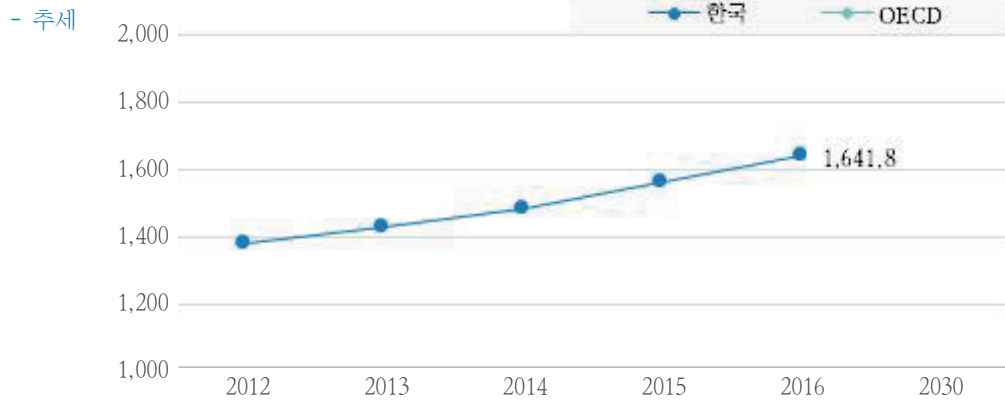
1) : 2012년 대비 2016년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국내총생산(GDP)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1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순 가치의 합계.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377.5	1,429.4	1,486.1	1,564.1	1,641.8	😊	



- 출처 국가추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진단

-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음.
- 이 지표는 다른 분야의 지표들, 지니계수, 빈곤율, 비정규직 비율 등과 같은 형평성 관련 지표와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의 경제 지표와 같이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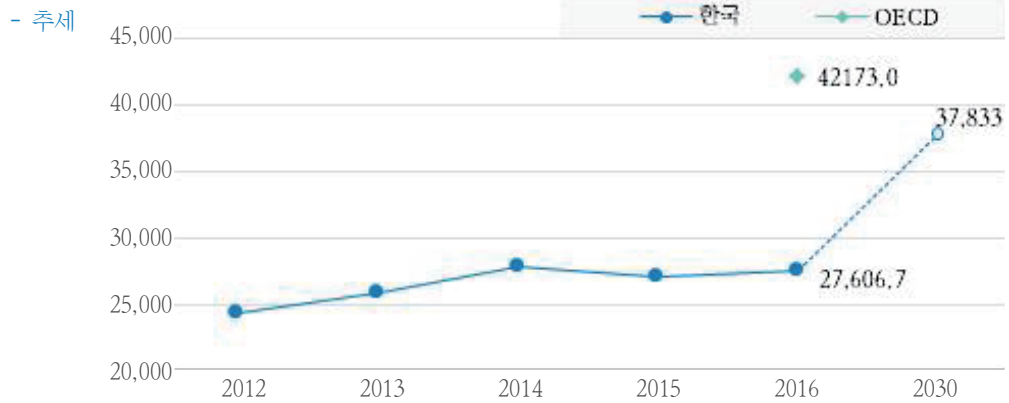
경제이행 1인당 GDP

단위: 달러

현재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연간 GDP를 인구로 나눈 값.
산정방법: GDP/국민인구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4,349.9	25,885.6	27,804.5	27,097.1	27,606.7	😊	37,833



- 출처
국가추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가목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보고서
OECD: OECD Data(Gross domestic product) 2016평균 - 42,173

진단

- 1인당 GDP는 2012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증가 추세로 나타남.
- 2016년의 국내총생산이 2012년 대비 19% 증가한 데에 비해 1인당 GDP는 13.3% 증가하여 실질적인 경제여건을 판단해 볼 수 있음.
- 2030년의 1인당 GDP 목표는 37,833달러이며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 평균은 2016년에 42,173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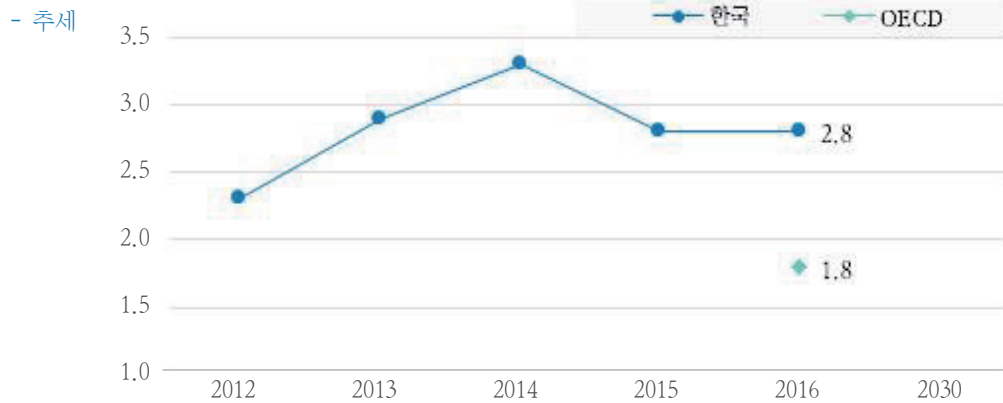
경제이행 경제성장률

단위:%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율
산정방법: $\{(\text{금년도 불변 GDP} - \text{전년도 불변 GDP}) / \text{전년도 불변 GDP} \times 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3	2.9	3.3	2.8	2.8	😊	



- 출처 국가추세 : 한국은행(「국민소득」)
OECD : OECD Economic Outlook No. 10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 참조

진단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4년 3.3%까지 증가하다 다시 하락하여 2015년과 2016년에 2.8%를 기록.
-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평균 1.8%로 우리나라와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음.
- 경제성장률의 개선이 지속가능발전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총생산이나 1인당 GDP와 같이 기본적인 성장 지표로서 경제발전 상태를 알려주는 총체적인 지표임.
- 환경적· 사회적 악화가 역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경제성장률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움.
-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 빈곤율 등과 같은 형평성 측면의 지표와 고용률이나 비정규직 비율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GDP 대비 순 투자율

GDP 대비 총 생산자본 형성 비율(불변가격 기준). 총 생산자본 형성액은 총생산과 관련한 순 투자를 측정.

산정방법: 총투자/국민총처분가능소득×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29.6	29.3	29.2	29.3	29.7	😊	33

- 추세

연도	한국 (%)	OECD (%)
2012	29.6	-
2013	29.3	-
2014	29.2	-
2015	29.3	-
2016	29.7	-
2020(목표)	33	-

- 출처 국가추세: 한국은행(국민계정)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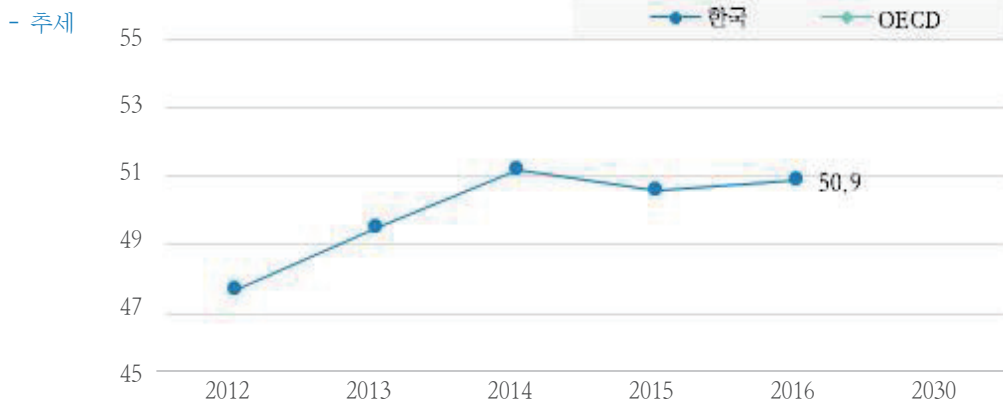
- GDP 대비 순 투자율은 2012년 이후 큰 변동 없이 29% 대를 유지하고 있음.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 GDP 대비 순투자율 목표는 33%임.
- 순 투자율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초를 측정하는 것으로 발전 과정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 자본의 투입을 의미함.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의 경제분야 목표인 ‘포용적 혁신 경제’ 중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전략 관련 지표로 미래산업 육성,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등의 세부이행과제를 촉진하고 평가할 수 있음.
- GDP 대비 순투자율은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지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

전체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부가한 가치 중 중소기업이 부가한 가치 비율
 산정방법: (중소기업 제조업 부가가치/전체 제조업 부가가치)×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47.7	49.5	51.2	50.6	50.9	😊	



- 출처
 국가추세: 12년~14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조사통계)
 15년~16년: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주제별통계 -생산성·경쟁력 -부가가치(명목, 광업제조업조사)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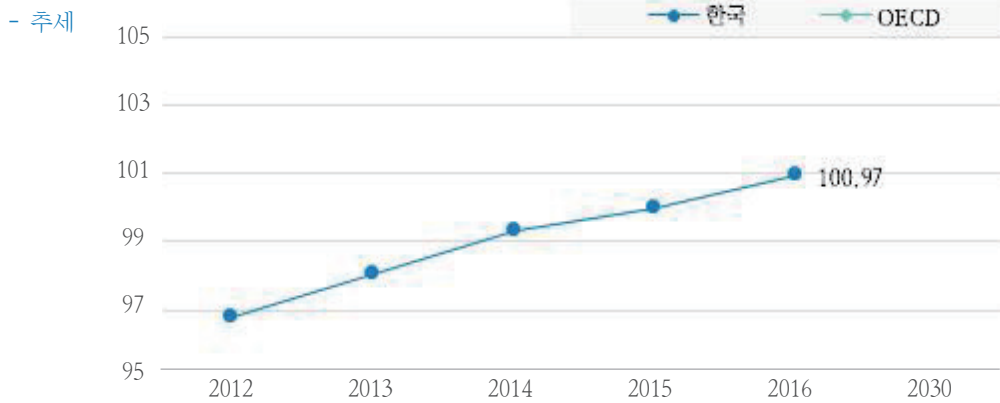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 생산과정에서 부가한 가치 중 중소기업이 부가한 가치 비율은 2012년 47.7%에서 2014년 51.2%로 증가한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6년에는 50.9%로 나타남.
-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은 ‘포용적 혁신경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혁신형 창업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의 이행과제와 관계가 있음.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 2015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0분비로 산출, 460개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산출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96.79	98.05	99.30	100.00	100.97	중립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 e-나라지표

진단

-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도시간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생활물가지수나 체감물가와와는 차이가 있음.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이나 구매력 등을 가늠할 수 있음.

무역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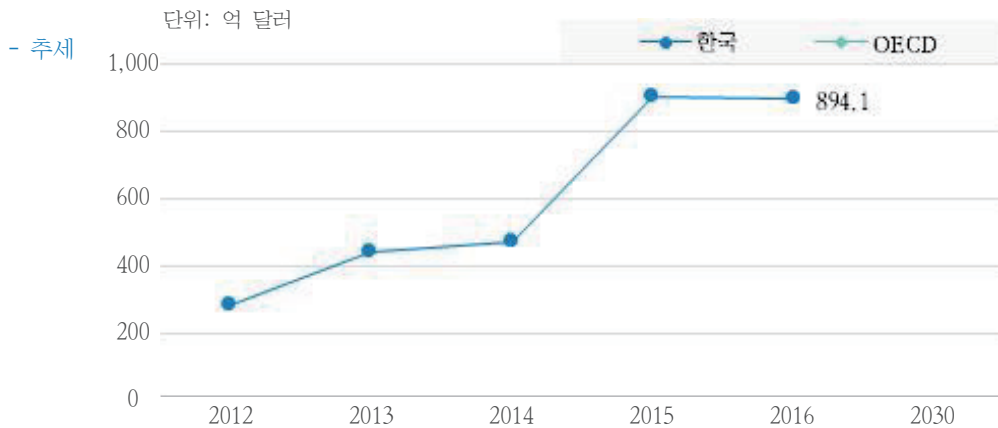
일정 기간의 수출입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 액.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 일정기간 중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

산정방법: 상품 및 서비스 부분의 수출액 - 수입액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8,285	44,047	47,150	90,257	89,410	😊	



- 출처 국가추세: 12년~14년 한국은행(국제수지동향)
15년~16년 통계청(e-나라지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진단

-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완만히 상승하다 2015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6년 894.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과기준)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임.
- 무역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표로 일반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긍정적이거나 다만 통화량 증가로 인한 통화관리 어려움이나 국가 간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
- 고용률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중소기업 부가가치 지수 등과 연계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재정상태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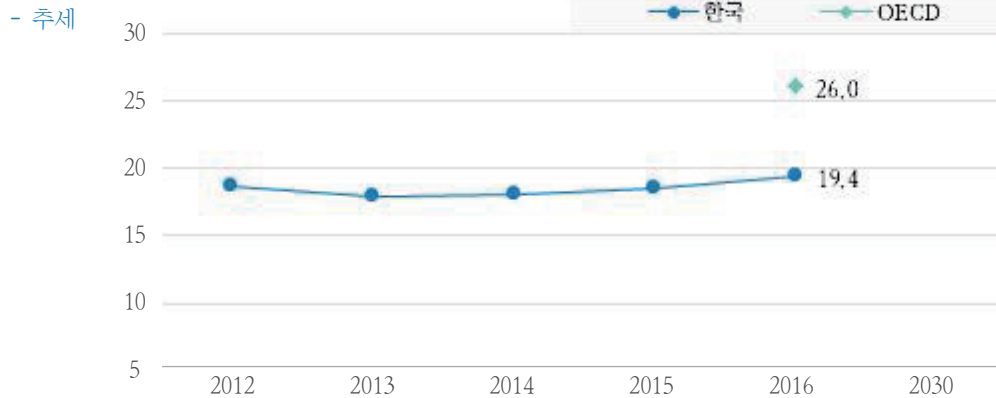
단위:%

경상 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현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정도.

산정방법: {세금(국세+지방세)/당해연도경상GDP}×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8.7	17.9	18.0	18.5	19.4	중립	



- 출처
국가추세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지방재정 365
OECD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진단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19% 대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음.
-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6%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31%로서 OECD 평균 34.26%에 비해 낮음.
- 유럽 선진국가들 대부분은 국민부담률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덴마크 (45.94%), 프랑스(45.27%), 스웨덴 (44.12%) 등 많은 나라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음.
- 미국, 스위스, 터키, 아일랜드의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 조세부담률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예산규모와 국가 활동 규모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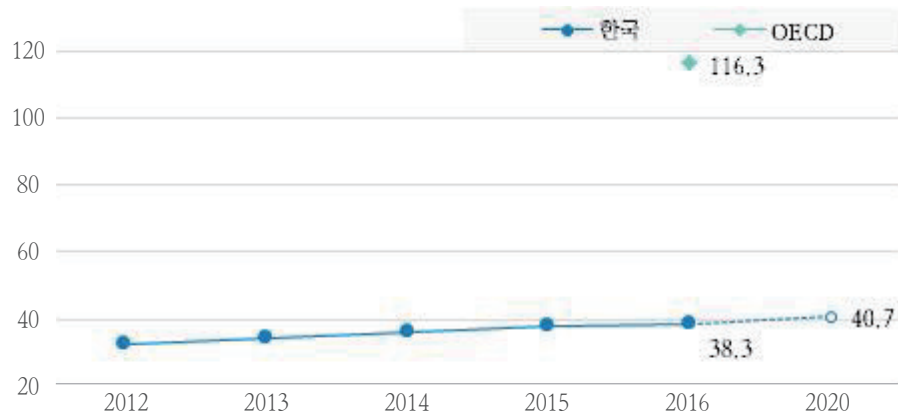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채무란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산정방법: (국가채무/GDP)×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32.2	34.3	35.9	37.8	38.3	☹️	40.7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기획재정부(주요경제지표)
 국가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00(November 2016)

진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38.3%로 나타남.
- 국가 채무는 IMF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즉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중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 역시 제한을 받게 됨.
-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16.3%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함.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독일 68.2%, 영국 88.2%, 프랑스 96.6%, 미국 107.2%, 일본 235.6% 임.

GNI 대비 ODA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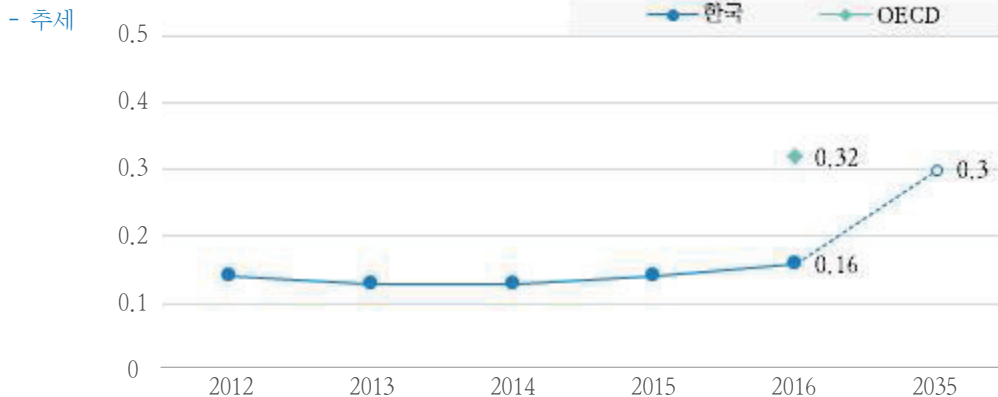
GNI 대비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ODA비율.

ODA: 공여국의 공적기관이나 그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다자기구에 대해서 제공하는 재원의 흐름으로 1)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2)양허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수익률을 10%로 계산하여 최소한 25% 이상의 증여율로 제공되는 것

산정방법: (당해연도ODA지원금액/GNI)×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5(목표)
	0.14	0.13	0.13	0.14	0.16	😊	0.30



- 출처
 국가추세: 통계청(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순지출기준))
 국가목표: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보고서
 OECD: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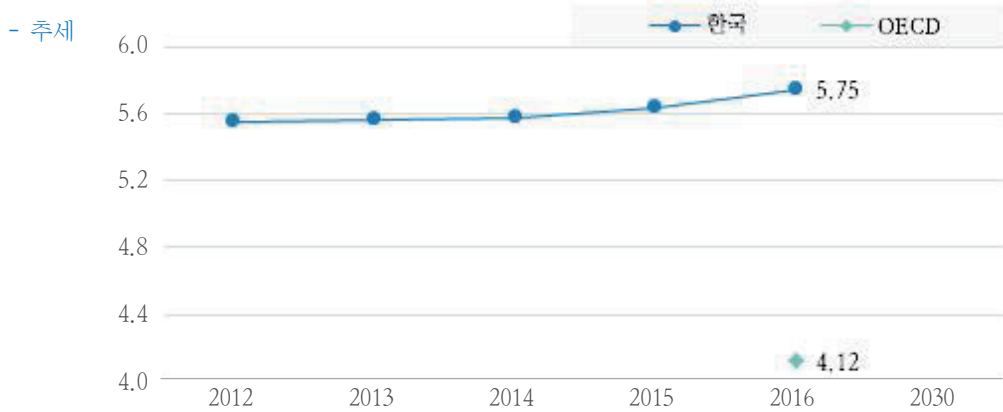
-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 0.32%
-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중은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했음.
-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엔이 권고한 0.7%에 크게 못 미치고, 선진국 평균(0.30%)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ODA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노르웨이가 1.11%로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 1.00%, 스웨덴 0.94%의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와 ODA/GNI 비율이 비슷한 나라는 일본(0.2%), 포르투갈(0.7%) 미국(0.6%), 슬로베니아(0.6%) 등이 있음.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눈 값. * 에너지의 국내 생산 및 순수입, 재고의 증감을 포함하며, 최종에너지소비와 전환 손실을 합한 양과 같음.
산정방법: 1차 에너지 소비량/인구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5.55	5.56	5.58	5.64	5.75	☹️	



- 출처: 국가추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OECD: World Energy Balances, IEA, 2017

진단

- OECD(2015): 4.12 toe/인
-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5.75 toe/인임.
- OECD 회원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평균은 4.12 toe/인 로 우리나라와 큰 폭의 차이를 보임.
-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인 ‘포용적 혁신경제’의 전략인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관련된 지표임.
-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비한 지표의 변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소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과 수송 부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반면 가정·상업 부문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부문별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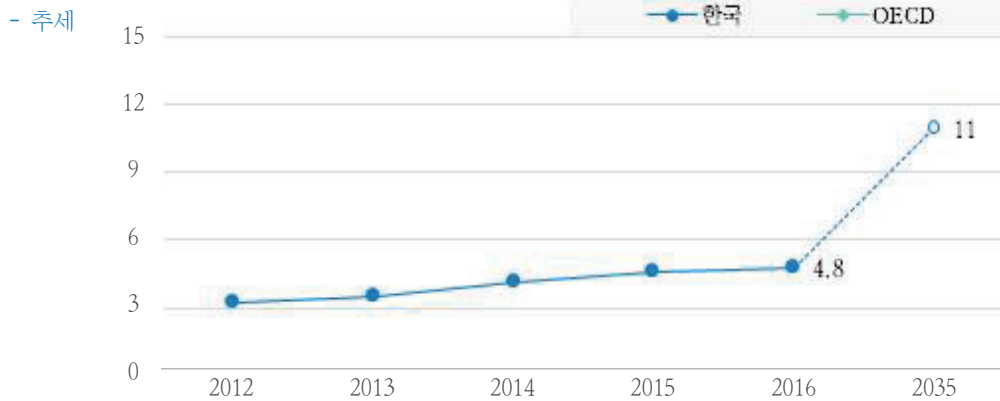
총 1차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8개 분야).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개 분야))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공급량/1차에너지공급량)×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5(목표)
	3.2	3.5	4.1	4.6	4.8	😊	11



- 출처
- 국가추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국가목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고서
 - OECD: IEA의 Key Renewables Trends: Development of Renewables and Waste in the World(2016.7.28)

진단

-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에 11%까지 확대할 계획임.
- 주요국의 2035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전망은 미국 13%, 일본 13%, 중국 10%, OECD 회원국 중 유럽 21%임.
- 2035년의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중심의 보급정책을 열·수송 부문으로 확장하고 태양광 렌탈사업 추진 등 민간 주도형 보급 제도를 확대할 방침임.
-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가구 비율 등 성과지표를 활용해 목표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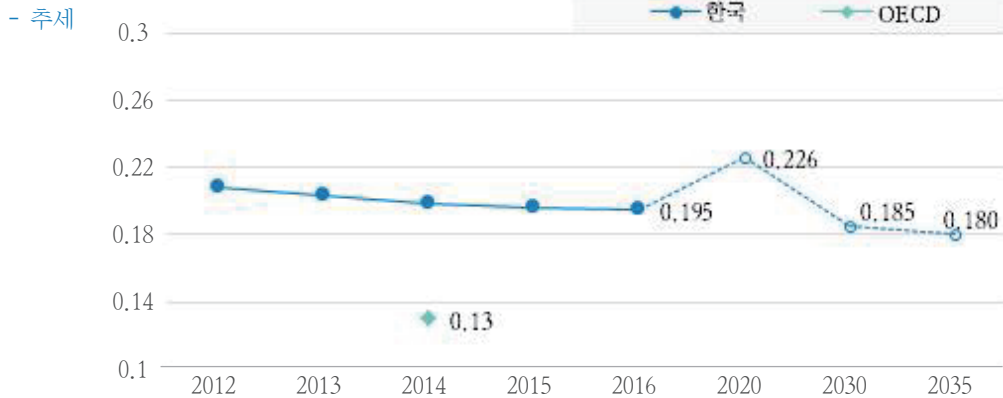
에너지 사용 에너지 원단위

단위: toe/백만 원

국가별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임. 산업부문별 에너지소비 효율성, 산업구조의 환경친화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산정방법: 당해연도 1차 에너지 소비량/GDP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	2030	2035
	0.208	0.203	0.198	0.196	0.195	😊	0.226	0.185	0.180



- 출처
국가추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국가목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진단

- OECD (2014): 0.130 toe/백만 원
- 에너지원단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긍정적임.
- 2014년 OECD 회원국의 에너지원단위 평균은 0.130 toe/백만 원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035년 목표는 0.185 toe/백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이 OECD 국가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간의 에너지정책이 경제성장과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노력이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적 성장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저소비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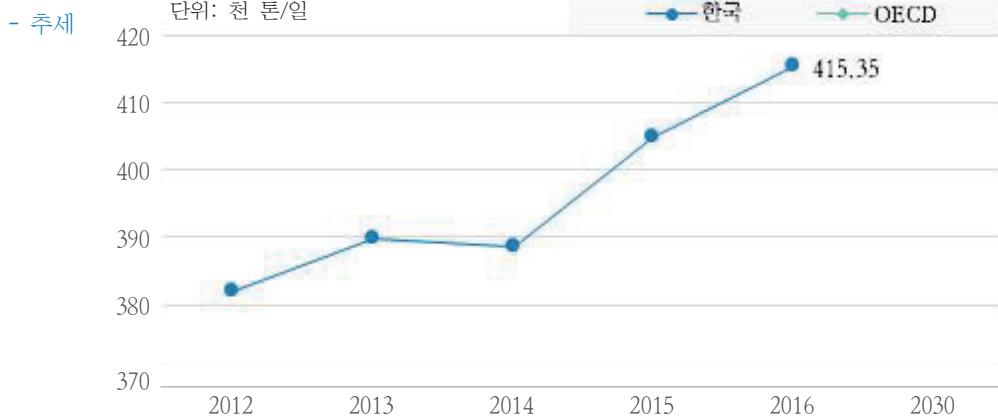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을 일단위로 나누어
측정한 값

산정방법: 당해연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365일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82,009	380,709	388,486	404,812	415,345	☹️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진단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국내총생산량 증가 등 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폐기물 재활용률 또한 201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추세이며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함.

〈1인당 생활계폐기물, kg/인/일〉

2012	2013	2014	2015	2016
0.95	0.94	0.95	0.97	1.01

-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중에 있으므로 향후 목표와 세부 정책이 설정되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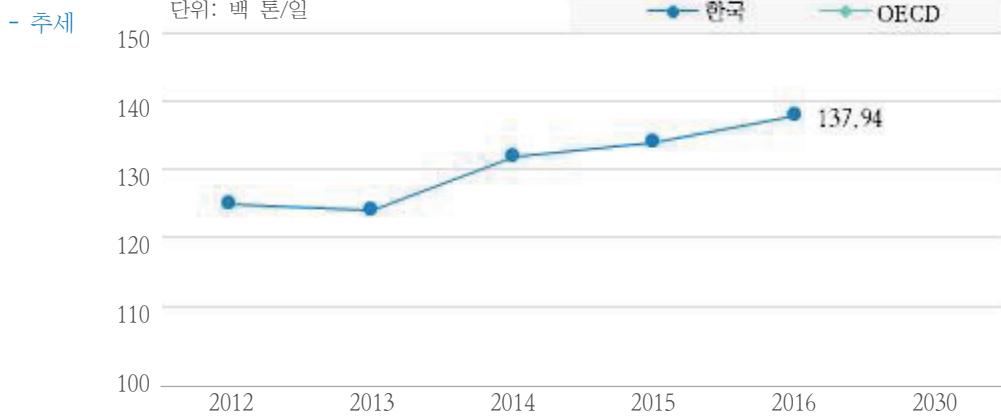
폐기물 관리 지정폐기물 발생량

단위: ton/일

지정폐기물의 총 발생량을 일 단위로 측정한 값.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산정방법: 당해연도 지정폐기물 총 발생량/365일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2,501	12,417	13,177	13,410	13,794	☹️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진단

-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지정폐기물은 유해성분을 함유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히 적정관리와 처리가 중요함.
- 2016년의 지정폐기물 발생량 13,794톤/일 중 57.5%가 재활용되고 19.9% 2,668톤/일은 매립, 16.6% 2,188톤/일은 소각처리 되었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감량화 방안의 수립과 적절한 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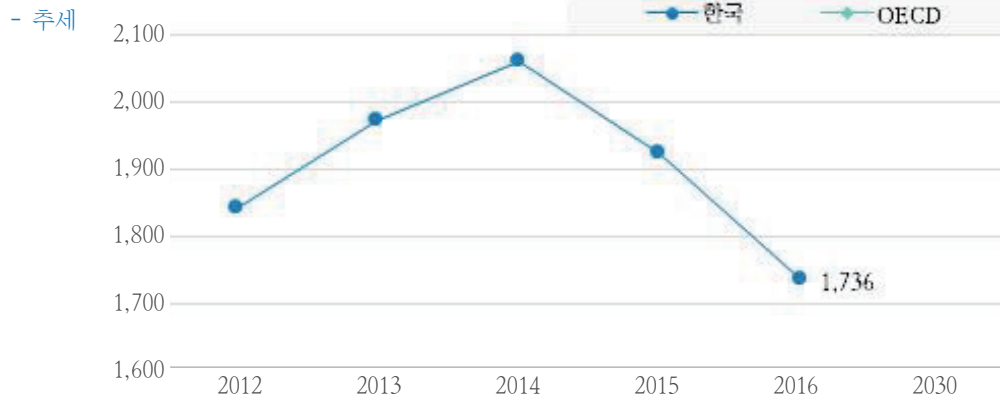
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단위:
200L 환산드럼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843	1,971	2,061	1,924	1,736	😊	



- 출처 국가추세: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발전백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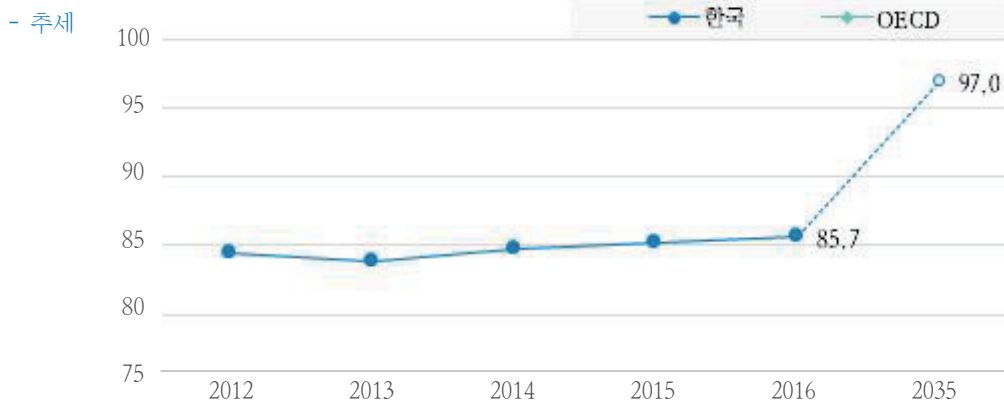
-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6월 고리 원자력 1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되었고 2018년에는 월성원자력 1호기의 가동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자체보다는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 및 안전한 처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폐기물 재활용률

잔체 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비율.
 산정방법: 폐기물재활용처리량/전체폐기물발생량×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5(목표)
	84.4	83.9	84.8	85.2	85.7	😊	97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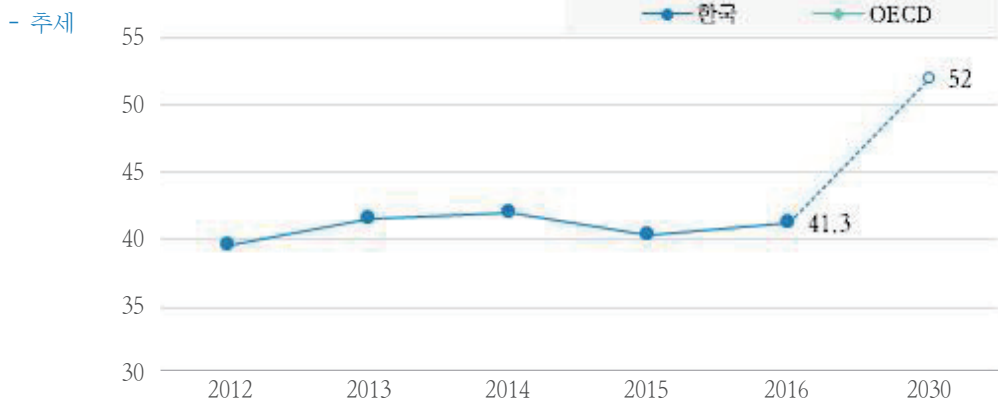
-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201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2016년에는 60% 로 나타남. 재활용률은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 2007년 하반기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조치,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재활용 여건이 악화되고, 2018년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거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수거거부 사태의 재발방지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필요.
- 2018년 5월 정부에서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며 아울러 폐기물을 생산하는 산업계와 상업계,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단(시내버스, 지하철)이 차지하는 수송 분담을 나타내는 비율.
 산정방법: (대도시권버스+지하철수송량)/대도시권여객수송량×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39.6	41.5	42.0	40.3	41.3	😊	52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연보), 통계청(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교통안전공단)
 국가목표: 국토교통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진단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음.
-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2008년 대비하여 수송분담률이 감소하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으며 통행속도 감소 및 노선버스 사고 부상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평가함.
- 향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감소, 고령화, 교통 관련 기술발전,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량 절감 요구 등이 있음
- 2030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52%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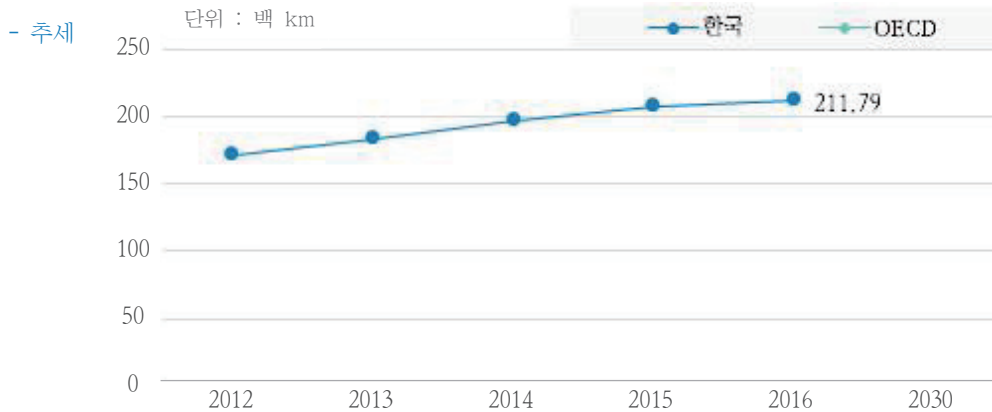
자전거도로 총연장

전국 자전거 도로의 길이(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포함함)

산정방법: 시도별 자전거도로 연장의 합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17,077	18,281	19,717	20,789	21,179	😊	



- 출처 국가추세: 환경부(환경통계연감), 통계청(국가주요지표-자전거도로현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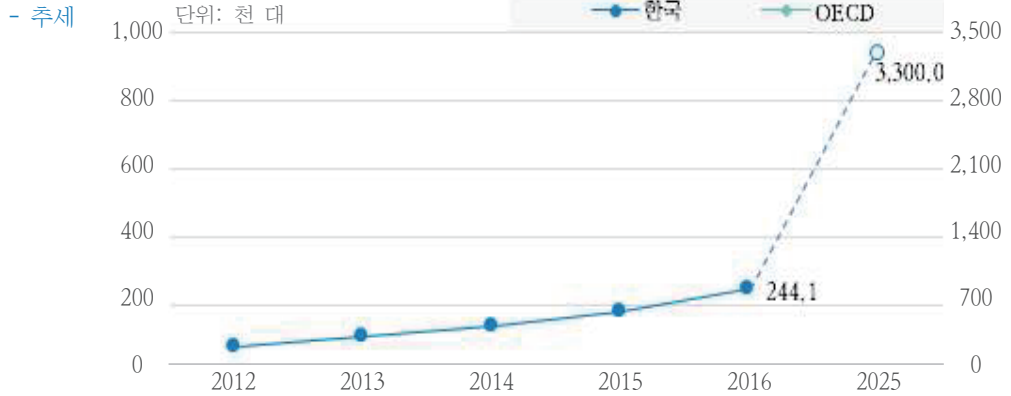
- 자전거 도로 총 연장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자전거 활성화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며,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공동체의 연계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임.
- 2016년도의 자전거 이용인구는 전 국민의 33.5%인 1,335만 명임. (한국교통연구원, 1개월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 통근통학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수는 2015년에 386,995명으로 통근통학 수송분담률 1.43%임.
- 주요 국가별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3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덴마크 23%, 스웨덴과 일본 17%순이었음.
-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사망자수는 감소한 반면 부상자수는 증가하여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5(목표)
	75,863	105,044	140,297	180,332	244,071	😊	3,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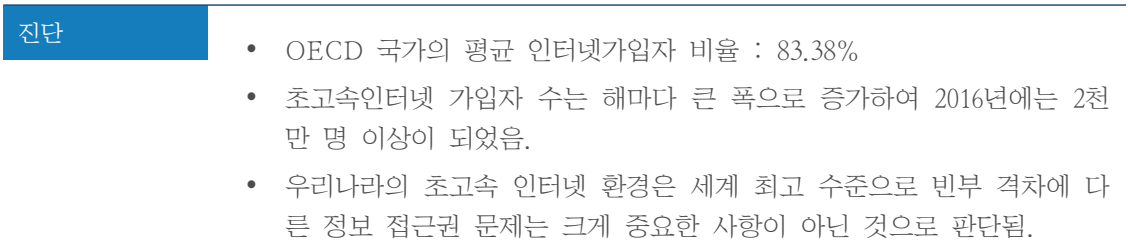
- 출처
국가추세: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부)
국가목표: 제 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진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4만 여대에 달함.
- 2015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은 1%도 안 됨.
-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구매보조금 정책 등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함.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998년 초고속 인터넷 도입 이후 국내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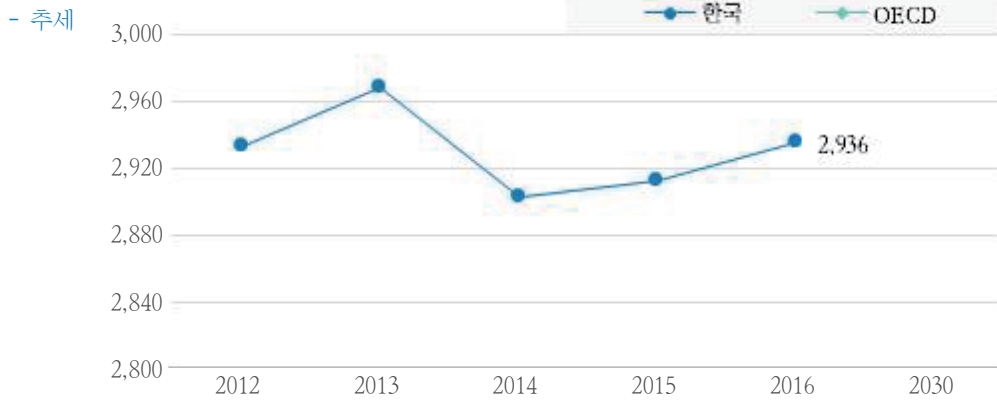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행정안전부의 민원24서비스를 통한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 가능한 민원 수.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30(목표)
	2,933	2,968	2,903	2,912	2,936	😊	



- 출처 국가추세: 행정자치부(민원24 시스템)

진단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는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항상 2,900여종에 달하고 있음.
- 이는 전체 민원사무 5,099종의 약 60%에 달하고 있음.
- 인터넷을 활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대표 민원 포털인 민원24의 회원은 2015년 현재 14,313천명으로 이용건수는 13,438만 건임.
- 지표 통계를 성별, 나이, 학력별로 구분하여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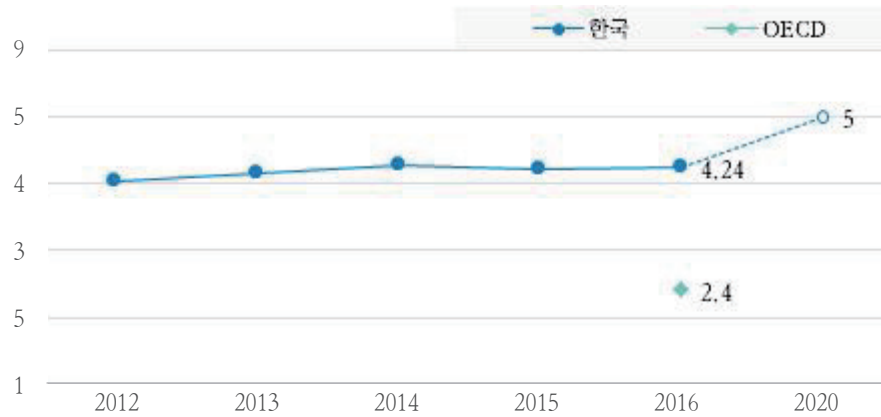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연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사용된 총 연구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정방법: (연구개발투자비/GDP)×100

추세 및 목표치

- 데이터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	2020(목표)
	4.03	4.15	4.29	4.22	4.24	😊	5

- 추세



- 출처

국가추세: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통계)
국가목표: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OECD: OECD Data,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Total, % of GDP, 2016

진단

- OECD 평균 : 2.4%
-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2016년 4.24%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 평균은 2.4%이며 2016년의 EU28개 회원국 평균은 2.03%임.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경제, 사회, 환경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와 세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임.
-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 알맞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제 3 장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

III



1.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개요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체계

-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그림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2) 목표별 주요내용

- 제3차 계획의 4대 목표는 ① 건강한 국토 환경, ② 통합된 안심 사회, ③ 포용적 혁신 경제, ④ 글로벌 책임국가이며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음.

가. 건강한 국토환경

〈표 3-1〉 (목표 1) 건강한 국토 환경의 전략과 이행과제

전략(3개)	이행과제 (10개)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 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③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③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③ 물순환 체계 강화

나. 통합된 안심사회

〈표 3-2〉 (목표 2) 통합된 안심 사회의 전략과 이행과제

전략(4개)	이행과제 (16개)
2-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② 고용-복지 연계 강화 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2-2. 지역 간 격차 해소	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② 어린이 건강 증진 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④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다. 포용적 혁신 경제

〈표 3-3〉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의 전략과 이행과제

전략(3개)	이행과제 (12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①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④ 저탄소생활 확산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라. 글로벌 책임국가

〈표 3-4〉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의 전략과 이행과제

전략(3개)	이행과제 (8개)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①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②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마.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표 3-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의 전략과 이행과제

전략(1개)	이행과제 (4개)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③ 사회 투명성 제고 ④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2.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이행평가 결과

(1) 평가 총론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별 세부이행계획 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든 목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한 성과지표도 112개 중 32개로 전체의 28.6%를 차지함.
- 측정방식의 한계 등으로 현재 이행평가가 불가능한 지표는 4개(3.6%)였음.

〈표 3-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목표별 평가결과

(단위: 개, (%))

목표	단위	계	이행평가		
			과제완료	추진 중	산정불가
1. 건강한 국토 환경	개 비율	23 (100.0)	6 (26.1)	17 (73.9)	0 (0.0)
2. 통합된 안심 사회	개 비율	40 (100.0)	16 (40.0)	23 (57.5)	1 (2.5)
3. 포용적 혁신 경제	개 비율	35 (100.0)	6 (17.1)	26 (74.3)	3 (8.6)
4. 글로벌 책임 국가	개 비율	9 (100.0)	3 (33.3)	6 (66.7)	0 (0.0)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개 비율	5 (100.0)	1 (20.0)	4 (80.0)	0 (0.0)
합계	개 비율	112 (100.0)	32 (28.6)	76 (67.9)	4 (3.6)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목표 가운데 가장 완료율이 높은 것은 통합된 안심 사회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책임국가(33.3%), 건강한 국토환경(26.1%),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20.0%)의 순으로 완료율이 높게 나타났음.
- 한편 포용적 혁신경제의 완료율은 14.3%로 목표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여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음.

- 앞서 목표별 완료율, 즉 전체 성과지표 중 이미 2020년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비율을 살펴본다면 각 성과지표의 평균적인 달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전체 성과지표 112개의 목표달성도(2020년 목표치 대비) 평균은 77.3%로 양호한 수준임.
- 목표별 달성도 평균은 <그림 3-2>와 같음. 통합된 안심 사회가 83.5%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였음.
- 그 다음으로는 포용적 혁신경제(77.9%), 건강한 국토환경(71.2%), 글로벌 책임국가(70.0%)의 순으로 높은 달성도를 보였음.
- 반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달성도를 보인 것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66.2%)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3-2> 목표별 달성도 평균 (단위: %)

(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별 주요지표 추진현황

가. (목표 1) 건강한 국토 환경

〈표 3-7〉 ‘목표 1. 건강한 국토환경’의 주요 성과지표 추이 및 목표달성도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¹⁾
(전략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1-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	전기차 보급대수	1,871	2,946	5,853	11,767	25,593	156.5천	16.4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mu\text{g}/\text{m}^3$)	25	25	25	25	25	20	80
1-1-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m^2)	36	56	92	110	147	344	42.7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m^2)	8.32	-	9.91	-	-	8.5	100
1-1-③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국토계획평가 실적(건)	13	5	11	33	16	8	100
	산림지역비율(%)	-	-	-	64	64	64	100
1-1-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	-	-	-	3	10	30
	폐기물 매립률(%)	16	16	15	15	-	5	34
(전략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2-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핵심생태축 복원율(%)	-	-	30.9	49.0	52.0	83.3	62.4
	생태하천 복원 구간(km)	1,033	1,149	1,250	1,369	1,471	1,330	100
	자연보호지역비율(%)	6	7	7	11	12	17	68.2
	산림보호구역(천ha)	446	445	445	445	435	455	95.6
1-2-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41,483	42,756	45,295	47,003	49,027	60,000	81.7
	숲 가꾸기 면적(천ha)	306	256	251	235	248	1,000	24.8
	위해우려종 지정	22	-	53	104	127	100	100
1-2-③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연안오염도(ppm)	1.17	1.23	1.21	1.19	1.48	1.09	73.6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국토면적대비)(%)	0.43	0.47	0.48	0.57	0.57	10	5.7

¹⁾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2020년 목표 대비 달성도를 의미함. 2017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측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달성도를 산정하였음. ‘-’는 제출된 자료 가운데 데이터 값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전략3)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3-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7.6	71.4	73.1	76.0	80.0	80.0	100
	물 공급 안전율(%)	86.0	92.6	91.4	92.0	-	93	98.9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32.3	42.4	45.7	46.8	47.2	60	78.7
1-3-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강화	감시물질 지정 항목	28	28	28	30	32	54	59.3
	수질 등급 달성	85.1	79.8	83.3	84.3	86.1 ²⁾	전국 상수원 1등급 이상	86.1
1-3-③ 물 순환 체계 강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2.6	13.5	14.7	15.6	-	15.8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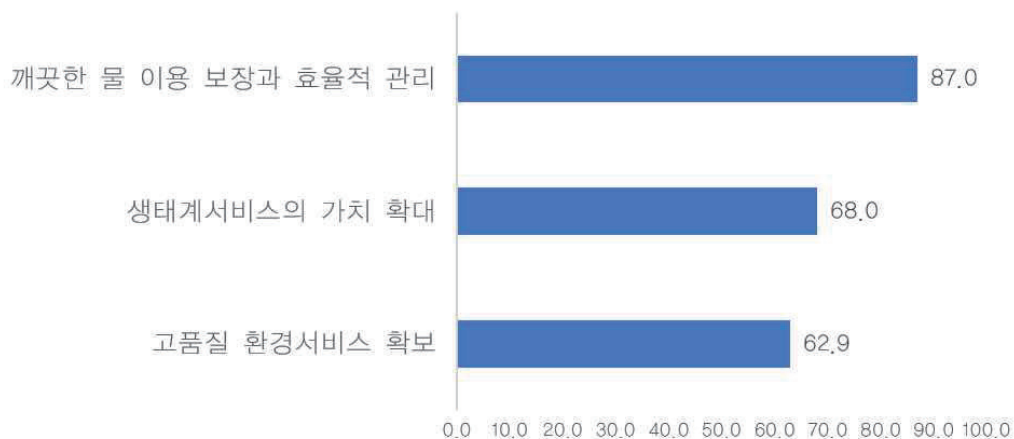
6) 2016년 및 2017년 실적은 통계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적임.

○ **총평**

- 건강한 국토 환경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71.2%로 전체 평균(77.3%)보다는 다소 낮음.
- 총 23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2020년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완료한 경우는 총 6개로 전체의 26.1%를 차지함. 반면 추진 중인 지표는 17개(73.9%)였음.

○ **전략별 평가결과**

- ‘목표 1. 건강한 국토 환경’의 세부 전략은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임.
- 이 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세부전략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87%)였음.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의 평균 달성도는 68%였으며,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는 62.9%로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였음.



〈그림 3-3〉 ‘목표 1 건강한 국토 환경’의 전략별 목표달성도 평균 (단위: %)

나.(목표 2) 통합된 안심 사회

〈표 3-8〉 ‘목표 2. 통합된 안심 사회’의 주요 성과지표 추이 및 목표달성도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전략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	-	-	-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1회, 종합계획 수립	100
	공공임대주택공급(호)	8.1	10.2	12.4	12.5	12.6	11	100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만 명)	-	-	49.5	52.4	54.6	80	68.3
2-1-② 고용-복지 연계 강화	고용복지+센터 개소수	-	10	40	70	98	100	98
	고용-복지 정보 연계수	-	29	34	78	78	60	100
	공공부문 일자리방 연계수	3	-	4	5	2	5	40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률(%)	-	94.8	-	-	96	96.8	99.2
	저상버스 보급률(%)	16.4	18.7	19.9	19	22.4	22.2	100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 비율(%)	80	81	82	83.3	84.2	85	99.1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619	692	785	943	1,053	1,210	87
	30대 여성 고용률(%)	55.5	56.3	56.9	58.2	59.4	58.1	100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5	64.1	63.8	64.6	-	63.8	100
	남성 육아휴직자	2,293	3,421	4,872	7,616	12,043	6,700	100
(전략2) 지역 간 격차 해소								
2-2-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6차 산업화지구(개소)	-	3	9	13	16	16	100
2-2-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개)	15	18	21	24	27	28	96.4
	슬레이트 철거동수(동)	28,604	50,924	78,670	105,795	133,098	180,000	73.9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	88.3	-	-	-	90	98.1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24.7	20.9	23.8	19.5	20.5	25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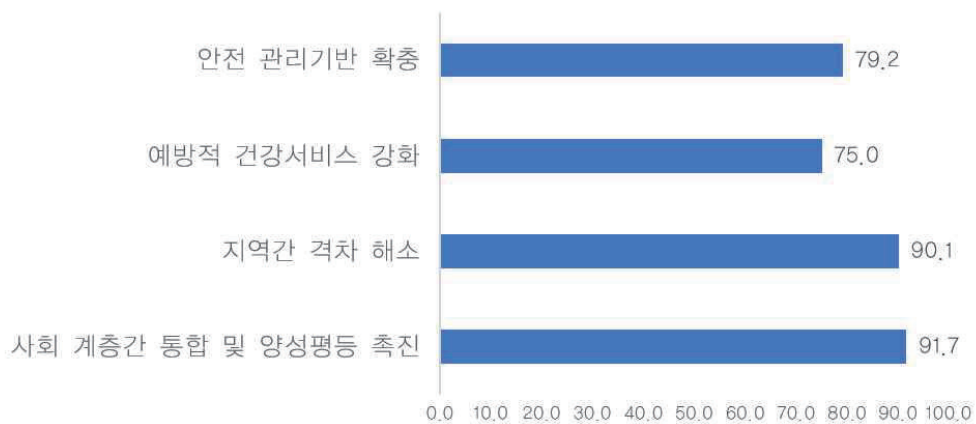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전략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3-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환경기준 설정 물질 수(개)	0	0	0	0	0	5	0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4,027	3,890	3,890	3,669	-	3,500	95.4
2-3-② 어린이 건강 증진	영아사망률(명)	3.0	3.0	2.7	2.8	-	2.8	100
	고위험신생아 의료비 지원율(%)	40.5	29.8	36.8	44.2	-	65.0	68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	-	1,348	1,855	1,610	5,000	32.2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만 명)	67.5	62.2	58.8	56.1	51.3	35	100
2-3-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긴급상황실 운영	-	-	-	운영	운영	운영	100
2-3-④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친환경 농산물재배면적(%)	7.0	4.9	4.5	4.8	4.9	7.5	65.3
	수리안전담 비율(%)	60.7	60.1	60.7	60.9	61.4	80.0	76.8
	비료사용처방 발급 건수(건)	396천	462천	525천	453천	472천	360천	100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개소)	63	64	61	63	66	105	62.9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만 명)	1,357	1,510	1,680	1,638	1,797	1,800	99.8
(전략4) 안전 관리기반 확충								
2-4-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재난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률(%)	0.44	5.37	1.93	1.97	-	'19년 사망자 대비 최근 7년간 연평균 감소율 이상 감소	-
2-4-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상자수(명)	934	806	759	742	589	589	100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1.4	4.1	5	12.7	30.6	50	61.2
2-4-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동차 사고건수(명)	2.2	2.0	1.9	1.8	1.6	1.6	100
	대중교통 분담률(%)	41.5	42.0	40.3	41.3	-	52.0	79.4
	교통약자 배려시설 조성수(개소)	10	14	28	45	58	63	92.1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률(%)	-	-	1.3	1.7	32.3	100	32.3
2-4-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산사태 인명피해(명)	3	0	0	0	2	5	100
	건조일수 당 산불피해 면적(ha/일)	4.56	1.12	3.48	3.23	9.37	4.5	48
	수해 피해액(십억 원)	160	148	15	259	102	207	100

○ 총평

- ‘목표 2. 통합된 안심사회’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83.5%로서 다섯 개 목표 가운데 가장 높음.
- 통합된 안심사회의 성과지표는 총 40개이며 이 중 이미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한 과제는 16개(40%)로 가장 많았음. 정상 추진 중인 과제는 23개로 전체의 57.5%를 차지하였으며, 측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현재 이행 평가가 불가능한 과제는 1개였음(2.5%).

○ 전략별 평가결과

- ‘목표 2. 통합된 안심사회’ 목표의 세부 전략은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지역 간 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안전 관리기반 확충임.
- 이 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것은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91.7%)이었으며, 지역 간 격차 해소(90.1%)와 안전 관리기반 확충(79.2%)이 그 뒤를 이었음.
- 반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인 전략은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75%)였음.



〈그림 3-4〉 ‘목표 2. 통합된 안심 사회’의 전략별 목표달성도 평균 (단위: %)

다.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

〈표 3-9〉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의 주요 성과지표 추이 및 목표달성도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전략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참여 인원	3,379	5,328	11,123	5,851	10,492	15,000	69.9
	청년 고용률(%)	39.5	40.5	41.2	41.7	42.1	48	87.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수(개)	2,464	2,811	2,828	2,861	3,070	3,000	100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비율(%)	18.8	18.7	18.8	18.6	18.6	17.7	95.2
	사고 사망만인률(명)	0.71	0.58	0.53	0.53	0.52	0.39	7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64.2	62.2	65.5	66.3	69.3	55.3	100
3-1-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협약 제도 확산	177	192	209	220	229	220	100
3-1-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환경산업 수출액(십억 원)	7,922	8,194	8,244	8,062	-	9,500	84.9
3-1-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GDP 대비 R&D 지출 비율(%)	4.15	4.29	4.22	4.24	-	5.0	84.8
	GDP 대비 순 투자율(%)	-	29.2	29.1	29.3	-	33	88.8
(전략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3-2-①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재제조 대상제품(개수)	19	39	50	-	65	100	65
	물질흐름분석 통계구축·갱신 급속 수(개)	10	10	15	12	8	20	40
	자원생산성(원/kg)	2,249	2,290	2,261	2,273	-	1,719	75.6
	재활용률(%)	83.9	84.8	85.2	85.7	-	90	95.2
3-2-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중소기업 지원 수 (누계)	1,532	1,645	1,771	1,869	1,909	2,280	83.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정보 및 인식 공유(명)	9,389	12,275	13,964	14,804	15,816	22,000	71.9
	환경경영 보급사업 실시사업장 수(개소)	40	42	45	47	47	50	94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녹색매장 수(개)	201	263	316	395	469	550	85.3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32.9	39.7	42.2	46.1	-	60	76.8
	녹색제품 구매실적(억 원)	-	32,393	33,653	40,613	48,182	72,000	56.4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3-2-④ 저탄소생활 확산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건수(건)	7,192	4,234	5,802	6,387	9,857	9,704	100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 (명수, 개소) ¹⁾	744,590	862,307	995,752	1,033,064	978,910	110 (개소)	산정 불가
	친환경 경제운전 이수 실적(명)	4,993	4,566	2,946	1,206	1,830	8,860	20.7
	탄소포인트제 운영 CO2 절감량(만 톤)	65.1	118	95.1	67.8	78.4	230	34.1

(전략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3-3-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	1,960	2,214	2,020	2,615	-	1,869	100
	에너지절감량(TOE)	357,326	354,784	126,476	127,366	126,133	219,365	57.5
	지역난방 보급가구 수 (만 가구)	231	244	249	270	-	345	78.3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0.203	0.198	0.196	0.195	0.194	0.226	100
3-3-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MW, 누계)	21	29	32	36	44	53	83
	해양에너지발전설비 (MW)	255	255	255	255	255	260	98.1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	3.52	4.08	4.62	4.81	-	5	96.2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	1	5	3	3	10	30
3-3-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독성가스 법정 전문교육 이수자(명)	-	-	719	1,050	803	1,250	64.2
	고압가스 시설 안전인증 건수(건)	'19년 시행					100,000	산정 불가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	1단계 공사	1단계 준공	1단계 운영	1단계 운영	1단계 운영	2단계 준공 완료	-
		2단계 기본 설계	2단계 실시 설계	2단계 실시 설계	2단계 공사	2단계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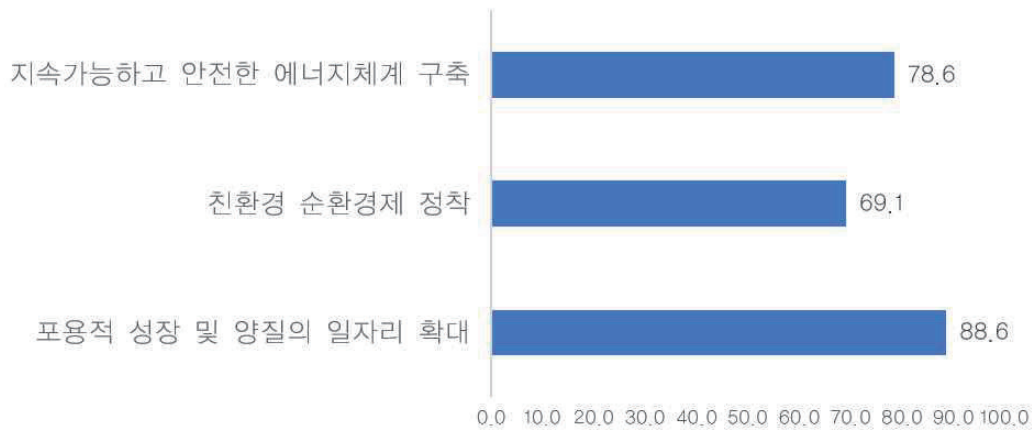
¹⁾ 제3차 지속가능발전 부처별 이행계획 성과지표 및 2020년 목표는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 개소 수(건)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처 실적은 교육센터 참여인 수(명) 기준으로 제출됨.

○ 총평

-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77.9%로 전체 평균 (77.3%)보다 소폭 높음.
- 포용적 혁신 경제의 성과지표는 총 35개이며 이 중 이미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한 과제는 6개(17.1%)임. 정상 추진 중인 과제는 26개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였으며, 현 상황에서 이행 평가가 불가능한 과제는 3개였음(8.6%).

○ 전략별 평가결과

-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의 세부전략은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 순환 경제 정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임.
- 이 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것은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88.6%)였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78.6%)이 그 뒤를 이었음.
- 반면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69.1%)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3-5〉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의 전략별 목표달성도 평균 (단위: %)

라.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

〈표 3-10〉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의 주요 성과지표 추이 및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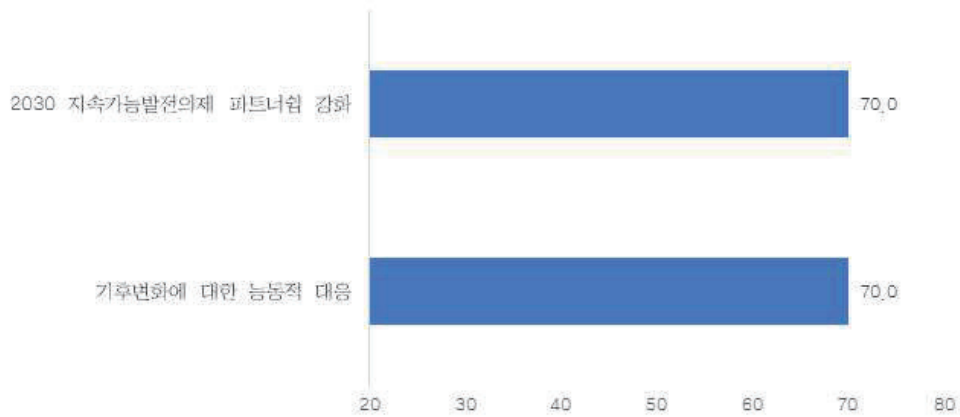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전략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1-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GNI대비 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0.13	0.13	0.14	0.16	0.14	0.2	70
4-1-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성과지표 없음	-	-	-	-	-	-	-
(전략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4-2-①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성과지표 없음	-	-	-	-	-	-	-
4-2-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tCO ₂ eq/십억 원)	438.1	418.7	470.4	-	-	254.1 ('30)	54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건수(건)	-	-	49	51	41	25	100
4-2-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천 톤CO ₂)	-	318	698	1,181	-	1,484	79.6
	해운분야 CO ₂ 감축량 (만 톤)	22.6	30.6	31.9	44.1	52.1	40	100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	15.1	-	16.0	-	30	53.3
4-2-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면적, km ²)	-	-	700	1,500	6,195	3,000	100
	바다숲 조성 면적(ha)	1,388	2,574	3,236	3,064	3,043	15,500	19.6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 (개)	5	5	11	15	16	30	53.3
(전략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4-3-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성과지표 없음	-	-	-	-	-	-	-
4-3-②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성과지표 없음	-	-	-	-	-	-	-

○ 총평

-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70.0%로 전체 평균(77.2%)보다 낮았음.
- 글로벌 책임국가의 성과지표는 총 9개이며 이 중 이미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한 과제는 3개 (33.3%)임. 정상 추진 중인 과제는 6개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음.

○ 전략별 평가결과

-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의 세부 전략인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목표달성도 평균은 모두 70%였음.



〈그림 3-6〉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의 전략별 목표달성도 평균 (단위: %)

마.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표 3-11〉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의 주요 성과지표 추이 및 목표달성도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치 ('20)	목표 달성도 (%)
(전략1)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5-1-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민간단체, 기업, 종교단체 정책협의회 운영(회) ¹⁾	2	4	4	4	4	15	26.7
5-1-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66	50	20	25	12	61	19.7
	산림교육 수혜 국민 (만 명)	170	180	218	257	377	300	100
	환경교육 수혜자 (만 명)	229	242	297	306	310	350	88.6
5-1-③ 사회 투명성 제고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 정도(%)	54.3	69.4	57.8	51.6	52.0	50.0	96.2
5-1-④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성과지표 없음	-	-	-	-	-	-	-

1) 기업환경정책협의회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 총평

-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66.2%로 다섯 가지 목표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목표치에 비해 달성 정도가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3) 이행과제의 성과 평가 방안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이행과제의 연계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그 포괄적인 특징으로 인해 이행과제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행과제와 세부과제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진단 결과 악화되었다면 그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행과제나 세부과제들의 성과를 검토하여 성과가 낮은 경우는 우선 세부과제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이행과제의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나 지속가능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과제들이 적절한 세부과제와 사업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행과제들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거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함.

■ 이행과제의 효과성 검토

- 이행과제와 세부과제의 성과를 알기 위해 우선 성과지표를 검토하는데 사실 이 성과지표들은 정부 행정 부처가 세부과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현실적인 달성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설정하게 되므로 높은 달성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행과제와 세부과제들이 정책 목표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거버넌스에 의해 논의되어야 함. 대안으로는 이행계획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통해 진단해 볼 수 있음.
- <표 3-12>에 보면 이행계획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이 있음. 이러한 지표들의 선택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여건상 이번에는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선택된 것으로 이러한 지표들의 선택은 관점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는 이후 이행계획의 수정 보완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보완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한 이행과제 성과 검토 결과는 지표들의 상호 연계성 파악과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지표의 개선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이행계획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현재 UNSDGs 체제에 맞춰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목표와 이행계획이 수정될 예정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대신 우리나라의 UNSDGs 별 이행상황을 분석, 평가함.
- 여기서는 전략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를 예로 들어 세부과제 추진 내용과 SD지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봄으로써 이후 이행계획 수정과 보완 과정에서 다른 과제들을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한 사례를 제시함.

■ 이행과제의 성과 검토 예시

전략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 관련 이행과제와 추진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전략	이행과제	추진 정책	성과지표	SD 지표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 과 효율적 관리	1-3-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추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물 공급 안전율 •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4대강 수질오염도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농약사용량 ▪ 화학비료사용량 ▪ 1인당 1일 물소비량 ▪ 물 재이용량 ▪ 취수율
	1-3-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차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사업 선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5개 추가 지정 • 산업폐수 TOC 시행을 위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안 설정 • 하천·호소 조류경보제 시행 • 녹조 우심지역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 등 유역단위 맞춤형 조류예방대책 시행 • 양분관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 • 농촌비점저감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물질 지정 항목 • 수질 등급 달성 	
	1-3-③ 물순환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 예·경보 시행('17.1월부터 매월 1회) • 빗물을 침투·저장량을 증가시키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확대 추진 • 가뭄대응체계를 전담하는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업무조정 •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 개량 • 진안계통 준공('16), 영산강2차 등 4개 사업(계속)을 통해 기존 수원의 여유량 일 98만톤 추가 전환 정상추진 • 재이용 수질기준 사용용도 구분 및 용도별 수질기준 조정 • 하수재이용수 공급 사업에 국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관련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추세

개선된 지표	악화된 지표	변함없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율 • 농어촌 하수도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물소비량 • 물재이용량 • 4대강 수질오염도 • 농약사용량 • 화학비료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 이행과제와 성과지표

- 세 이행과제 중 1-3-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1-3-③ 물순환 체계 강화 과제는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이 요구되는 과제인 반면 1-3-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과제는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과 관리, 처리 등과 관련이 있음.
- 세 과제 중 수질 관련 과제인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와 관련된 SD지표를 보면 농어촌 하수도보급률을 제외하면 대체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 언급된 대로 악화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이행과제의 성과지표를 보면 감시물질 지정항목과 수질등급 달성으로 이들 지표만으로는 이행과제의 성과를 진단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수원 수질 개선 대책 강화 과제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수질오염 예방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나 농·축산 분야 폐수와 산업폐수 등의 안전한 처리를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행과제의 실행 평가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물순환 체계 강화는 제3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행과제로 깨끗한 물 이용과 효율적 관리의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서 각 과제마다 세부과제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음.
- 관련 부처에서는 그 이행과제들을 실행하려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세부과제와 정책·사업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됨.
- 부처에서 제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지난 2년간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들이 주로 시설설치 중심 사업들과 법적 기준 강화 조치, 연구 사업, 향후 추진 대책 등 부처 실적 위주의 예산 투입과 산출 가능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대책들이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미흡하며 통합적 물관리와 거버넌스 등에 대한 사항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부과제 중 지류·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농·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통합물 관리 기반 마련, 전 국토의 물의 저류·함양 기능 유지 및 강화,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과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수립되지 못했거나 실행계획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정작업과 부처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현황을 반영하여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실적과 4대강 복원 사업, 거버넌스의 이행,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개도국의 물문제 해결 기여 등과 관련된 정책과 이행과제, 지표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4) 제3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와 주요 추진내용

목표 1. 건강한 국토 환경

○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1-1) 깨끗한 대기질 확보

세부과제	추진 정책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 미세먼지(PM _{2.5}) 대기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 3' 수준으로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 차 기준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2년까지 200만대 보급계획 수립
지역·업종 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	• HAPs(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업종 단계적 강화 및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 수도권 배출허용총량제 적용 대상사업자 확대 및 기준 강화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 VOCs 배출규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사업장 시설관리 강화

(1-1-2) 도시 생태 공간 확충

세부과제	추진 정책
도심 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 도심 내 유휴·훼손·방치된 국공유지 등을 생태휴식공간으로 복원
인문 예술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	• 수변구역 관리정책 홍보 및 물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교육·탐방 프로그램 운영
도시 숲 조성과 연결성 강화	•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17)

(1-1-3)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세부과제	추진 정책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통합관리 공동훈령 제정에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 ('15: 환경정책기본법, '16: 국토기본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 생태적 산지전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세부허가기준 관련「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6.)

(1-1-4) 오염배출 관리체계 선진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사업장환경관리를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의 분산된 관리체계를 매체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폐기물 수거·처리시스템 개선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관련 고시 개정) • 단독주택, 농어촌 중심으로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설치 • 폐기물 운반차량에 GPS 부착, 운송정보 실시간 공유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제 시행

○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2-1)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세부과제	추진 정책
국도 생태축 연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확대지정 -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수체의 건강성 목표 및 기준(등급) 마련 수생태계 중·횡적 연결성 확보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 부처 합동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 수립·시행 '국가보호지역 통합DB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운영
생태계서비스 평가관리	

(1-2-2)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과제	추진 정책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17.8)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 등 운영기반 마련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산업계 인식 제고의 노력 확대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운영체계 정비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습원 보호·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이행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생물 관리대상 확대, 집중퇴치·제거 사업, 실태조사 모니터링 실시 LMO 위해성평가기관 설립, LMO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확대, LMO 위해성 심사 지속 추진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림과 공익림의 체계적 구분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가치제고

(1-2-3)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과제	추진 정책
연안·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실시 및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수행
연안·해양 보호구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가로림만('16.12), 제주 토끼섬('16.12), 안산대부도 갯벌('17.3), 양양 조도 주변해역('17.12)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 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괘이, 바닷새 등 25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16.9), 유해·교란 해양생물 추가 지정('16.9. 2종, '17.9. 3종) 해양수산생명자원 현황, 서식지 등 기초조사 실시('16.~'17.)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16.6.)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선진화 추진(허용어획량 감축 및 유보량 단계적 축소)

○ (1-3) 깨끗한 물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1-3-1)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세부과제	추진 정책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생산·공급	• 녹조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
농어촌 지역상수도 확충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추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1-3-2)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지류·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 5-6차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사업 선정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	• 특정수질유해물질 5개추가 지정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 산업폐수 TOC 시행을 위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안 설정 • 하천·호수 조류경보제 시행 • 유역단위 맞춤형 조류예방대책 시행
농·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 양분관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 • 농촌비점저감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 지자체의 축산환경개선 계획 수립 관련 축산법 개정 추진('17년 국회 제출)

(1-3-3) 물 순환 체계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 가뭄 예·경보 시행('17.1월부터 매월 1회)
전 국토의 물의 저류·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 빗물을 침투·저장량을 증가시키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확대 추진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개선	• 가뭄대응체계를 전담하는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및 업무조정
물 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 개량 • 진안계통 준공('16), 영산강2차 등 4개 사업(계속)을 통해 기존 수원의 여유량 일 98만 톤 추가 전환 정상추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 재이용 수질기준 사용용도 구분 및 용도별 수질기준 조정 • 하수재이용수 공급 사업에 국고지원

목표 2. 통합된 안심 사회

○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1-1) 사회적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수립·발표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각종 교육비 계속 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총 55.8만호 공급 행복주택 1.2만호 포함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6만호로 총 12.6만호 공급 도심 내 거주 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 공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2-1-2) 고용-복지 연계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고용복지+센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복지+센터 '17년 기준 98개소 운영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적용방안(안) 마련, 자영업자 가입요건 완화 시행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2-1-3)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인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특별(우선) 공급 지속 추진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상버스 도입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지원 모국어 멘토링 신설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급) 법정정원 충족학급 확대 다문화 유치원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

(2-1-4)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세부과제	추진 정책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운영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인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업종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및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TF 운영 및 IT·출판업종 기획 감독 실시('17년 30개소)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 •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부여장려금 개편 •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센티브 상한 인상 • 직장어린이집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 부처별 정책 및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목표 수립 * 교원·학부모 양성평등 교육 확대(교육부),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 등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2-2) 지역간 격차 해소

(2-2-1)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세부과제	추진 정책
6차 산업 발굴·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 ('15년) 9개소 → ('17) 16개소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16.6.27) • 도(道)별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신규 수립 • 거점항만 개선(부산항 신항 신규 터미널 개발, 제2배후도로 완공 등)

(2-2-2)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세부과제	추진 정책
농업인 대상 생활 제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지원 및 농지연금 가입 확대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에 대한 주기적 조사('17년 9,998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34개소(마을) 선정 추진 • 노후 지붕의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장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2-2-3)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정책 강화* 및 노후 관광 인프라 재생 추진 * 담양, 완도, 신안, 하동 등 11개소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브랜드화)지원 • 지역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3-1)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내실화	• 국가 및 지역단위 환경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환경보건지표 산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의 당류함량 최신정보 대국민 공개('18.3)

(2-3-2) 어린이 건강 증진

세부과제	추진 정책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적기에 발견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추적조사·연구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 법 적용 유예시설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주는 환경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개선 지원

(2-3-3)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도구 개발·시행('16년~)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 관리체계 개선

(2-3-4)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세부과제	추진 정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 및 품목세분화 • 유기자속지불금 지급기한(3년)의 폐지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유도 • 유기종자 자원 수집·DB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중 잔류농약 분석법 개발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보급 • 농산물 유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장균 검출기술 특허 및 실용화, GAP 인증농가 확대
식품안전 신뢰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추진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2-3-5)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세부과제	추진 정책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대상 산림휴양시설 우선예약 기회 및 숲 체험 프로그램 제공
국립공원 체험·휴양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맞춤형 야영장 신설

○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2-4-1)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국민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부 안전 회의체 운영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공개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매년 10개 분야 선정하여 점검)
재해 예방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2-4-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세부과제	추진 정책
화학물질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불법제품 사후관리 강화
화학사고 피해저감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강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추가 보장보험 가입 활성화

(2-4-3)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세부과제	추진 정책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1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결함 하수관로 정비 추진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세종 C-ITS* 시범사업 추진 및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추진 (서울, 제주 실증사업 설계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도로간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린도어, 안전발판 등 생활밀착형 철도안전시설의 확충

(2-4-4)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세부과제	추진 정책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수문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물 관리 지원 수문기상예측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5.15~10.15) 등 산사태 안전망 구축 위기경보 발령제도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등
원인별·맞춤형 산불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도시·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체계 운영 강화

목표 3. 포용적 혁신 경제

○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1)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세부과제	추진 정책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대책 발표('18.3.15) 및 추경 편성('18.4.6)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제도 신설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 정보 제공·매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워크넷에 DB구축,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기업정보제공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관로지원 활성화,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양적 규모 확대 • 이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사회적기업 매출액 증가 등 운영 내실화
혁신형 창업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지원

(3-1-2)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세부과제	추진 정책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비정규직 정책방향 포함·발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연차별 전환계획 수립,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보육·안전 등에 대해 4년간 92개 산단, 총 834억원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17.8월)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화학공장의 보수·정비 등 위험작업 밀착관리) 확대

(3-1-3)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세부과제	추진 정책
공정거래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협약 체결 장려 통해 체결 기업이 '17.4월 기준 229개사로 증가하여 성과목표(220개사) 달성

(3-1-4)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세부과제	추진 정책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전략 산업분야 164개 기업 발굴 및 사업 실증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고용(34개사 67명), 투자유치(3개사 6.4억원), 유망기업발굴(77개사) - 청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및 인프라 활성화 * 경남-두산, 충북-LG, 부산-롯데, 충남-한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융합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원천소재 개발,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구축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산업 성장 지원 강화

(3-1-5)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세부과제	추진 정책
미래 유망 신기술 추가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의존도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등의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R&D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전지: 수소차 시스템 소형화를 위한 가변압력 PEMFC 핵심부품 개발 성공 이차전지: 수요관리 시장대응, 비상발전ESS 제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 CCS: 포항 해상분지 실증저장소에 시험주입(100톤)을 완료하여 세계 3번째로 해상에서 CO2 주입 성공
에너지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IoT+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에 집약된 센싱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융·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환경난제 해결 추진
농업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스마트팜 1세대 모델 현장실증 및 매뉴얼 개발 ICT 기기 단체표준 등록(시설원에 25종, 축산 19종)

○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3-2-1)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세부과제	추진 정책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 개편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재활용법 개정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광산 산업을 통하여 회수한 재활용 금속에 대한 GR 품질인증 표준 제정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 구축

(3-2-2)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세부과제	추진 정책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민간협력 지원 및 중소기업간 협업형 기술개발 후속연구 등 우수기술 지원 • 청정제조기술 보급(400개 중소기업장 지원), 중소기업 협력사 '환경규제 대응' 지원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탄소·물발자국 관련 국제표준 및 선진국 기준 인증제도 수립 및 운영 등 • 자원순환을 고려한 친환경제품 개발 지원 및 국내외 유니소재화 표준화 추진
기업의 친환경 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운영

(3-2-3)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세부과제	추진 정책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API 기반 녹색제품DB 대외개방 공유서비스 운영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방문고객의 친환경소비 확산에 기여한 우수 녹색매장 발굴포상 • 녹색제품 보급 및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 거점 마련(세종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 녹색매장 확대('16 395개소→'17 469개소)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 우대제도 운영(최소녹색기준제품 20개 품목 추가)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매장,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녹색제품 보급기반 확산
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통합로고 플랫폼 적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3-2-4) 저탄소생활 확산

세부과제	추진 정책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인증기준 전면 개정('16.9)
친환경 운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운전 모바일앱 운영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 온실가스 감축사업장 확대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 탄소중립형 신산업 발굴 및 확산(인증실적 '13년 43천tCO2 → '17년2,757천tCO2)

○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3-3-1)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시행	•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관련 기초 인프라로 AMI 보급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 효율등급, 고효율인증 등 효율기준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온실가스처리, 수요관리 융합기술 지원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광역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제공 및 '17년부터 공공건축물 BEMS 설치 의무화

(3-3-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세부과제	추진 정책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지속 확충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	•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 확대 및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로 도입·시행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 (태양광)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추진 • (풍력) 해상풍력 경제성 확보 및 설치입지 확대를 위한 대응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기술개발 본격 추진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농업용 저수지 및 하천 취입보에 태양광·소수력발전소 건설 • 서남해안 방조제의 유휴부지에 풍력발전기 설치 • 바이오매스용 거대역새 우수계통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 목재펠릿 수급 및 유통체계 정비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대규모 상업용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3-3-3)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 독성가스시설 안전관리자 법정 전문교육 실시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 설치 완료, 갑상선방호약품, 환경방사선자동감시기 인프라 구축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원전 발생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목표 4. 글로벌 책임 국가

○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1-1)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세부과제	추진 정책
개도국 SDGs이행 지원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규모 증가('15. 21억불(GNI대비0.14%)→'16. 25억불(0.16%))
기후변화 및 환경 보호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협력국 공무원에 대한 석사학위 취득 지원

(4-1-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과학기술·ICT 기반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한국-UNDP-개도국) 프로그램인「2단계 한-UNDP 협력사업('16~'20)」추진 세계은행(WB)와 GCCD(글로벌사이버보안센터)를 통한 개도국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16~'17년) UNEP와 함께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지원사업 추진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산림경관복원 매커니즘(FLRM) 이행 지원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촉진 UNESCAP과 공동으로 3단계 '서울이니셔티브사업' 추진

○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4-2-1)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세부과제	추진 정책
신기후체제 감축 목표이행계획수립 및 후속협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 조기발효를 위한 공식서명 및 조기 비준 촉구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에 합의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 후속협상(COP 등) 및 TEC 회의, CTCN 이사회에 참여

(4-2-2)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세부과제	추진 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 거래제 안정적 운영·관리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통해 '17년까지 총 12만톤의 탄소흡수량 확보

(4-2-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산업·발전 부문 감축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목표관리제도 이행 지원,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촉진 등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역량 강화 신규 개발 또는 기 상용화된 우수 감축기술·설비에 대한 실증보급 및 사업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및 지원범위 확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시브 수준으로 지역별·용도별 단열기준을 강화(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17.12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규 도입·시행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속 추진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18~2027) 수립 및 행복도시 광역 BRT 개선 종합계획 수립,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수립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20)에 따른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 가스 감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폐기물부문 신규관리업체 대상 인벤토리 구축 및 작성 지원
냉매 사용 저감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매관리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4-2-4)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기후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마련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지구 통합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개발 웹기반 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및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추진 기후변화 원인, 결과 및 영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및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실행계획(2017~2021) 수립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16~'17)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기반 확대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대 및 이동형 병원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농업) 농업기상 관측소 203개소 구축('17. 누계), 재해발생 조기경보체계 구축('17. 10개 시 군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실태조사 마스터플랜 수립('17)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산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개발 및 3대 산림재해대응체계 강화 (해양) 바다 숲 조성·관리, 폭풍해일에 의한 해안침수예상도 추가 제작·배포

○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4-3-1)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한·중 환경협력계획 서명 •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3/6개월 기후전망정보 생산 및 제공(매월) 등 APEC 기후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 황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해양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 지역·양자협력체 주요 회의 대응 • 국제협력사업 추진기반 마련 및 사업이행
기후, 황사,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 공동연구단 실무그룹 1·2 연구추진

(4-3-2)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세부과제	추진 정책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림협력 표준모델 개발 • 대북지원용 종자비축량 증대, 북한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통한 DB구축 및 분석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조성 위한 사전 준비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17년도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사업추진 불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1)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세부과제	추진 정책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및 전국대회 개최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지속가능발전 소통체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결 및 의견수렴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운영·관리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 연수 실시,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전문가(술타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3) 사회 투명성 제고

세부과제	추진 정책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 및 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청렴교육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규율범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16.9)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강화로 금품수수 금지('16.9.28. 시행),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18.4.17. 시행)
사회 전반의 신뢰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부패 정책 수립·점검·평가과정에 시민, 정부, 사회각계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추진('18.3), 청렴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직무 교육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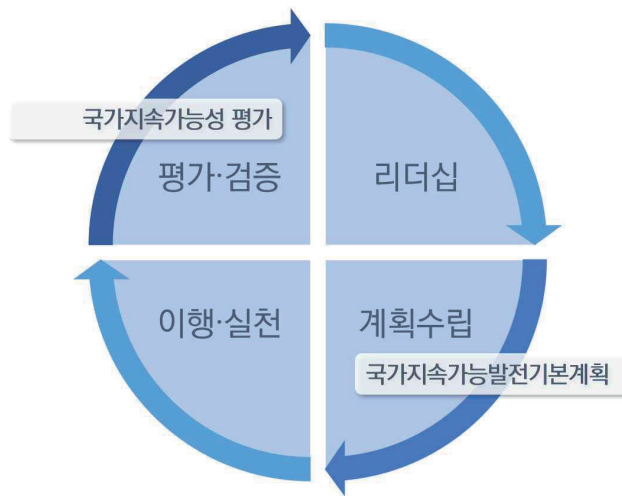
(4)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세부과제	추진 정책
SDGs 지표 연구 및 관련 통계 개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글로벌지표 선정과정 대응, 글로벌지표의 국내 작성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DGs 구축이 18년 현재 진행 중인 바,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은 국가 지표체계 확정 후 구축 예정

3. 총평

(1)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 3-7>과 같음.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전략, 이행과제,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함.
 - 위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통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함.



<그림 3-7>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여러 구성요소, 즉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전략-이행과제-과제의 성과지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별 전략 및 이행과제가 수립되어야 함.
 - 둘째, 이행과제의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행과제별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이행과제의 성공적 수행은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의 잣대가 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SD)지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부분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과제와 SD지표의 연계성 검토

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관련된 이행과제 및 과제별 성과지표

〈표 3-12〉 국가지속가능발전 구성요소 간 연계

목표	전략	관련 이행과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SD지표	
1. 건강한 국토 환경	1-1. 고품질 환경 서비스 확보	1-1-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보급대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mu\text{g}/\text{m}^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전거도로 총연장(km)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1-1-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m^2) 1인당 생활권도시립 면적(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1-③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평가 실적(건) 산림지역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목재벌채 정도 	
		1-1-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폐기물 매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률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2-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생태축 복원율(%) 생태하천 복원 구간(km) 자연보호지역비율(%) 산림보호구역(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보호 지역비율 국가 생물종 목록 수 멸종위기종 수 연안오염도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1-2-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숲 가꾸기 면적(천ha) 위해우려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보호구역 면적 갯벌면적 증감 주요지표종 (5종)의 자원량 변화 	
		1-2-③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오염도(ppm)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국토면적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1-3-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물공급 안전율(%)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취수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1-3-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물질 지정 항목 수질 등급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수질오염도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1-3-③ 물순환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재이용량 	
	2. 통합된 안심 사회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률

목표	전략	관련 이행과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SD지표
양성평등 촉진		2-1-② 고용-복지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복지+센터 개소수 고용-복지 정보 연계수 공공부분 일자리망 연계수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률(%) 저상버스 보급률(%)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비율(%)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어린이집 설치 30대 여성 고용률(%)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남성 육아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관리직 여성비율
2-2. 지역간 격차 해소		2-2-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화율 수도권 인구 집중도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2-2-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개) 슬레이트 철거동수(동)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이상 가구 비율(%)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2-3. 예방적 건강 서비스 강화		2-3-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준 설정 물질 수(개)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수명 비만율 영아사망률 유소년 영양상태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사용량
		2-3-② 어린이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사망률(명) 고위험신생아 의료비 지원율(%)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만 명) 	
		2-3-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상황실 운영 	
		2-3-④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수리안전담 비율(%) 비료사용처방 발급 건수(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2-4-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성) 사망만인율
		2-4-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상자수(명)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2-4-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사고건수(명) 대중교통 분담률(%) 교통약자 배려시설 조성 수(개소)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4-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사태 인명피해(명) 건조일수 당 산불피해 면적(ha/일) 수해 피해액(십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 피해 (명, 억 원)

목표	전략	관련 이행과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SD지표
3. 포용적 혁신 경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참여 인원 청년 고용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수(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비율(%) 사고사망만인률(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소득 분배율 근로시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비정규직 비율
		3-1-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협약 제도 확산 	
		3-1-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산업 수출액(십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총생산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3-1-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R&D 지출 비율(%) GDP 대비 순 투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순 투자율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 GDP 대비 R&D 지출 비율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3-2-①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제조 대상제품(개수) 물질흐름분석 통계구축·갱신 급속 수(개) 자원생산성(원/kg) 재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률
			3-2-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3-2-④ 저탄소생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건수(건)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 (개소) 친환경 경제운전 이수 실적(명) 탄소포인트제 운영 CO2 절감량(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3-3.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3-3-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절감량(TOE) 지역난방 보급가구 수 (만 가구)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원단위
		3-3-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MW, 누계) 해양에너지발전설비(MW)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목표	전략	관련 이행과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SD지표
		3-3-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성가스 법정 전문교육 이수자(명) • 고압가스 시설 안전인증 건수(건) •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 	
4. 글로벌 책임 국가	4-1.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1-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GNI대비 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 GNI 대비 ODA 비율
		4-1-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4-2.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4-2-①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 (지표 없음)	
		4-2-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tCO₂eq/십억 원) •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건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배출량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2-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천 톤CO₂) • 해운분야 CO₂ 감축량(만 톤)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4-3.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	4-2-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3-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체계 강화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4-3-② 남북 환경 공동체 기반 구축		
		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③ 사회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④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적절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

〈표 3-13〉 관련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가 누락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소분류	SD 지표	분야	소분류	SD 지표
사회	사망률	▪ 자살사망률	사회	인구 변화	▪ 인구증가율
		▪ 범죄 발생률			▪ 인구밀도
		▪ 고등학교 순졸업률			▪ 고령인구비율
	교육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경제	경제 이행	▪ 소비자 물가지수
		▪ 공교육비 지출			▪ 무역수지
	생활 환경	▪ 주택 수			재정 상태
		▪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다.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 중 관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없는 경우

〈표 3-16〉 관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없는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지표
2. 통합된 안심 사회	2-2. 지역 간 격차 해소	2-2-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6차 산업화지구(개소)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2-3. 예방적 건강 서비스 강화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 (개소)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 (만 명)
3. 포용적 혁신 경제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3-2-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중소기업 지원 수(누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정보 및 인식 공유(명)
			환경경영 보급사업 실시사업장 수(개소)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녹색매장 수(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실적(억 원)	
4. 글로벌 책임 국가	4-1.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파트너십 강화	4-1-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지표 없음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4-2-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면적, km ²)
			바다숲 조성 면적(ha)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개)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4-3-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지표 없음	
	4-3-②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지표 없음	
5.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기반 강화	5-1-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5-1-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민간단체, 기업, 종교단체 정책협의회 운영(회)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산림교육 수혜 국민(만 명)
			환경교육 수혜자(만 명)
	5-1-③ 사회 투명성 제고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 정도(%)	
5-1-④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지표 없음		

(3)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나) 기본계획이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 첫째, 목표 및 전략의 달성에 필요한 부처 이행과제들이 설정되어야 함.
 - 둘째, 이러한 이행과제의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목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부처별 이행과제 설정의 효과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이행과제는 대체로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목표의 경우 최고 리더십의 참여와 범부처 정책조정 기제 구축이라는 핵심적인 과제가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이행과제 성과지표 설정의 효과성
 - 이행과제는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성과지표는 여전히 투입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예: 고용복지+센터 개소수,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 GDP 대비 순투자율, 녹색매장 수, 6차 산업화지구(개소), 긴급상황실 운영 등
 - 투입보다는 투입의 결과, 나아가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 아울러, 일부 이행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남북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환류 체계 강화
 - 과제의 특성 상 성과지표 설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누락은 가능한 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의 효과성
 - 전체 성과지표 달성도('20년 목표) 평균은 77.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며, 이미 202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한 지표들도 112개 중 32개로 전체의 28.6%를 차지함.
 - 적극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 지표들 중 상당수가 투입 중심의 지표이거나, 기존의 추세를 감안할 때 무리 없이 달성이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함.
 - 목표달성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적극적인 달성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스트레치 타겟(Stretch Target) 목표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이행계획과 지속가능성 평가와의 연계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하여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13개는 관련 부처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움.
 - 예: 자살사망률, 범죄발생률,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공교육비 지출, 고령인구비율 등
- 물론 이들 지표 중에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예: 고등학교 순졸업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주택 수 등
- 아울러, 부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 가운데 관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없는 경우도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국가지속가능성 개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개선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 (이행과제)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성과지표)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개)
- 반면 국가지속가능성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시키거나 더 바람직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 등

제 4 장

UNSDGs별 국내 이행 진단

IV



UNSDGs 별 국내 이행 진단

■ 목적

- 우리나라는 아직 UNSDGs 체계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UNSDGs 별 이행상황을 진단할 수 없음.
- 84개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국내의 관련 지표 (예,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17개의 UNSDGs의 국내 이행 상황을 진단함.

■ 진단 방법

- 각 목표와 세부목표의 국내 상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국가 주요 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들 중에서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고, 각 지표의 2012년 ~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취합한 후 데이터의 추세를 살펴보고 2012년 대비 2016년의 증감률을 산출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포괄적 특성 때문에 각 목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행정 부처의 협력과 성과가 있어야 가능함. 따라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지표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그 이행 상황을 진단함.
- 관련 지표의 선택은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진의 논의결과 선택했음. 그러나 충실히 진단하기에는 관련 지표가 부족한 경우도 있음.
- 증감률에 따라 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극단값을 제외하고 전체 지표의 증감률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산포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은 2.92, 표준편차는 19.9 이었음.

〈표 4-1〉 지표의 증감률(2012년 대비)에 대한 기술통계표

샘플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79	-73.5%	63.1	2.92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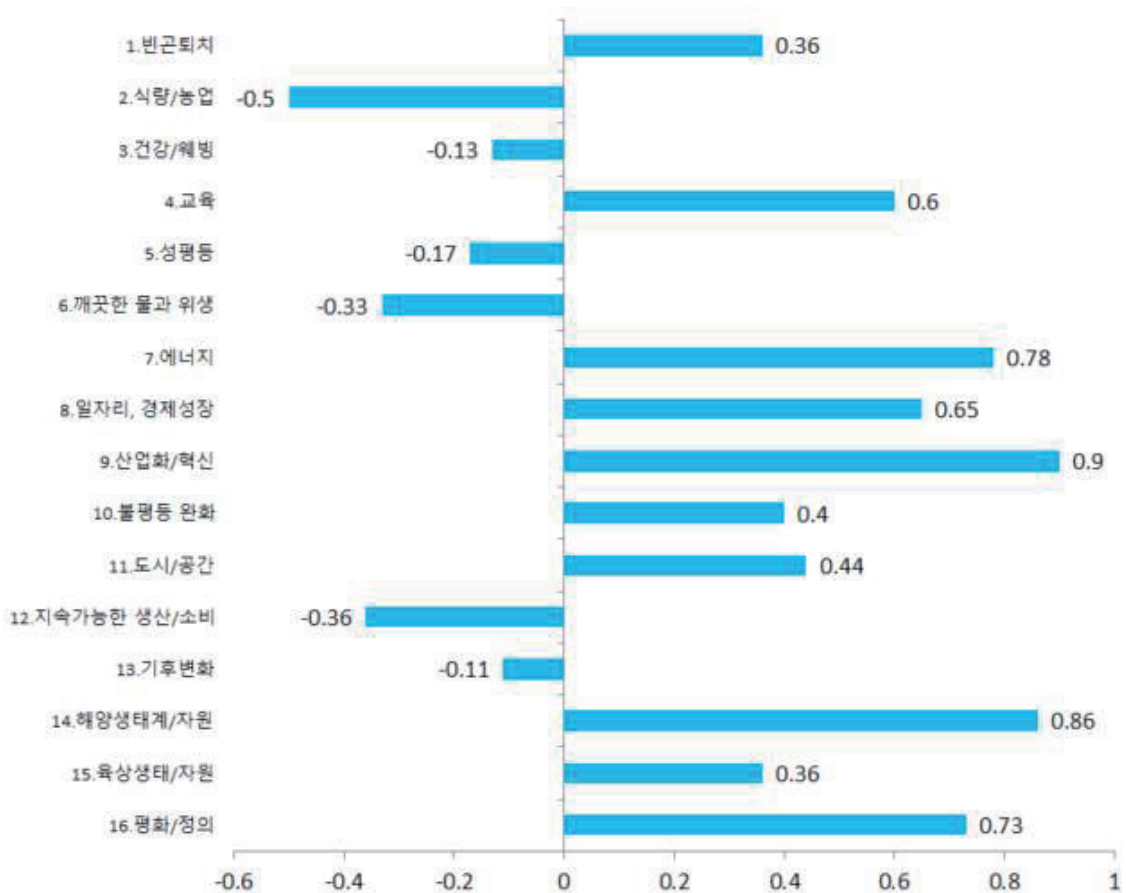
- 데이터의 추세로 개선과 악화를 판단하고 증감률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20%를 단위로 등급을 정해 -3 ~ 3까지 점수를 부여함. (〈표 4-2〉)
- 각 목표별로 지표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여 목표의 이행 정도를 가늠함.

〈표 4-2〉 지표의 증감률에 따른 점수

증감률	점수	평가
40% 이상	3	개선
20% 이상 ~ 40% 미만	2	
0.5% 이상 ~ 20% 미만	1	
-0.5% 이상 ~ 0.5% 미만	0	변동 없음
-20% 이상 ~ -0.5% 미만	-1	악화
-40% 이상 ~ -20% 미만	-2	
-40% 미만	-3	

■ 진단 결과

- 이행 정도는 2012년 대비 2016년의 개선도를 의미함. 예를 들면 지표의 평균 점수 결과 Goal 9 산업화/혁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가 기간 동안의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음을 의미함.
- 개선도가 높은 목표는 Goal 9 산업화/혁신, Goal 14 해양생태계/자원, Goal 7 에너지, Goal 16 평화/정의, Goal 4 교육이었으며 반면 개선도가 낮은 목표는 Goal 2 식량/농업, Goal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Goal 5 성평등 순이었음. (〈그림 4-1〉, 〈표 4-3〉)
- 개선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 Goal 9의 진단 지표에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나 온라인 신청 민원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등 목표 달성도가 높은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화/혁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거버넌스를 통해 목표들을 적절히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임.
- 한편 국제 지표에 의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평가에서는 Goal 7 에너지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는 국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을 의미하므로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그림 4-1〉 UNSDGs 별 국내 이행 현황

〈표 4-3〉 UNSDGs 별 지표의 점수 평균

	UNSDGs	관련 지표의 점수 평균
1	빈곤퇴치	0.36
2	식량/농업	-0.5
3	건강/웰빙	-0.13
4	교육	0.6
5	성평등	-0.17
6	깨끗한 물과 위생	-0.33
7	에너지	0.78
8	일자리, 경제성장	0.65
9	산업화/혁신	0.9
10	불평등 완화	0.4
11	도시/공간	0.44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0.36
13	기후변화	-0.11
14	해양생태계/자원	0.86
15	육상생태/자원	0.36
16	평화/정의	0.73
17	파트너십	-

Goal 1. 빈곤퇴치

1 NO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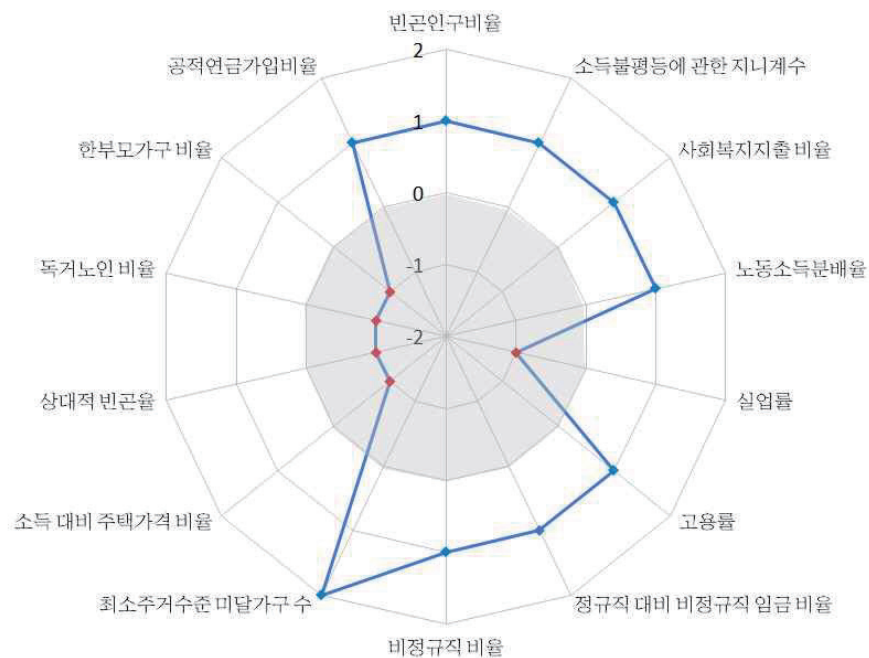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빈곤인구비율	- 9.1	1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1.0	1
• 사회복지지출 비율	10.2	1
• 노동소득분배율	5.1	1
• 실업률	15.6	-1
• 고용률	2.8	1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2	1
• 비정규직 비율	- 1.2	1
•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 25.0	2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9.8	-1
• 상대적 빈곤율	0.7	-1
• 독거노인 비율	3.4	-1
• 한 부모가구 비율	9.1	-1
• 공적연금가입비율	6.1	1

평가



1 이상	개선
0	변동 없음
-1 이하	악화

시사점

Goal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 본 목표는 이 지구상에서 2030년까지 절대적인 빈곤의 퇴치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지원이 보장되므로 그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양극화에 관심이 집중됨.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중에는 빈곤인구 비율과 지니계수, 사회복지비 지출,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등이 상대적 빈곤을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로 볼 수 있음.
- 진단 결과를 보면 빈곤인구 비율과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복지비 지출도 증가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적 제도적 지원은 개선되는 추세임.
-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낮아져 취약계층의 구조적 빈곤과 양극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주거 불안과 실질소득의 하락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관련지표

- 국민 삶의 질 지표: 한부모가구 비율, 공적연금 가입률, 독거노인비율, 상대적 빈곤율

연관부서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Goal 2. 식량/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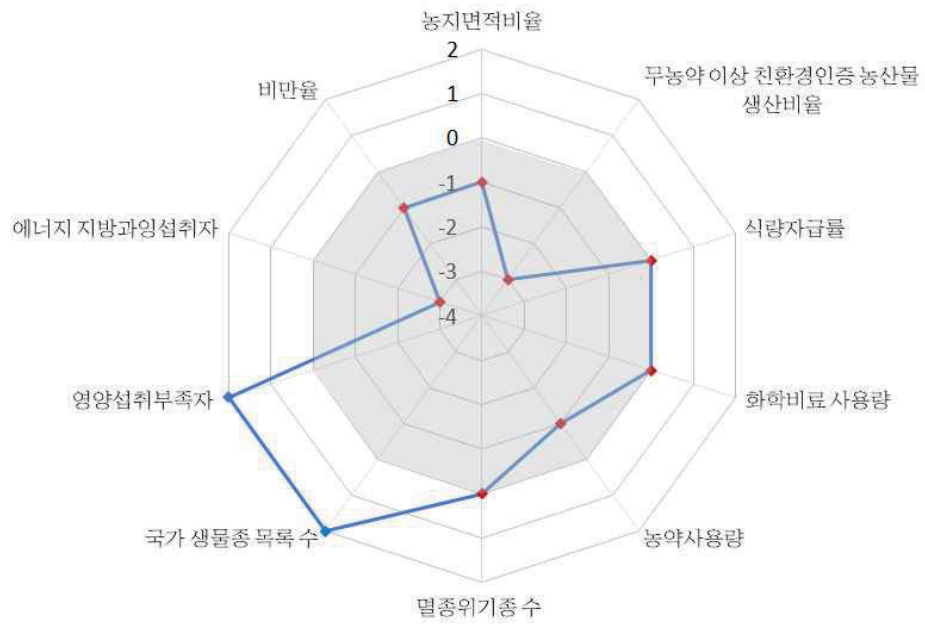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한다.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규모 식품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이행한다.
- 2.5 2020년까지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 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농지면적비율	- 5.2	-1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47.7	-3
• 식량자급률	0.4	0
• 화학비료 사용량	0.4	0
• 농약사용량	19.2	-1
• 멸종위기종 수	0.0	0
•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60.4	중립
• 국가 생물종 목록 수	20.1	2
• 영양섭취부족자	- 28.1	2
• 에너지 지방과잉 섭취자	40.8	-3
• 비만율	7.4	-1

평가



1 이상	개선
0	변동 없음
-1 이하	악화

시사점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과 영양상태의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 우리나라는 기아종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며, 반면 식량안보와 영양상태의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등은 중요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영양섭취부족자, 비만율 지표로 영양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농지면적비율, 친환경인증 농작물 생산비율,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사용량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태 등을 가늠할 수 있음.
- 위의 지표들의 진단 결과를 보면 생물종 보호를 제외하면 악화하는 추세가 대부분으로 국민의 건강과 영양 균형,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 멸종위기종 수, 국가 생물종 목록 수,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등은 생태계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에 대한 진단을 위한 지표임.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유기농경작면적률, 자생생물종 수

연관부서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Goal 3. 건강/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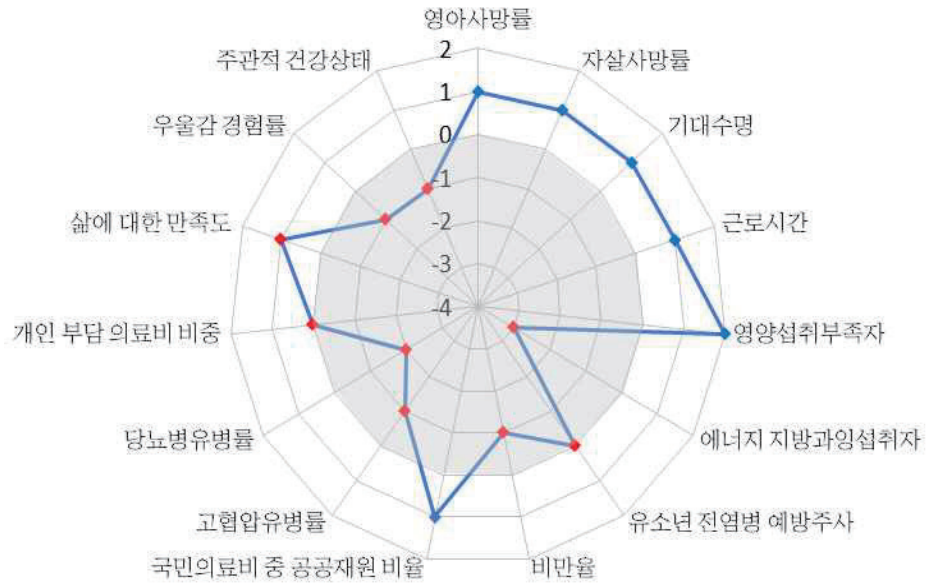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 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 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 3.3 2030년까지 전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NTD)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생식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UHC)을 달성한다.
-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건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영아사망률	-3.4	1
• 자살사망률	-8.9	1
• 기대수명	1.9	1
• 근로시간	-1.7	1
• 영양섭취부족자	-28.1	2
• 에너지 지방과잉 섭취자	40.8	-3
•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0.4	0
• 비만율	7.4	-1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0.5	1
• 고혈압 유병률	0.7	-1
• 당뇨병 유병률	25.6	-2
• 개인 부담 의료비 비중	-0.2	0
• 삶에 대한 만족도	3.5	1
• 우울감 경험률	4.0	-1
• 주관적 건강상태	-2.4	-1

평가



1 이상	개선
0	변동 없음
-1 이하	악화

시사점

Goal 3: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위한 진단과 대응은 필수적인 과제임.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에는 영아사망률과 기대수명, 에너지 과잉 섭취자와 영양부족자, 비만율 등 신체적 건강성 진단을 위한 지표들과 유소년 전염병 예방접종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등 기초적인 보건서비스의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지표가 있음. 이들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삶의 질과 사회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피해를 감시하고 대응할 지표가 필요함.
-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등이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여 국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 국민 삶의 질 지표: 삶에 대한 만족도,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연관부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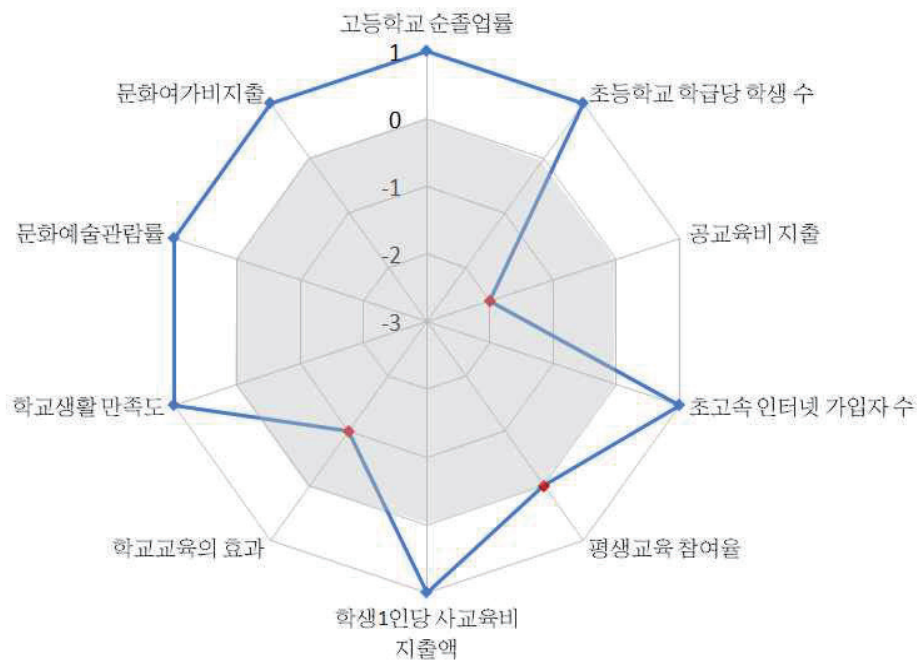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4.4 2030년까지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기능적 직업적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상당히 증대한다.
-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4.6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고등학교 순졸업률	0.7	1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7.8	1
• 공교육비 지출(GDP대비)	-23.9	-2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2.6	1
• 평생교육참여율	0.3	0
•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5.6	1
• 학교교육의 효과	-0.6	-1
• 학교생활 만족도	12.0	1
• 문화예술관람률	18.3	1
• 문화여가비 지출	9.5	1

평가



1 이상	개선
0	변동 없음
-1 이하	악화

시사점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

- 포용적이며 양질의 교육의 보장이라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이미 달성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다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공평한 교육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
-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고등학교 순졸업률이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등은 우리나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에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예술활동, 평생교육 관련한 지표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지표에도 포함하여 교육이나 문화의 질을 진단하도록 해야 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여가비 지출
- 국민 삶의 질 지표: 평생교육 참여율,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연관부서

-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Goal 5. 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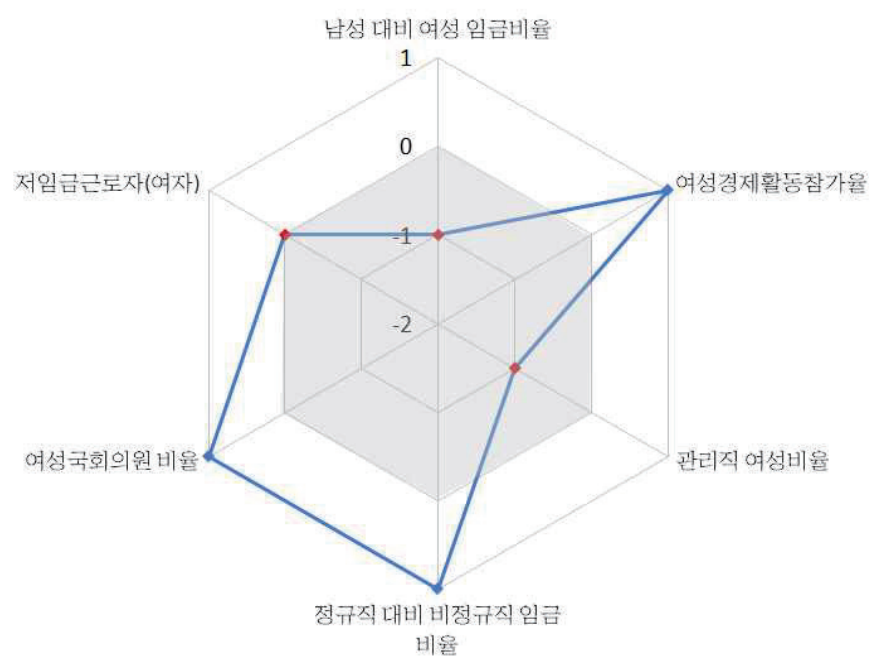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인식한다.
-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생식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0.6	-1
•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여성인구기준)	4.2	1
• 관리직 여성비율	-4.5	-1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2	1
• 여성국회의원 비율	8.3	1
• 저임금근로자 비율(여성)	-0.3	0

평가



1 이상	개선
0	변동 없음
-1 이하	악화

시사점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 우리나라에서는 여아의 성장 과정이나 교육에서의 차별은 큰 문제가 아니므로 성평등 관련한 지표들은 여성의 사회활동에서의 불평등을 진단하고 차별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여성 관련 지표는 주로 경제적 차별을 진단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여성 국회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 국민 삶의 질 지표: 저임금 근로자 비율(여자)

연관부서

-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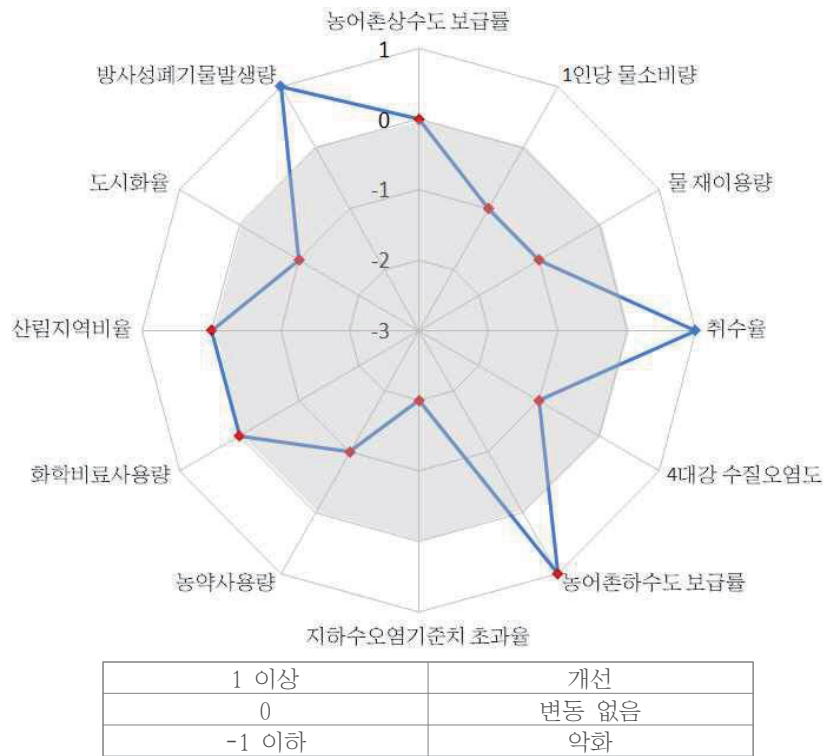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설비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으로 감축,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 행한다.
-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접수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0.05	0
• 1인당 물소비량	3.27	-1
• 물재이용량	-7.94	-1
• 취수율	-3.23	1
• 4대강 수질오염도	5.66	-1
• 농어촌 하수도보급률	8.53	1
• 농약사용량	19.19	-1
• 화학비료사용량	0.37	0
• 산림지역 비율	-0.47	0
• 도시화율	0.90	-1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5.81	1
• 지하수오염기준치 초과율(관련 지표)	36.92	-2

평가



시사점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설비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은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달성된 과제이나 농어촌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있어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과제임.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의 절약과 재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추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폐수, 음식물쓰레기 등 농업 분야 이외의 부분들에 의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4대강 수질오염도와 외부 관련 지표인 지하수오염 기준치 초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하천 수질의 오염대책이 요구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화학물질 배출량
- 국민 삶의 질 지표: 하수도 보급률
- 기타 지표: 지하수오염 기준치 초과율

연관부서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Goal 7.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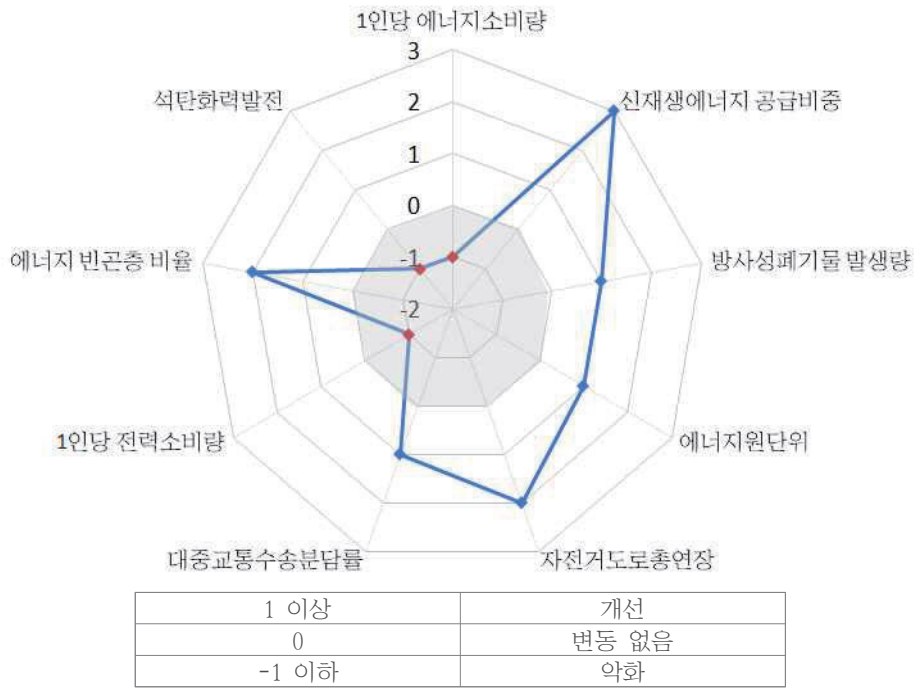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
-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효율을 두 배 향상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1인당 에너지소비량	1.6	-1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51.3	3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5.8	1
• 에너지원단위	-6.2	1
• 자전거도로 총연장	24.0	2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3	1
• 1인당 전력소비량	2.4	-1
• 에너지 빈곤층 비율	-36.8	2
• 석탄화력발전비율	12.3	-1

평가



시사점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 보장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행태에 대한 대응 과제가 있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중요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의 공급은 아직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큰 폭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국가주요지표인 석탄화력발전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부정적이지만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여 바람직함. 또한 국민 삶의 질 지표인 에너지빈곤층의 비율은 에너지 관련한 복지 지표로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바람직함.
- 지속가능한 교통 에너지관리의 수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자전거도로 총연장을 활용하여 세부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데 두 지표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긍정적임.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석탄화력발전비율, 1인당 전력소비량
- 국민 삶의 질 지표: 에너지빈곤층 비율

연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Goal 8. 일자리와 경제성장



UNSDGs 세부목표

-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
-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한다.
-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달성한다.
-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 8.7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해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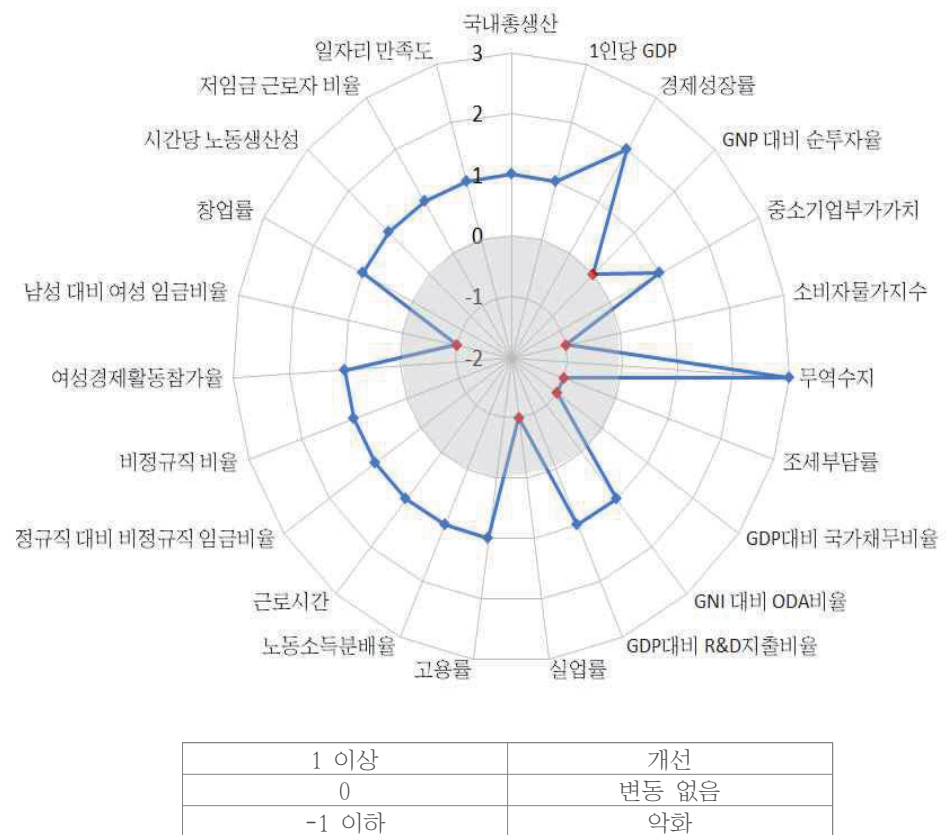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국내 총생산	19.2	3
• 1인당 GDP	13.4	2
• 경제성장률	21.7	3
• GNP 대비 순 투자율	0.3	0
• 중소기업 부가가치	6.8	1

국가지표

• 소비자 물가지수	4.3	-1
• 무역수지	216.1	3
• 조세부담률	3.7	-1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18.9	-2
• GNI대비 ODA비율	12.8	1
• GDP대비 R&D지출비율	5.2	1
• 실업률	15.6	-2
• 고용률	2.8	1
• 노동소득분배율	3.9	1
• 근로시간	-1.7	1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4.2	1
• 비정규직 비율	-1.2	1
•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5.6	1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0.6	-1
• 창업률	6.3	1
• 시간당 노동생산성	14.4	1
• 저임금 근로자 비율	-1.7	1
• 일자리 만족도	2.8	1

평가



시사점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등 경제여건을 진단하는 지표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등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 경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세부 목표 이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포용성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함.
- 경제의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과 양, 경제적 형평성을 진단하는 지표들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창업률, 시간당 노동생산성
- 국민 삶의 질 지표: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연관부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Goal 9. 산업화/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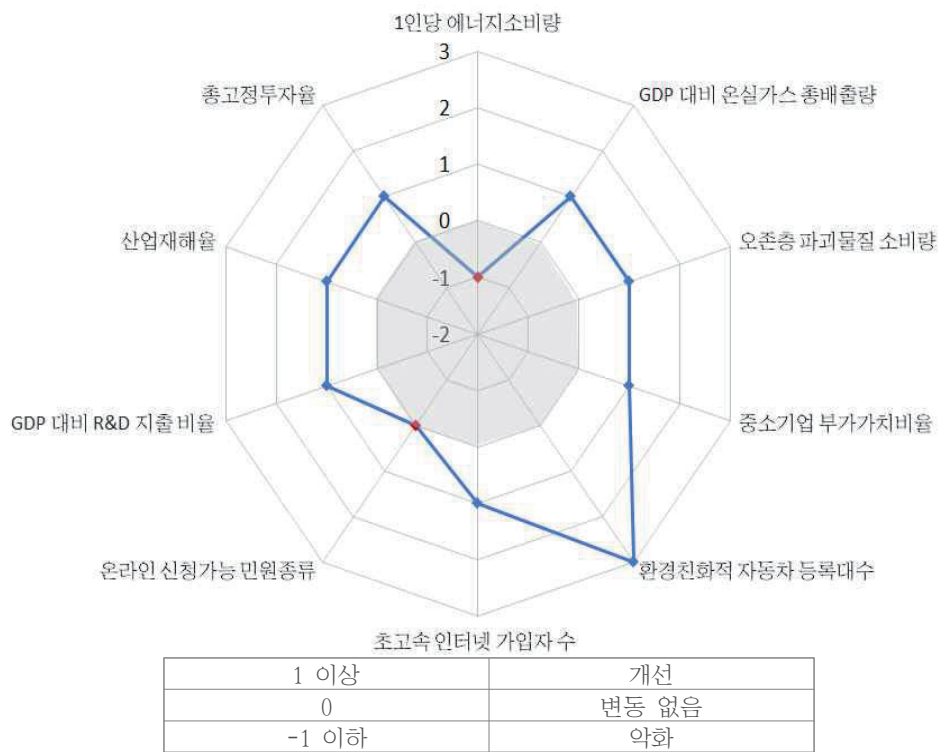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상당히 증대하며,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upgrade)하고 산업을 개편(retrofit)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한다.
- 9.5 과학 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 명 당 연구개발(R&D) 종사자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증가 등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향상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6	-1
• 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7.9	1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5.1	1
•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6.8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221.7	3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2.6	1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0.1	0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5.2	1
• 산업재해율	-16.9	1
• 총 고정투자율	5.2	1

평가



시사점

Goal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반면에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이 중요 과제임.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나 온라인 신청 민원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진단 지표로 설정되어 목표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산업화/혁신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의 도출이 과제임.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지표로 설정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세부목표를 충족하는 지표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발하여 설정하는 것이 과제임.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총 고정투자율
- 국민 삶의 질 지표: 산업재해율

연관부서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Goal 10. 불평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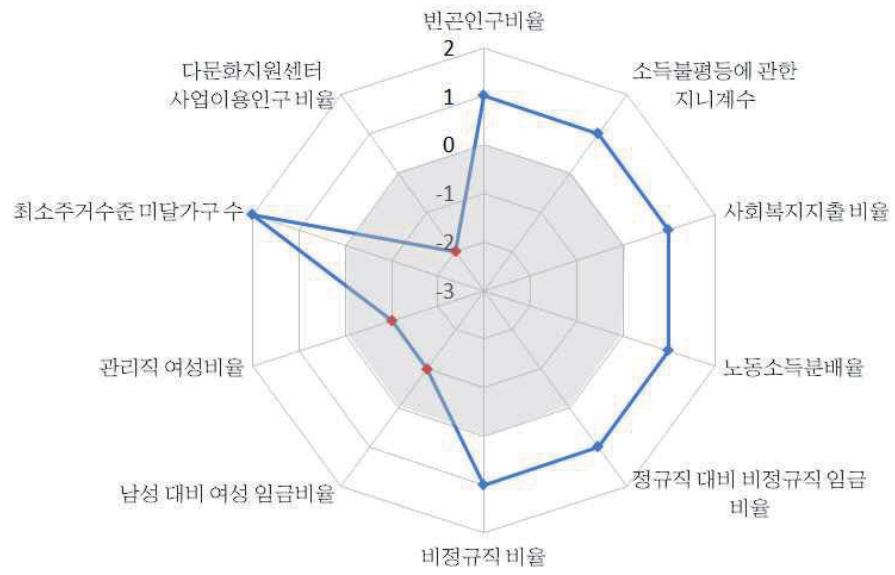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빈곤인구비율	-9.1	1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1.0	1
• 사회복지지출 비율	10.2	1
• 노동소득분배율	3.9	1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2	1
• 비정규직 비율	-1.2	1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0.6	-1
• 관리직 여성비율	-11.8	-1
•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25.0	2
•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이용인구 비율	-32.3	-2

평가



1 이상	개선
0	변동 없음
-1 이하	악화

시사점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불평등 관련 지표들은 주로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을 진단하는 지표들임.
- 나이,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에 관계없이 전 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진단하는 지표들을 설정해 목표로 관리하는 과제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관련지표

- 국민 삶의 질 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사회적 관계망, 독거노인 비율
- 기타 지표: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이용인구 비율

연관부서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Goal 11. 도시/공간



UNSDGs 세부목표

-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안전을 향상한다.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글로벌 국내총생산 대비 상당히 줄인다.
-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인다.
-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25.0	2
• 주택 수	6.6	1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9.8	-1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63.1	-3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3.4	1
• 도시화율	0.9	-1
• 수도권 인구 집중도	0.3	0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8.7	-1
• 폐기물 재활용률	1.5	1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3	1
• 자전거도로 총연장	24.0	2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221.7	3
• 빈곤인구비율	-9.1	1
• 주거환경만족도	3.7	1
• 화학물질 배출량	12.0	-1
•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8.6	1

평가



시사점

-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음. 특히 주택 수나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주거 실태를 진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 및 관리 정책이나 실태를 진단할 지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
 -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관리 등 도시 환경에 영향을 줄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주택임대료 비율 (소득 대비), 주거환경만족도, 화학물질배출량

연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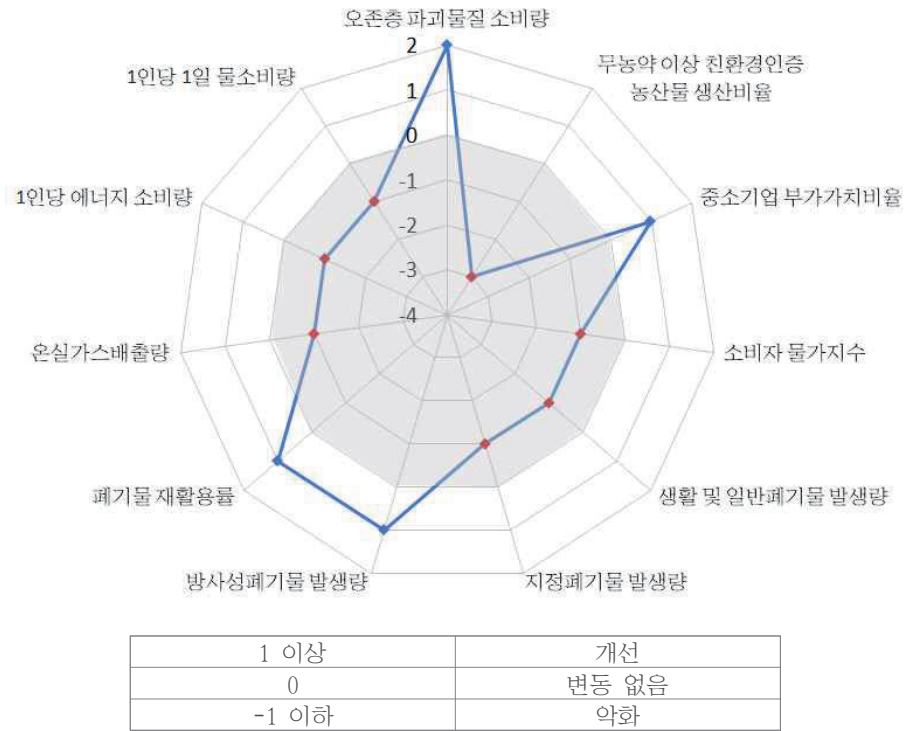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5.1	2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47.7	-3
•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6.8	1
• 소비자 물가지수	4.3	-1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8.7	-1
• 지정폐기물 발생량	10.3	-1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5.8	1
• 폐기물 재활용률	1.5	1
• 온실가스배출량	0.6	-1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3.6	-1
• 1인당 1일 물소비량	3.3	-1

평가



시사점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 에너지와 수자원 절약, 폐기물관리, 오존층보호,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등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국가 지표로서 관리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다수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함 .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화학물질 배출량
- 국민 삶의 질 지표: 균등화 증위소비

연관부서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Goal 13. 기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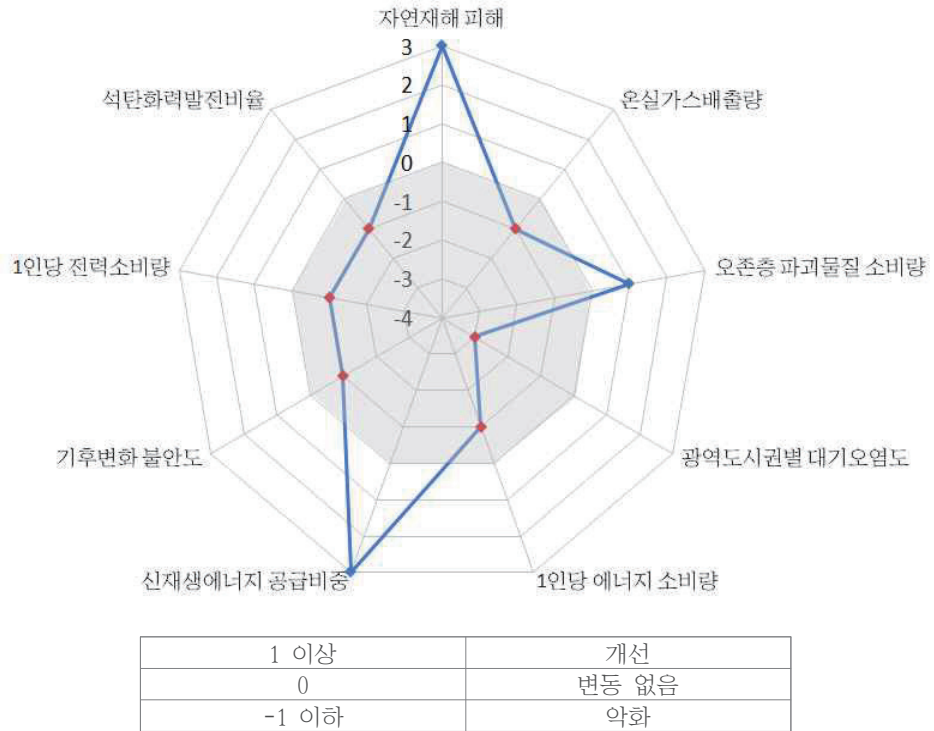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한다.
- 13.2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접수
• 자연재해 피해	-73.5	3
• 온실가스배출량	0.6	-1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5.1	1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63.1	-3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3.6	-1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51.3	3
• 기후변화불안도	0.6	-1
• 1인당 전력소비량	3.9	-1
• 석탄화력발전비율	11.9	-1

평가



시사점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기후변화에 관한 UN지속가능발전의 세부 목표는 주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관심인 기후변화의 실태나 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이 아님.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대기오염도, 에너지 소비량 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방안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의 추가 설정이 과제임.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석탄화력발전비율, 1인당 전력소비량
- 국민 삶의 질 지표: 기후변화 불안도

관련지표

-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농촌진흥청

Goal 14. 해양생태/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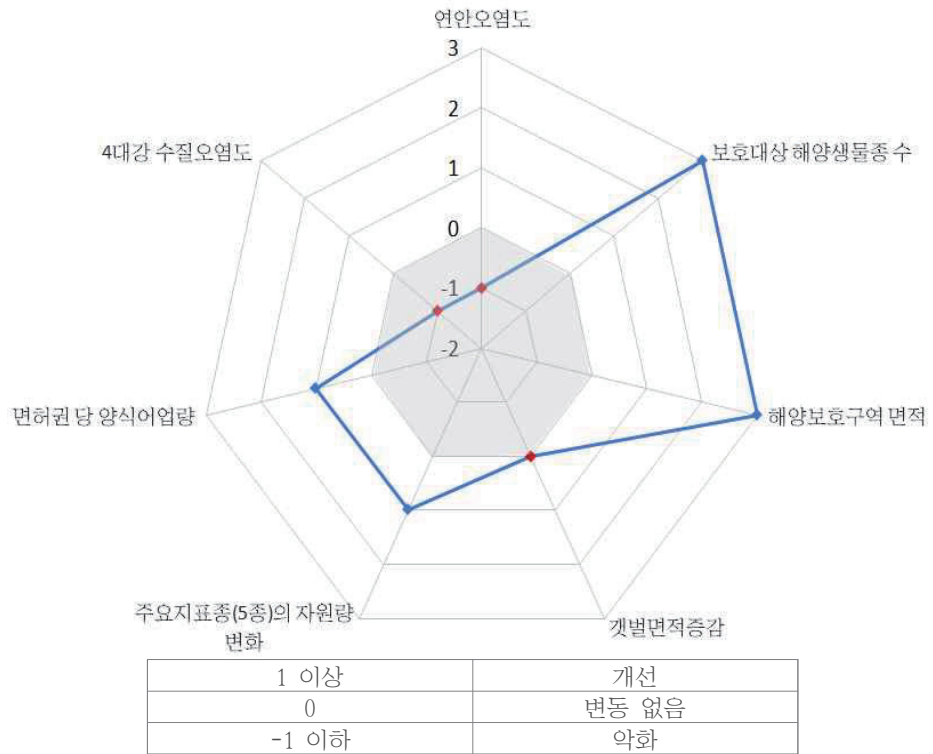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debris), 영양염류 오염 등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과 특히 육상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히 줄인다.
-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해양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을 위하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 14.3 모든 수준의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 14.4 2020년까지, 적어도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최대수확량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어류자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획과 파괴적 어획 관행을 종식시키고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해안 및 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한다.
-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같은 보조금의 신규 도입을 제한한다.
-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연안오염도(COD)	1	-1
•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67	3
• 해양보호구역 면적	60	3
• 갯벌면적증감	0	0
• 주요지표종(5종)의 자원량 변화	1	1
•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20	1
• 4대강 수질오염도	5	-1

평가



시사점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해양오염의 실태와 해양 주요 어종의 자원량 변화 등을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진단할 수 있으나 중요 이슈로 부각된 플라스틱이나 각종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의 문제 등은 관련 지표가 없어 진단하기 어려움.
- 연안 오염도와 4대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추세로 나타나 대응이 필요함.
- 해양 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할 지표가 부족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총 허용어획량 소진율

연관부서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Goal 15. 육상생태/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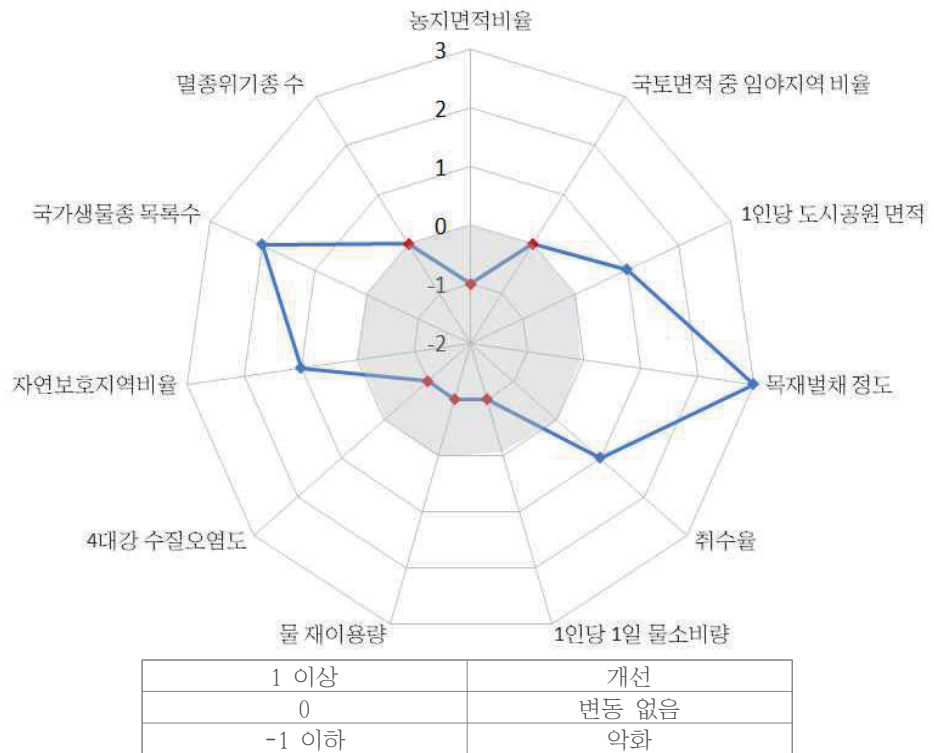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상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도모하고, 개발을 위한 산림 벌채를 중지시키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한다.
-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황폐화에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지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을 보장한다.
- 15.5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을 예방한다.
-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장려한다.
-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수요와 공급에 대응한다.
-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이며, 우점종(priority species)을 통제하거나 제거한다.
-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 계획, 개발 프로세스 및 빈곤감소 전략과 회계(accounts)에 통합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농지면적비율	-5.2	-1
•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0.5	0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3.4	1
• 목재벌채정도	-41.9	3
• 취수율	-3.2	1
• 1인당 1일 물소비량	3.3	-1
• 물 재이용량	-7.9	-1
• 4대강 수질오염도	5.7	-1
• 자연보호지역 비율	3.3	1
• 국가 생물종 목록 수	20.1	2
• 멸종위기종 수	0	0

평가



시사점

Goal 15: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임야지역 비율, 목재벌채 정도, 농지면적 비율, 4대강 수질오염도, 국가 생물종 목록 수, 멸종위기종 수 등의 다양한 지표들이 있음.
- 실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며, 산림 녹지, 하천 등 다양한 영역의 생물종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정책 관련한 진단 지표가 보완되어야 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산지타용도전환면적
-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감환경만족도

연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Goal 16. 평화/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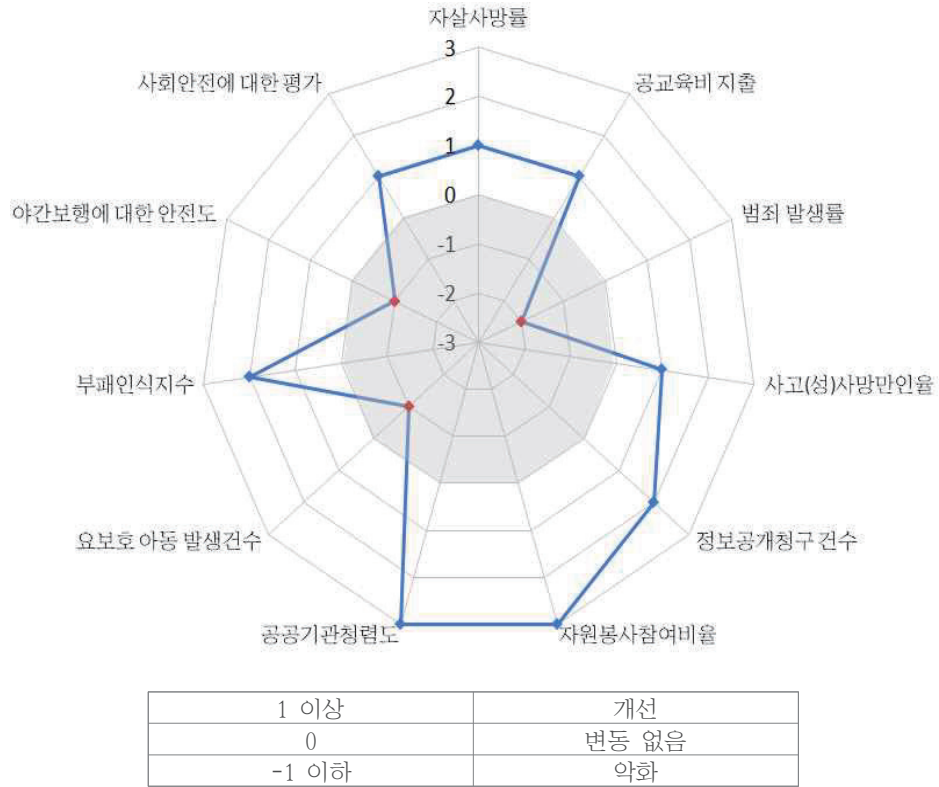
UNSDGs 세부목표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상당히 감소한다.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한다.
-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한다.
- 16.7 모든 수준에서 호응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한다.
-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자살사망률	-8.9	1
• 공교육비 지출	-23.9	-2
• 범죄 발생률	-2.3	1
• 사고(성)사망만인율	-27.4	2
• 정보공개청구건수	51.4	3
• 자원봉사참여비율	109.1	3
• 공공기관청렴도	-1.1	-1
• 요보호 아동 발생건수	-33.7	2
• 부패인식지수	-5.4	-1
• 야간보행에 대한 평가	5.1	1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4.4	-1

평가



시사점

Goal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지원,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부족함.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는 지표들인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정보공개청구와 공개비율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중에서 관련 지표인 부패인식지수, 사회단체참여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해 평가했을 때 이행도가 높은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부패인식지수, 사회단체 참여율
- 국민 삶의 질 지표: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기타 지표: 정보공개청구 건수, 요보호아동 발생건수, 공공기관청렴도

연관부서

-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Goal 17. 파트너십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UNSDGs 세부목표

-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한다.
-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할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자원 동원한다.
-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 17.7 상호 합의된 바, 양허 및 특혜조건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게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전파·확산을 증진한다.
-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형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남북·남남·삼각 협력 포함)을 강화한다.
- 17.10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 17.11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높이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율을 두 배 증가시킨다.
-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간명하며 시장접근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적시 이행을 실현한다.
- 17.13 정책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역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이 보완해주는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한다.
-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SD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증감률 (%)	점수
• GNI 대비 ODA 비율	12.8	1

시사점

Goal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관련 지표는 GNI 대비 ODA 비율 밖에 없음.
- OECD 회원국이자 과거 ODA 지원을 받은 나라로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함.
- 교육, 물, 여성, 에너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 당 기여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지표

- 국가주요지표: 공적개발원조 비율 (GDP 대비)

연관부서

- 외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제 5 장

국제지표 평가로 보는 한국 지속가능발전 현황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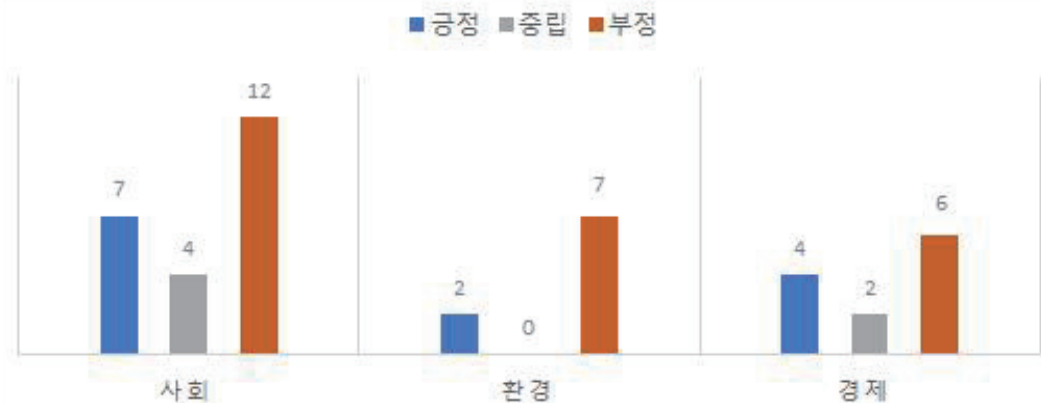


1. OECD 지표에 의한 비교 평가

- 지속가능발전지표 84개 중 비교 가능한 44개 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 평균과 비교분석하였음.
- 먼저, 사회분야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실업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비만율, 고등학교 순졸업률,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빈곤인구 비율, 사회복지 지출, 고용률,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관리직 여성비율, 자살 사망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등은 OECD 평균보다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 다음으로 환경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도, 취수량, 1인당 1일 물소비량 등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 반면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멸종위기종 수는 OECD 평균을 밑돌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 마지막으로 경제분야의 경우 경제성장률, GDP 대비 R&D 지출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인당 도시 폐기물 발생량은 평균보다 낮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그러나 국내총생산, 1인당 GDP, GNI 대비 ODA 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원단위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표 5-1〉 OECD 회원국 평균과의 비교 평가 (단위: 개, (%))

	사회		환경		경제		합계
긍정	7	(30.4)	2	(22.2)	4	(33.3)	13
중립	4	(17.4)	0		2	(16.7)	6
부정	12	(52.2)	7	(77.8)	6	(50.0)	25
합계	23		9		12		44



〈그림 5-1〉 OECD 회원국 평균과의 비교 평가 (단위: 개)

〈표 5-2〉 OECD 회원국과의 평균 비교

구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OECD	한국	비교
사회	01) 빈곤인구 비율(%)*	12 ('16)	14.7 ('16)	↓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 ('15)	0.3 ('15)	
	03) 사회복지 지출(%)	21.0 ('16)	10.4 ('16)	↓
	04) 노동소득분배율(%)*	54.6 ('15)	61.7 ('15)	
	05) 실업률(%)	6.5 ('16)	3.8 ('16)	
	06) 고용률(%)*	66.0 ('16)	65.0 ('16)	↓
	07) 근로시간(시간)*	146.9 ('16)	172.4 ('16)	↓
	09) 비정규직 비율	32.6 ('16)	34.2 ('16)	↓
	1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85.9 ('16)	63.3 ('16)	↓
	1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3.6 ('16)	58.4 ('16)	↓
	12) 관리직 여성비율(%)	31.2 ('16)	10.5 ('16)	↓
	14) 영아 사망률(명/천명)*	3.7 ('15)	2.7 ('15)	
	15) 자살 사망률(%)*	12.0 ('13)	29.1 ('13)	↓
	16) 기대수명(세)*	(여)83.1/(남)77.9 ('16)	(여)85.2/(남)79.0 ('16)	
	1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73.6 ('16)	59.2 ('16)	↓
	20) 비만율(%)*	19.4 ('15)	5.3 ('15)	
	21) 고등학교 순졸업률(%)	84.4 ('15)	93.0 ('15)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21.1 ('15)	23.4 ('15)	↓
	23)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4.4 ('14)	4.6 ('14)	↓
	24) 최소주거수준 미달가구 수(%)*	2.1 ('16)	4.2 ('16)	↓
	30) 인구 증가율(%)	0.55 ('13)	0.43 ('13)	↓
	31) 인구밀도(명/k㎡)	37.2 ('16)	515.2 ('16)	↓
	32) 고령인구비율(%)	16.6 ('16)	13.2 ('16)	
	환경	34)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톤)	12.3 ('14)	13.7 ('14)
35)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천\$당kg, 천)		0.33 ('14)	0.41 ('14)	↓
37) 대기오염도(PM2.5)(μg/m ³)*		12.3 ('16)	23.8 ('16)	↓
38) 농지면적 비율(%)		21.1 ('15)	16.8 ('15)	↓
39)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11.9 ('09)	5.0 ('17)	↓
43)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31.4 ('14)	63.5 ('14)	
54) 취수량 (m ³ , 백만)		18,076 ('14)	25,100 ('14)	↓
55) 1인당 1일 물소비량(L/인)(사용량기준)		256 ('10)	277 ('10)	↓
경제	61) 멸종위기종 수	1,678 ('18)	559 ('18)	
	62) 국내총생산(GDP(억US\$))	33,964 ('16)	18,721 ('16)	↓
	63) 1인당 GDP(명목, PPP)(\$)*	42,173 ('16)	27,607 ('16)	↓
	64) 경제성장률(%)	1.8 ('16)	2.8 ('16)	
	67) 소비자물가지수*	1.7 ('14)	1.3 ('14)	
	69) 조세부담률(%)	26.0 ('16)	19.4 ('16)	↓
	7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16.3 ('16)	38.3 ('16)	
	71) GNI대비 ODA 비율(%)	0.32 ('16) ¹⁾	0.16 ('16)	↓
	72)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인)	4.12 ('15)	5.64 ('15)	↓
	7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9.7 ('15)	1.7 ('15)	↓
	74) 에너지 원단위 (toe/천\$)*	0.130 ('14)	0.198 ('14)	↓
	75) 1인당 도시 폐기물 발생량 (kg)*	522 ('13)	358 ('13)	
84) GDP 대비 R&D 지출비율(%)	2.4 ('16)	4.24 ('16)		

1)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 OECD 자료출처 : OECD (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2017).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7,
OECD (2016).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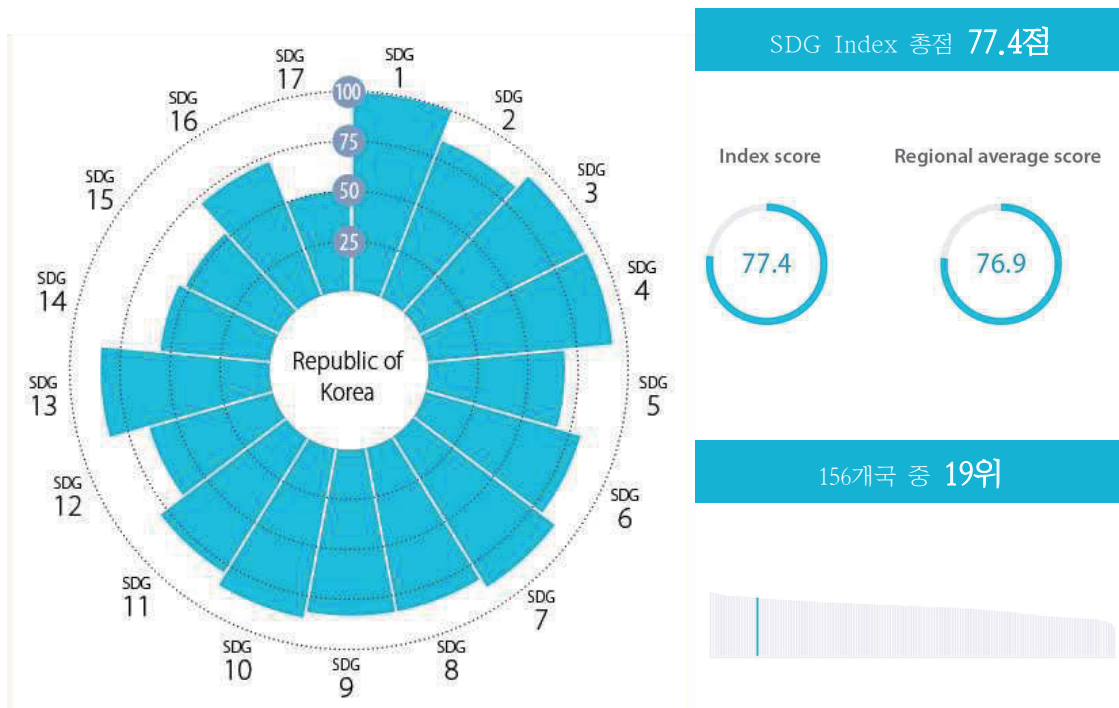
※ (*)는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도 및 수치의 차이가 있음(국내 지표 정의와 국제 지표 정의가 다른 경우 국제지표정의로 비교하거나, 유사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2. SDSN 보고서: SDG 지표와 대시보드 평가

-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는 매년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SDG 지표와 대시보드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 SDG Index 평가

- 2018년에는 156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SDG Index 평가 결과 총점 77.4점으로 19위를 차지하였음.
- 구체적인 SDG Index 값은 <표 5-3>과 같음.



<그림 5-2> 한국의 SDG Index 평가

자료: Sachs et al.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8.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표 5-3〉 한국의 SDG Index 평가 (2018)

구분	지표 (단위)	값	평가	추세 ¹⁾
SDG1 빈곤 퇴치	하루 1.90\$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 비율(%)	0.5	●	→
	2030년 예상 하루 1.90\$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 비율(%)	0.5	●	..
	세(稅)후 빈곤선 50% 미만의 인구 비율(%)	13.8	●	↗
SDG2 기아 종식	영양실조율(인구 %)	2.5	●	..
	5세 미만 발육 부진 아동 비율(%)	2.5	●	→
	5세 미만 체력저하 아동의 비율(%)	0.9	●	→
	성인 비만 비율(BMI≥30)(%)	4.7	●	→
	곡물생산량(t/ha)	6.8	●	→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 지수	0.6	●	..
SDG3 건강 웰빙	산모사망률(산모 10만명당)	11.0	●	→
	신생아사망률(신생아 천명당)	1.5	●	→
	5세 미만 사망률(%)	3.4	●	→
	결핵발병건수(인구 10만명당)	77.0	●	↗
	에이즈(HIV) 감염자수(천명당)	0.0	●	→
	30-70세중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연령대별 사망률(10만명당)	8.3	●	→
	실내공기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령대별 사망자 수(10만명당)	16.5	●	..
	교통사고 사망자수((10만명당)	12.0	●	↑
	출생 당시 건강수명기대치(년)	82.3	●	→
	미성년자 출산율(15-19세 여성 천명당)	1.7	●	→
	전문적인 의료인에 의한 출산율(%)	100.0	●	..
	2개 WHO추천백신 접종유아의 생존율(%)	98.0	●	→
	보편적인 의료보장 지수	81.6	●	↑
	주관적 웰빙 지수(단계 0-10)	5.9	●	↓
	지역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년)	2.4	●	..
	소득에 따른 자기 보고 건강 격차(0-100점)	11.9	●	..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	17.3	●	↑	
SDG4 교육의 질	초등교육 등록률(%)	96.8	●	↓
	평균교육기간(년)	12.2	●	↑
	15세-24세의 성별 문해율(%)	-	●	..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	46.9	●	→
	PISA점수(0-600)	519.0	●	..
	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과학 성과(%)	10.1	●	..
SDG5 성 평등	과학에서 2등급 미만의 성과를 보인 학생비율(%)	14.4	●	↓
	회복탄력적인 학생(우수한 학업성과 보이는 학생 중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학생 비율)(%)	40.4	●	..
	피임 권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	6.7	●	→
	25세 이상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교육기간 비율(%)	89.1	●	..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71.4	●	↑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17.0	●	→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임금 중위값 대비 %)	36.7	●	→	

1) 추세는 총 다섯 단계로 평가됨(↓: 악화, →: 정체, ↗: 적당한 수준으로 개선, ↑: 개선, →: 목표수준 또는 그 이상 수준 유지)

〈표 5-3〉 한국의 SDG Index 평가 (2018) (계속)

구분	지표 (단위)	값	평가	추세
SDG6 깨끗한 물과 위생	고소득국가: 안전하게 관리된 수도 서비스 (%)	98.0	●	→
	기타 국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식수 서비스(%)	-	●	..
	고소득국가: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시설 서비스(%)	98.5	●	→
	기타 국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위생시설 서비스	-	●	..
	담수 취수율(재생 가능 수원의 %)	57.6	●	..
	국제무역(농작물)으로 고갈되는 지하수 수량(m ³ /year/capita)	10.8	●	..
SDG7 사용가능한 청정에너지	전기보급률(인구 %)	100.0	●	→
	조리를 위한 청정 연료 및 기술 보급률(인구 %)	100.0	●	→
	연료 연소와 발전시의 CO ₂ 발생량(MtCO ₂ /TWh)	1.1	●	↑
	총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2.7	●	→
SDG8 일자리와 경제성장	GDP 성장률(%)	-0.5	●	..
	노예지수(0-100)	80.0	●	..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갖고 있거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15세 이상) 성인 비율(%)	94.9	●	→
	고용률(%)	66.6	●	→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	-	●	..
SDG9 산업화 혁신	인터넷 이용인구 비율(%)	92.8	●	→
	광대역통신망 가입자수(거주자 100명 중)	109.7	●	→
	인프라의 질적 평가(1=최하, 7=국제기준상 광범위하고 효율적임)	5.7	●	→
	물류성과지수(LPI)(교역·교통관련 인프라의 질 1-5)	3.8	●	..
	THE(Times Higher Education)평가, 상위3개 대학 평균점수(0-100)	61.7	●	..
	과학기술학회지 등재 논문 수(인구 천명당)	1.2	●	..
	R&D지출(GDP %)	4.2	●	..
	R&D연구원 수(천명당)	13.8	●	→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등록 건수(인구 백만명당)	53.0	●	→
	소득에 따른 인터넷 접근 격차(%)	13.0	●	..
SDG10 불평등 완화	과학 및 엔지니어링 학사 여성 비율(%)	24.0	●	..
	지니 계수(1-100)	32.3	●	..
	Palma 비율(상위10%소득/하위 40% 소득)	1.0	●	↑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노인 빈곤율(%)	45.7	●	..
	도시의 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 (µg/m ³)	28.7	●	↓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도시인구 대비)	-	●	..
	대중교통 만족도(%)	75.0	●	↑
SDG12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입대료 과다부담률(%)	3.5	●	..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량 (kg/인)	15.9	●	..
	생활하수처리율(%)	84.8	●	..
	생산 기반 SO ₂ 발생량 (kg/인)	14.5	●	..
	Imported SO ₂ 발생량	11.2	●	..
	반응질소생산발자국(kg/인)	33.9	●	..
	Imported 반응질소생산량(kg/인)	-	●	..
비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 발생량 (MSW kg/인/일)	0.5	●	..	

〈표 5-3〉 한국의 SDG Index 평가 (2018) (계속)

구분	지표 (단위)	값	평가	추세
SDG13 기후 행동	에너지 관련 1인당 CO ₂ 배출량(tCO ₂ /인)	11.6	●	↓
	imported CO ₂ 배출량(tCO ₂ /인)	-1.6	●	..
	기후변화취약성 지수(0-1, 0=best, 1=worst)	0.0	●	..
	화석연료 수출에 포함된 CO ₂ 배출량(kg/인)	0.8	●	..
	바이오매스 이외 비도료부문 에너지로부터의 효과적인 탄소율(%)	9.9	●	..
SDG14 해양생태· 자원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	26.8	●	..
	해양건강성지수-생물다양성(0-100)	94.8	●	→
	해양건강성지수-깨끗한 물(0-100)	64.0	●	↓
	해양건강성지수-어업(0-100)	50.7	●	↗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한 남획 또는 어장 붕괴(%)	7.0	●	..
SDG15 육상생태· 자원	저인망어업을 통해 포획한 어류(%)	45.1	●	→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자연보호구역 면적 비율(%)	36.6	●	→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수생태보호구역 면적 비율(%)	36.8	●	→
	생존 종의 레드리스트 지수(0-1)	0.8	●	↓
	임야의 연면적 변화(%)	3.5	●	..
SDG16 평화· 정의· 제도	외래종의 생물다양성 영향(소멸 종/백만명)	7.3	●	..
	살인율(10만명당)	0.7	●	..
	수감 인구(10만명당)	107.4	●	..
	도시나 거주지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69.0	●	↑
	정부 효율성(1-7)	3.5	●	↓
	재산권(1-7)	4.8	●	↓
	출생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 비율(연령별)(%)	-	●	..
	부패인식지수(0-100)	54.0	●	↓
SDG17 파트너십	아동노동을 하는 5-14세 아동 비율(%)	0.0	●	..
	주요 재래식 무기의 유통량(수출)(백만달러(1990년 환산), 10만명당)	0.6	●	..
	GDP 중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부 예산 지출 비율(%)	11.6	●	..
	고소득 국가와 OECD/DAC 회원국: ODA를 포함한 국제적 양허성 공적재정지원 (%GNI)	0.1	●	→
	기타 국가: GDP 대비 정부 세수(%)	-	●	..
조세회피처 지수(0-5, 0=best, 5=worst)	0.0	●	..	
금융비밀지수(0-100, 0=best, 100=worst)	59.0	●	..	

■ 대시보드 평가

- 대시보드 평가¹⁾에서는 17개 목표 달성 정도를 네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최상위 등급을 나타내는 녹색 등급을 받은 목표는 없었음.
- 반면 ‘5. 성 평등’, ‘13. 기후행동’, ‘17. 파트너십’은 최하위 등급인 적색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차상위 등급인 황색으로 평가된 목표는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4. 교육의 질’, ‘8. 일자리와 경제성장’,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였음.
- ‘3. 건강·웰빙’,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사용가능한 청정에너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완화’,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4. 해양생태/자원’, ‘15. 육상생태/자원’, ‘16. 평화/정의’는 최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주황색 등급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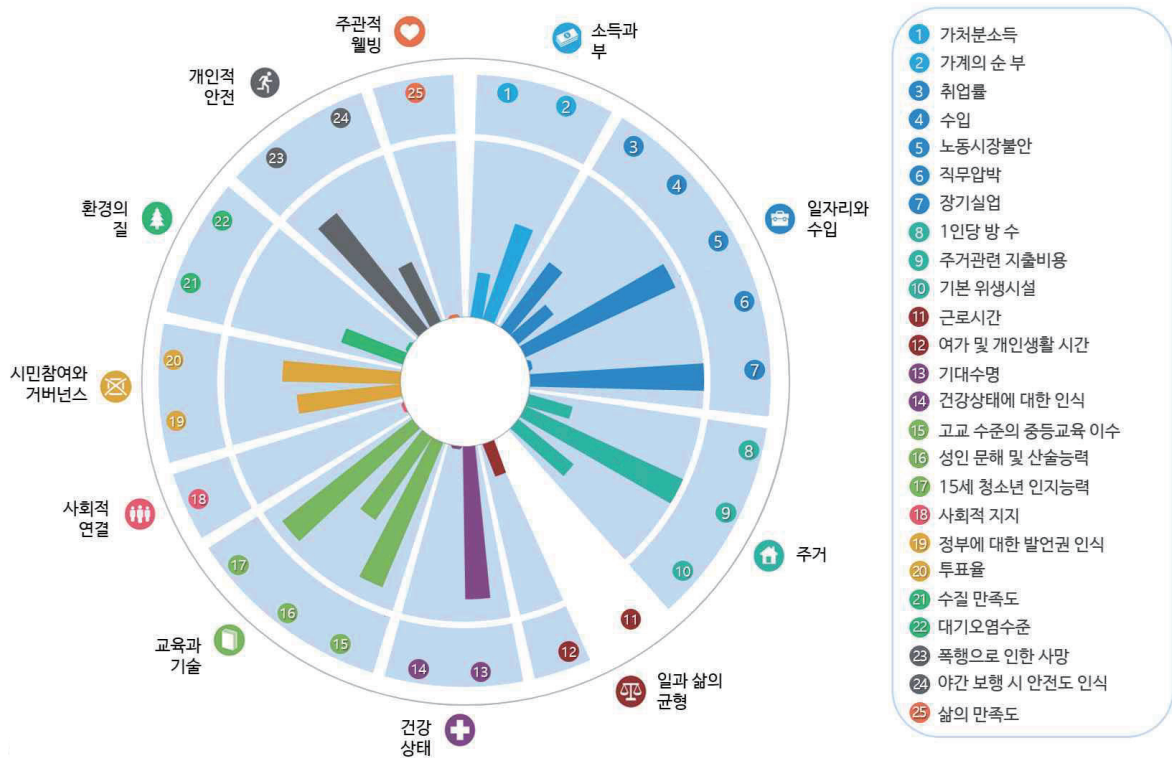
〈그림 5-3〉 한국의 대시보드 평가
(등급 평가: 좋은 순서부터 녹색)황색)주황색)적색 순)

자료: Sachs et al.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8.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¹⁾ 대시보드 평가는 각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동을 취하여야 할 목표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때문에 각 목표의 여러 하위지표들 가운데 각국이 가장 나쁜 성과를 보이는 두 지표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네 개의 등급(좋은 순서부터 녹색)황색)주황색)적색)을 부여함(Sachs et al., 2018: 42-43).

3. OECD Better Life Index 비교 평가

- 지속가능발전은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삶의 질에 대한 국제지표인 OECD Better Life Index를 통해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국제 비교하고자 함.
- OECD Better Life Index는 ① 소득과 부 ② 일자리와 수입 ③ 주거 ④ 일과 삶의 균형 ⑤ 건강 상태 ⑥ 교육과 기술 ⑦ 사회적 연결 ⑧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⑨ 환경의 질 ⑩ 개인적 안전 ⑪ 주관적 웰빙 등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됨.
- <그림 5-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결,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육은 대체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5-4> 한국의 평균적인 웰빙 수준: OECD평균 대비 상대적 강점 및 약점
 자료: OECD. (2017). *How's Life 2017*, pp.262-264.

〈표 5-4〉 OECD Better Life Index: OECD 회원국과의 평균 비교

구분	지표 (단위)	OECD	한국	비교
소득과 부	1인당 순 가처분 소득(조정)(\$)	30,620	21,723	↓
	가계의 순 부(\$)	331,132	273,867	↓
일자리와 수입	취업률(%)	67.1	66.1	↓
	상근 직원의 연간 평균 총 수입 (\$)	44,290	32,399	↓
	실업으로 인한 수입 예상 손실율(%)	4.9	2.4	
	직무압박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	36.9	51.6	↓
	장기(1년 이상) 실업률 (%)	2.0	0.0	
주거	1인당 방(rooms) 수 (개)	1.8	1.4	↓
	가처분 소득 중 주거 관련 지출 비율 (%)	19.0	15.2	
	기본위생시설이 없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 비율(%)	2.1	4.2	↓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 (%)	12.6	자료 없음	-
	상근 근로자가 하루 중 여가 및 개인생활에 쓰는 시간 (시간)	14.9	14.7	↓
건강 상태	신생아의 기대 수명(년)	80.1	82.1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응답한 성인 비율 (%)	68.7	32.5	↓
교육과 기술	고교 수준의 중등교육 이수한 성인 비율(%)	74.5	86.9	
	16-65세 인구의 읽고 쓰는 능력 및 산술능력 평균	263	268	
	15세 청소년의 인지능력(독해, 수학, 과학 평균 점수) (점)	486	519	
사회적 연결	어려운 때 믿을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88.6	75.9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	32.8	37.0	
	투표율(%)	68.6	77.2	
환경의 질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80.8	77.8	↓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대기오염 수준 (µg/m³)	13.9	27.9	↓
개인적 안전	인구 십만 명 중 폭행으로 인한 사망 비율 (%)	3.6	1.1	
	야간 중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비율 (%)	68.6	63.9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0-10점)	7.3	5.9	↓

※ 자료: OECD. (2017). How's Life? 2017. pp.28-29

4.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1)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OECD회원국 평균과 비교하고, 2) SDG Index 및 대시보드와 3) OECD Better Life Index의 한국 평가결과를 검토하였음.
- 비교결과 공통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 부문에서는 영아사망률이나 비만율과 같은 보건 관련 지표, 고등학교 순졸업률이나 문해율 및 산술능력 등 교육 관련 지표, 살인율이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 등 치안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둘째,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장기)실업률, R&D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그러나 환경 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표나 분야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환경 부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시간, 여가 및 개인생활 시간, 직무 압박 등 일 문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관리직 여성비율이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 성 평등 관련 지표들 역시 공통적으로 부정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임. 사회적 지지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 자살 사망률 역시 공통적으로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보임.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지표들도 공통적으로 부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관련하여 개선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제 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 평가를 받은 지표들을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SDSN의 SDG Index의 경우 저개발 국가들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열위를 보이는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환경분야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이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원단위 등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부정 평가를 받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